

주요국 예산안 2013

2013. 2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승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강민채·박신아·이정은 (총론)

황보경 (캐나다)

서주영 (일본)

하에스더 (프랑스)

김은숙 (독일)

김진아 (영국)

김선미 (호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2. 세계 재정 전망	9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22
1. 캐나다 (FY2012-13: 2012.4 ~ 2013.3)	25
2. 일본 (FY2013: 2013.4 ~ 2014.3)	27
3. 프랑스 (FY2013: 2013.1 ~ 2013.12)	30
4. 독일 (FY2013: 2013.1 ~ 2013.12)	32
5. 영국 (FY2013-14: 2013.4 ~ 2014.3)	34
6. 호주 (FY2012-13: 2012.7 ~ 2013.6)	36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캐나다	41
1. 경제 및 재정 전망	45
가. 경제 전망	45
나. 재정 전망	46
2. 예산기조(Budget 2012)	48
3. 예산안 내용	50
가. 세입	50
나. 세출	52

4. 주요 재정정책	56
가. 재정건전화	56
나. 경기부양책	59
다. 기타	60
II. 일 본	62
1. 경제 및 재정 전망	66
가. 경제 전망	66
나. 재정 전망	68
2. 예산기조	69
3. 예산안 내용	71
가. 세입	71
나. 세출	73
4. 주요 재정정책	78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78
나. 재정건전화	79
III. 프랑스	84
1. 경제 및 재정 전망	88
가. 경제 전망	88
나. 재정 전망	88
2. 예산기조	92
3. 예산안 내용(PLF 2013)	94
가. 세입내역	94
나. 세출내역	96
4. 주요 재정정책	99
가. 재정건전화	99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00

IV. 독 일	102
1. 경제 및 재정 전망	106
가. 경제 전망	106
나. 재정 전망	107
2. 예산기조	111
3. 예산안 내용	113
가. 재정수입	113
나. 재정지출	114
4. 주요 재정정책	118
가. 재정건전화	118
나. 에너지 정책	121
V. 영 국	122
1. 경제 및 재정 전망	125
가. 경제 전망	125
나. 재정 전망	126
2. 예산기조	128
3. 예산안 내용	130
가. 세입	130
나. 세출	133
4. 주요 재정정책	137
가. 재정건전화	137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39
VI. 호 주	140
1. 경제 및 재정 전망	143
가. 경제 전망	143
나. 재정 전망	144

2. FY2012-13 예산기조	146
3. 예산안 내용	149
가. 세입내역	149
나. 세출내역	152
4. 주요 재정정책	155
가. 재정건전화	155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58
다. 광산세 수입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159

표목차

1부 총론

<표 I-1> IMF의 시기별 세계경제 전망(실질 GDP 성장률)	4
<표 I-2> 세계경제 전망	5
<표 I-3>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IMF)	11
<표 I-4> 2009년 이후 세입 및 세출 조치	13
<표 I-5>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OECD)	14
<표 I-6>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EU)	16
<표 I-7> 2011~2060년 국가별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전망	21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22
<표 II-2> 2013년 재정 전망	23
<표 II-3> 캐나다 경제 전망(2012년 11월 기준)	25
<표 II-4> 캐나다 재정 전망(2012년 11월 기준)	25
<표 II-5> 캐나다 FY2012-13 경기부양 예산	27
<표 II-6> 일본 경제 전망	28
<표 II-7> 일본 주요 재정지표	28
<표 II-8> 프랑스 2012~2017년 경제 및 재정 전망	30
<표 II-9> 독일 경제 전망	32
<표 II-10> 독일 재정 전망	32
<표 II-11> 영국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35
<표 II-12> 호주 경제 전망	37
<표 II-13> 호주 재정 전망	37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캐나다 경제 전망(2012년 11월 기준)	46
<표 I-2> 캐나다 재정 전망(2012년 11월 기준)	47
<표 I-3> 세입 전망	51
<표 I-4> 프로그램지출 전망	54
<표 I-5> 추경예산 편성내역	55
<표 I-6> 부처별 지출 절감 계획	57
<표 I-7> FY2012-13 시장채무(Market Debt)	58
<표 I-8> 캐나다 FY2012-13 경기부양 예산	59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67
<표 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68
<표 II-3> FY2013 예산의 개선 요구 기준	69
<표 II-4> FY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71
<표 II-5> FY2013 조세 및 인지수입	72
<표 II-6> FY2013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74
<표 III-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88
<표 III-2> 프랑스 2012~2017년 재정 전망	89
<표 III-3> 2012~2017년 재정수지 전망	90
<표 III-4> 2012~2017년 부채비율 전망	91
<표 III-5> 프랑스 FY2013 예산안	93
<표 III-6> FY2013 세입 전망	94
<표 III-7> 주요 세제개편 현황	95
<표 III-8> 2012~2013년 미션별 세출 내역	97
<표 III-9> 201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	98
<표 III-10> 2012~2017년 사회보장 지출 목표	98
<표 IV-1> 기관별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07
<표 IV-2> 중기재정계획(2012~2016)	108
<표 I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108
<표 IV-4> 기관별 연방정부 부채 규모 전망	109
<표 IV-5> FY2012 추경예산 추이	110

<표 IV-6> FY2012 잠정결산	112
<표 IV-7> 재정수입의 항목별 규모	113
<표 IV-8>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추이	114
<표 IV-9>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18
<표 IV-10> 재정적자 감축계획	120
<표 IV-11>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121
<표 V-1> 2012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125
<표 V-2> 영국 경제 전망	126
<표 V-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128
<표 V-4> 2012년 가을보고서 정책 효과	129
<표 V-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130
<표 V-6> 경상세입 전망	132
<표 V-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134
<표 V-8> 총관리지출 전망	136
<표 V-9>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138
<표 V-10>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변화	138
<표 V-11> Capital Package 투자 규모	139
<표 VI-1> 주요 경제변수	143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45
<표 VI-3> FY2012-13부터 FY2015-16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148
<표 VI-4> FY2012-13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149
<표 VI-5> FY2012-13 예산안의 재정수입 전망	150
<표 VI-6>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151
<표 VI-7>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151
<표 VI-8> FY2012-13 예산안과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152
<표 VI-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54
<표 VI-10>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156
<표 VI-11> 주요 예산절감 계획	157
<표 VI-12> 광산 붐 패키지	161

그림목차

1부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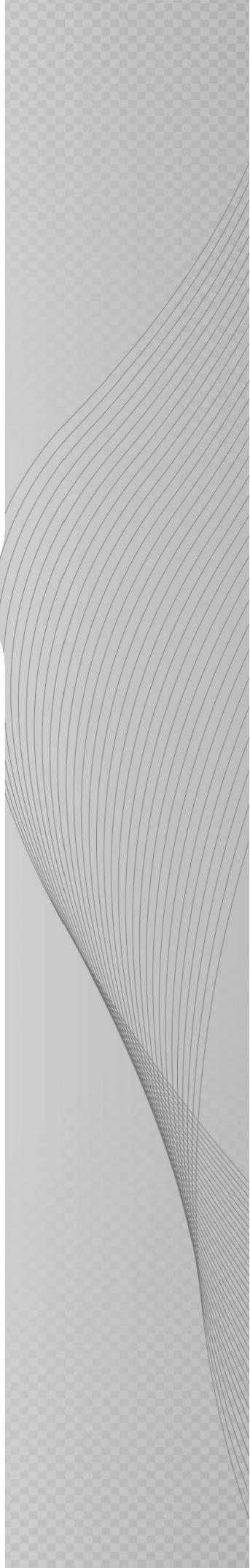
[그림 I-1] EU 경제성장률 및 구성	5
[그림 I-2] 국가그룹별 경기조정재정수지(CAB) 회복 전망 국가 수	10
[그림 I-3] 2013~2014년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	15
[그림 I-4] EU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16
[그림 I-5] 2060년 세계 GDP 구성비	20
[그림 I-6] 향후 50년간 세계 GDP 구성비율의 변화	20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전망(2017년 기준)	48
[그림 I-2] 정부 재정수지 전망	56
[그림 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81
[그림 III-1]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	90
[그림 III-2] 국가채무 전망	91
[그림 III-3] 긴축예산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과정	92
[그림 III-4] 2013년 재정지출 감축 내역	100
[그림 I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갭 변화 추이	111
[그림 IV-2] 구조적 재정적자 추이	112
[그림 IV-3] 2013년 예산 대비 분야별 지출	117
[그림 V-1] FY2013-14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	133
[그림 V-2] 총관리지출(TME)의 구성 변화	135
[그림 V-3] FY2013-14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 규모	137
[그림 VI-1] FY2022-23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46
[그림 VI-2] FY2012-13 예산안의 재정수입 내역	150

[그림 VI-3]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배분	154
[그림 VI-4] FY2012-13 흑자재정 달성-예산수지변화	155
[그림 VI-5] 결손금소급공제 수혜 예상 기업 수	158
[그림 VI-6] 호주 중소 기업체 현황	159
[그림 VI-7] 2013 가족세제혜택 파트A의 증가	160
[그림 VI-8] 학자녀 보너스 혜택	160

제 1 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¹⁾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10)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 침체를 전망하였고, WEO Update(2013.1)는 유로지역의 더딘 회복과 미국의 재정 감축에 따른 리스크 존재로 인해 기존 전망치보다 부정적으로 전망
 - WE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2년 7월 전망치(2012년 3.5%, 2013년 3.9%)에 비해 하향 조정되어 2012년 3.3%, 2013년 3.6%로 전망
 - (선진국) 2013년 경제성장률은 1.5%, 2012년 7월 전망치 1.8%에 비해 하향 조정
 - (신흥경제국)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5.6%로 2012년 7월 전망치(5.8%)에 비해 하락
 - WEO Update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12년 10월 WEO 보고서의 전망치(3.6%)에 비해 다소 낮아진 3.5%로 전망, 2014년 성장률도 지난 보고서의 전망치(4.2%)보다 0.1%p 하락한 4.1%로 조정

1)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3.1), IMF Fiscal Monitor Update(2012.10), OECD Economic Outlook No.92(2012.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2012.11)을 발췌한 것임

<표 I -1> IMF의 시기별 세계경제 전망(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WEO Update 전망 (2012.7)		WEO 전망 (2012.10)		WEO Update 전망 (2013.1)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4
선진국	1.4	1.8	1.3	1.5	1.3	1.4	2.2
미국	2.0	2.3	2.2	2.1	2.3	2.0	3.0
유로지역	-0.3	0.7	-0.4	0.2	-0.4	-0.2	1.0
일본	2.4	1.5	2.2	1.2	2.0	1.2	0.7
캐나다	2.1	2.2	1.9	2.0	2.0	1.8	2.3
신흥경제국	5.6	5.8	5.3	5.6	5.1	5.5	5.9
중국	8.0	8.5	7.8	8.2	7.8	8.2	8.5
인도	6.1	6.5	4.9	6.0	4.5	5.9	6.4
세계	3.5	3.9	3.3	3.6	3.2	3.5	4.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2.7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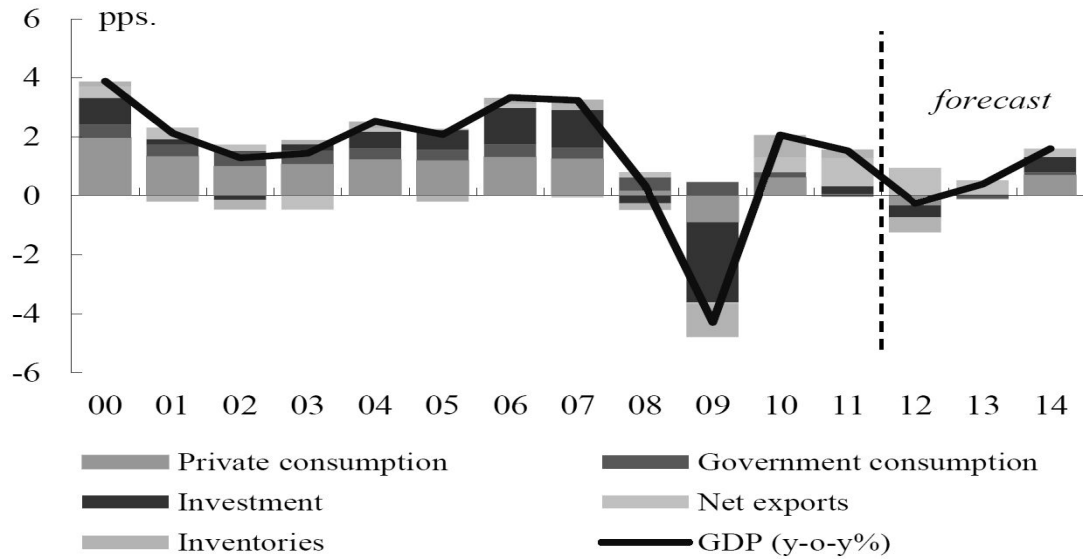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3.1

- OECD Economic Outlook(2012.11)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으로 회복이 더디고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3년 3.4%, 2014년 4.2%로 전망
 - OECD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4%로 완만하고, 2014년에는 2.3%로 전망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0.1%로 침체 지속, 2014년에는 1.3%로 전망
 - 세계 경제발전의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의 위기 심화, 미국의 재정긴축, 부채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합의 실패 등이 있음

-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2012.11)에 따르면 계속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악화 상황을 반영하여 EU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5월 전망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계속되는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약화되어 2012년 하반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진적인 회복은 2013년으로 연기될 전망
 -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과 EU 전체가 각각 0.4%, 0.1%로 마이너스 (-) 성장에서 벗어날 것이며 2014년에는 점차 회복되어 각각 1.4%, 1.6%를 기록할 전망

- 순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물기는 2012년 중 소폭 상승 후 2013~2014년에 2% 이내 안정,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나 2013년에 실업률이 정점에 달한 이후 2014년 소폭 개선될 전망

[그림 I-1] EU 경제성장률 및 구성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

<표 I-2>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실질 GDP(IMF 전망)				실질 GDP(OECD 전망)				실질 GDP(EU 전망)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미국	1.8	2.3	2.0	3.0	1.8	2.2	2.0	2.8	1.8	2.1	2.3	2.6
유로지역	1.4	-0.4	-0.2	1.0	1.5	-0.4	-0.1	1.3	1.4	-0.4	0.1	1.4
일본	-0.6	2.0	1.2	0.7	-0.7	1.6	0.7	0.8	-0.8	2.0	0.8	1.9
캐나다	2.6	2.0	1.8	2.3	2.6	2.0	1.8	2.4	2.4	2.0	2.1	2.2
중국	9.3	7.8	8.2	8.5	9.3	7.5	8.5	8.9	9.2	7.7	7.7	7.8
인도	7.9	4.5	5.9	6.4	6.9	4.4	6.5	7.1	7.2	5.0	5.8	6.6
세계	3.9	3.2	3.5	4.1	3.7	2.9	3.4	4.2	3.8	3.1	3.3	3.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3.1

OECD, Economic Outlook No. 92, 2012.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

- IMF의 주요국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12.10)
 - (미국과 캐나다) 2012-13년 총수요를 억제하는 불확실성과 낮은 대외수요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전망됨
 - (유럽 국가) 유로지역 주변국의 금융스트레스(financial stress)는 증가하였고 유로지역 주변국의 경제 불황은 다른 유로지역에 영향을 끼침
 - 유로지역에서 2012년 실질 GDP는 0.5%만큼 감소하며 2013년에는 0.25%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2012년 상반기 아시아의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2012년 5.4%, 2013년 5.8%로 전망
 - (중국) 경제는 2010-11년에 시행된 긴축정책에 적응하면서 2012년 2분기에 성장이 더욱 부진하였고, 경제성장률은 국내수요의 증가와 정책완화(policy easing)로 인해 2012년 7.8%에서 2013년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도) 경제성장률은 투자에 대한 억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지난 4월보다 1% 하향 수정된 2012년 5%에서 2013년 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1년의 지진과 쓰나미, 2011년 10월의 홍수로 인한 재건 활동과 제조업의 회복으로 2012년 2.2%가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다시 성장이 쇠퇴되어 2013년 1.2%로 전망
 - (한국)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민간 투자의 증가로 인해 2012년 2.7%에서 2013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MF의 주요국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3.1)
 - (선진국) 2012-1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4%로 전망되며, 이는 2012년 10월 전망보다 0.2%p 악화된 수치
 - (미국) 2013년 경제성장률을 2.0%('12년 10월 보고서 대비 △0.1%p)로 전망
 - 재정지원과 주택시장의 호전으로 가계수지가 개선되었으며 이는 2013년 소비 향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과도한 재정 감축은 피하고 재정 지원 혜택과 조세개혁에 중점을 둔 중기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필요

- (유로) 당해 연도 경제성장률은 -0.2% ('12년 10월 보고서 대비 $\Delta 0.3\%p$)로 전망됨
 -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대응 지연과 위험해결 불확실성 존재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함
 - 유럽지역의 계속된 stagnation의 위험은 개혁의 가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유럽 은행 동맹과 재정통합 등의 조치가 필요
 - (일본) '13년 경제성장률은 '12년 10월 WEO 보고서의 예측과 동일한 1.2% 로 전망됨
 - 경기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개도국) 2012-13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5% 로 전망
 - (중국) '13년 경제성장률은 8.2% 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구조개혁과 개인소비 부문 진작을 통한 경제 재조정이 필요
 -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 국내외적으로 어려움하에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
-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2012.11)
-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2.0% , 2014년 2.8% 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됨
 - 노동시장 개선, 가계저축률 감소, 채무상태 개선, 주택시장 회복으로 인한 투자증가 등에 기인함
 - (유로지역)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0.1% , 2014년 1.3% 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상황 개선, 디레버리징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 감소, 재정건전화 완화 시 신뢰도 제고 등으로 인한 점진적인 경기회복 가능
 - 실업률 상승(12% 이상)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지속적 악화, 마이너스 산출갭(output gap)의 확대 등으로 인해 2014년 후반까지 추세선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일본) 수출회복, 체감경기 개선 등을 통하여 2013년 초반 상승이 기대됨
 - 복구지출 감소로 인한 내수 감소,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됨

- (신흥국) 주요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2014년까지 9% 이하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는 2013년 약 6%, 2014년 7%로 성장세 지속 전망
 - 브라질, 러시아의 성장률은 연평균 4% 정도로 전망

- EU의 주요국 경제 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2.11)
 - (미국)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3%, 2014년은 2.6%로 소폭 상승할 전망
 - 2013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재정건전화 약화와 3차 양적완화(QE3)의 긍정적 효과로 2012년 5월 전망인 2.1%에서 소폭 상향 조정된 2.3%를 기록할 전망
 - 세계경제 및 무역의 개선과 국내 시장(주택, 노동시장)의 발전으로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소폭 상승할 전망
 - (일본)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2년 2.0%보다 하락한 0.8%로 약화될 전망
 - 수입 상승의 자율적 요소의 부재와 2014년 4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전기 이행에 대한 기대가 2013년 성장을 지원할 것
 - (중국)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2014년에 각각 7.7%, 7.8%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하락,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소비지출의 급속한 둔화를 방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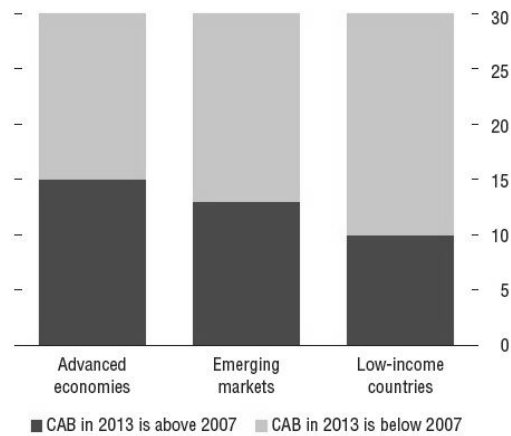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2.10)에 따르면 2013년 실업률의 전망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상이하며, 인플레이션은 감소할 전망이다
 - (실업률)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경제발달 정도가 많이 다르지만 2012-13년에 세계 실업률은 6.25%를 유지함
 - 신흥개발도상국의 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선진국(2013년 8.1% 전망)의 실업률은 높은 상태임
 - (인플레이션) 상품가격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할 경우, 선진국의 경기가 부진하여 인플레이션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낮은 상품가격으로 인해 2012년 7월 이후로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는 1.5% 감소하였지만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1.5%로 안정세임
- 신흥개발도상국의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는 2012년 2분기의 5.5%보다 아래인 2%p 감소하였고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더 적게 감소
- 선진국의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는 1.75%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전망이며 신흥개발도상국의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는 회복할 전망

2. 세계 재정 전망

- IMF Fiscal Monitor(2012.10)는 적자감축 측면에서 각 국가들의 재정건전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
 - 상당수 국가들의 2013년 경기조정재정수지 적자수준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중 약 50% 국가들의 2013년 경기조정재정수지는 2007년 수준보다 개선될 전망
 - 개발도상국의 경우 약 40% 국가의 기초재정수지가 2007년 수준보다 개선될 전망
 - 후진국의 약 3분의 1이 2007년보다 경기조정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그림 I-2] 국가그룹별 경기조정재정수지(CAB) 회복 전망 국가 수



주: 2013년 경기 조정재정수지(CAB)가 2007년보다 높은(낮은) 수준인 국가의 수를 아래(위)에 표시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2.10

- (전망 및 대응) 적자 감축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진국의 재정 전망은 다소 불안정
 - 대부분 선진국의 재정 전망이 불안정한 이유는 재정 취약성(fiscal vulnerabilities)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적인 연금 관련 지출의 증가가 원인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 조정(fiscal adjustment)은 장기적 측면에서 조정될 필요
 - 재정 조정(fiscal adjustment)기간 동안 ‘소득불균형’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 및 장기 고용 지원과 동반되어야 함

- (부채비율) 선진국들 대부분의 적자 감축이 아직 부채비율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양상으로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비해 부채비율 감소한 비중이 낮음
 - 부채비율의 개선은 국가별로 상이
 - (선진국) 몇몇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큰 규모의 선진국 경제는 부채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
 - (개도국) 2011년에 개도국 중 60% 국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이는 이전의 경기침체 회복 속도보다 빠른 편
 - (저소득국가) 공격적 투자 계획 등이 종종 부채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채비율 회복 양상이 더욱 국가별로 상이

<표 I-3>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IMF)

(단위: GDP 대비 %)

	2010	2011	2012 전망	2013 전망
재정수지				
선진국	-7.8	-6.6	-5.9	-4.9
미국	-11.2	-10.1	-8.7	-7.3
일본	-9.4	-9.8	-10.0	-9.1
유로지역	-6.2	-4.1	-3.3	-2.6
개발도상국	-3.2	-1.8	-1.9	-1.8
저소득국가	-2.0	-1.9	-3.4	-3.1
세계	-6.0	-4.6	-4.2	-3.5
국가부채				
선진국	101.4	105.5	110.7	113.6
미국	98.6	102.9	107.2	111.7
일본	215.3	229.6	236.6	245.0
유로지역	85.4	88.0	93.6	94.9
개발도상국	40.5	37.0	34.8	33.1
저소득국가	42.8	41.1	42.5	41.8
세계	79.7	79.9	81.3	81.5

주: 재정수지(Actual balances) 및 부채(liabilities)는 명목 GDP 대비 비중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2.10

- (세출·세입 및 제도적 개혁) 재정건전화 정책은 주로 잠재적 성장률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국가별 세부 조치 내용은 <표 I-4>를 참고
- (선진국) 대부분 고세율 국가이기 때문에, 60%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입 증대 보다는 지출 부문을 조정²⁾
 - (개도국) 약 3분의 1만이 지출에 제한을 두었으며, 이는 개도국의 야심찬 투자와 높은 유가 등에 기인
 - (지출 개혁) 지출부문의 개혁은 주로 의료제도의 개혁, 공공부문 임금 삭감, 공공투자 축소 등
 - (의료제도 개혁) 의료 지출의 삭감은 단기적 영향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세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함

2) 미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음

- (임금 삭감)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임금(public wage bill)을 2010-12년도 잠재적 GDP(potential GDP)의 약 2분의 1 정도 삭감
- (공공 투자 축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대규모의 공공 투자 삭감 진행
- (세입 개혁) 세입부문에서 선진국은 주로 간접세와 재산세 부문을 조정하였고, 선진국 및 개도국 대부분이 소비세 및 누진 정도를 높임
 - 유럽 국가들은 VAT를 인상하거나(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등) 또는 조세 기반을 넓힘(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³⁾
 - 또한 재산세 인상(그리스, 아일랜드⁴⁾,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과 법인세의 인상(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및 자본 이득세 인상 조치(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 (제도개혁) 재정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시행
 - EU는 European Semester 시스템을 통해 예산안을 회부하기 전에 집행위의 사전 조정을 받도록 하고, 문제발생 시 집행위가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
 - 유로지역 국가들(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중기에 걸쳐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요구
 - 많은 국가들이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립(호주,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헝가리, 루마니아)

3) 일본의 VAT 인상은 2014년 시행 예정

4) 아일랜드는 2012년에 Value-based 재산세인 'Flat household charge' 도입

<표 I-4> 2009년 이후 세입 및 세출 조치

	선진국											신흥경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세입수단	개인소득세 증가	○	○	○		○	○	○		○	○	○									○		○	○					
	법인세 증가	○		○	○					○	○												○						
	자본이득세 증가						○	○			○	○	○	○								○		○					
	사회 안전 기여 증가		○	○		○		○				○	○	○				○				○		○	○	○			
	부가가치세 증가			○		○	○	○			○	○	○	○	○	○					○	○	○	○	○	○			
	소비세 증가	○	○	○		○	○	○	○		○	○	○	○			○	○	○		○	○	○	○	○	○			○
	재산세 증가					○	○	○			○	○		○		○					○	○							
조세 순응	○				○	○	○	○	○	○	○	○				○	○		○	○	○	○		○	○			○	
세출수단	공무원임금 동결/감축		○			○	○	○		○	○	○	○				○				○	○	○	○	○	○		○	
	시민서비스 규모통제	○	○	○		○	○	○		○	○	○					○				○	○	○	○	○	○			
	연금지출 절약	○	○	○		○	○	○		○	○	○		○		○					○		○	○					
	건강관련 지출절약	○		○		○	○	○		○	○	○	○				○				○	○			○			○	
	사회복지 축소				○	○	○	○			○	○	○				○				○	○		○	○				
	공공투자 축소	○	○			○	○	○	○		○	○	○								○	○	○		○	○			
기타 지출 수단	○	○	○		○		○			○	○	○	○							○	○	○		○	○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2.10

- OECD Economic Outlook(2012.11)은 약한 경제성장과 하방위험 극복을 위해 각국의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2013-14년 OECD 국가의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총부채 비율을 경제위기 전 수준 또는 GDP 대비 6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기초수지 개선이 필요
 - OECD국의 재정적자는 2013-14년 GDP 대비 약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2014년 총부채 규모는 각각 GDP 대비 114%, 103%, 230%로 전망

<표 I -5>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OECD)

(단위: GDP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수지					
미국	-11.4	-10.2	-8.5	-6.8	-5.2
일본	-8.4	-9.3	-9.9	-10.1	-7.9
유로지역	-6.2	-4.1	-3.3	-2.8	-2.6
OECD 국가 ¹⁾	-7.7	-6.5	-5.5	-4.6	-3.6
국가부채					
미국	97.8	102.2	109.8	113.0	114.1
일본	192.7	205.3	214.3	224.3	230.0
유로지역	93.1	95.2	100.6	102.5	103.4
OECD 국가 ²⁾	98.7	102.9	108.7	111.4	112.5

주: 1) 칠레, 멕시코 제외

2) 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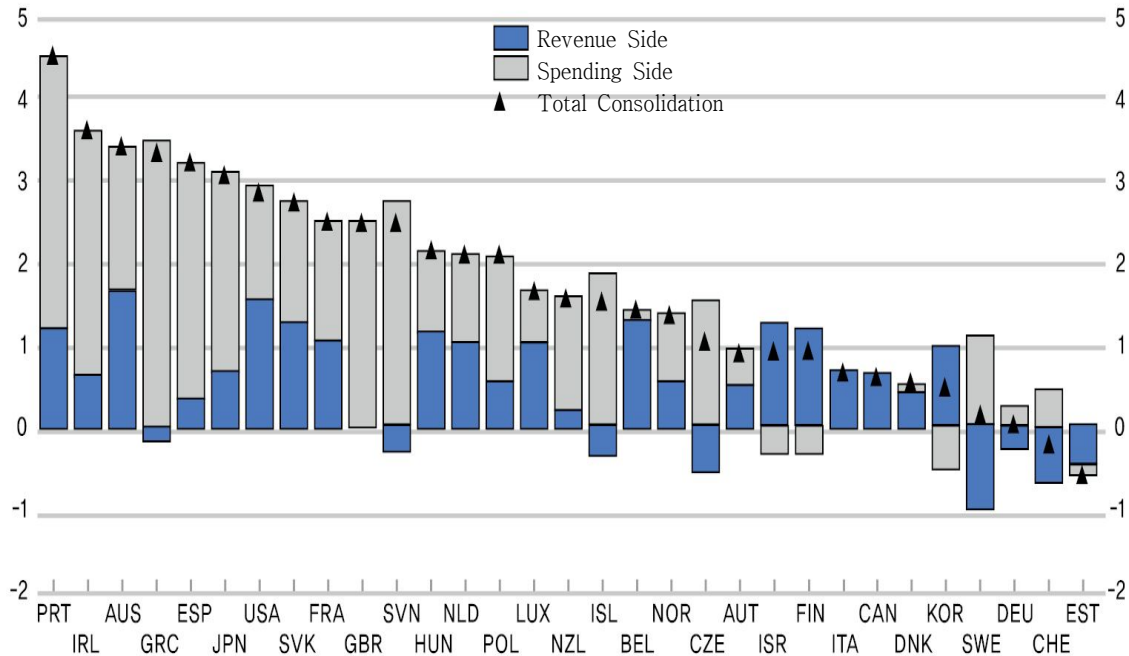
1. 재정수지(Actual balances) 및 부채(liabilities)는 명목 GDP 대비 비중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2, 2012.11

- 대부분의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계획은 지출감축에 비중을 두면서 수입증대 조치를 병행할 예정임

[그림 I-3] 2013~2014년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

(단위: 잠재 GDP 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2, 2012.11

-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2012.11)에 따르면, EU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건전화 계획이 진행될 것이며 재정긴축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 유로지역의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 3.3%에서 2.6%, 유로 전체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12년 3.6%에서 3.2%로 소폭 감소할 전망
 - 경제활동이 점차 회복되고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2014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로지역과 EU 전체가 각각 0.1%p, 0.3%p 감소한 2.6%, 3.2%를 기록할 전망
 - 유로지역의 2013년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2년 92.9%에서 94.5%로, 유로 전체 2013년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2년 86.8%에서 88.5%로 상승할 전망이나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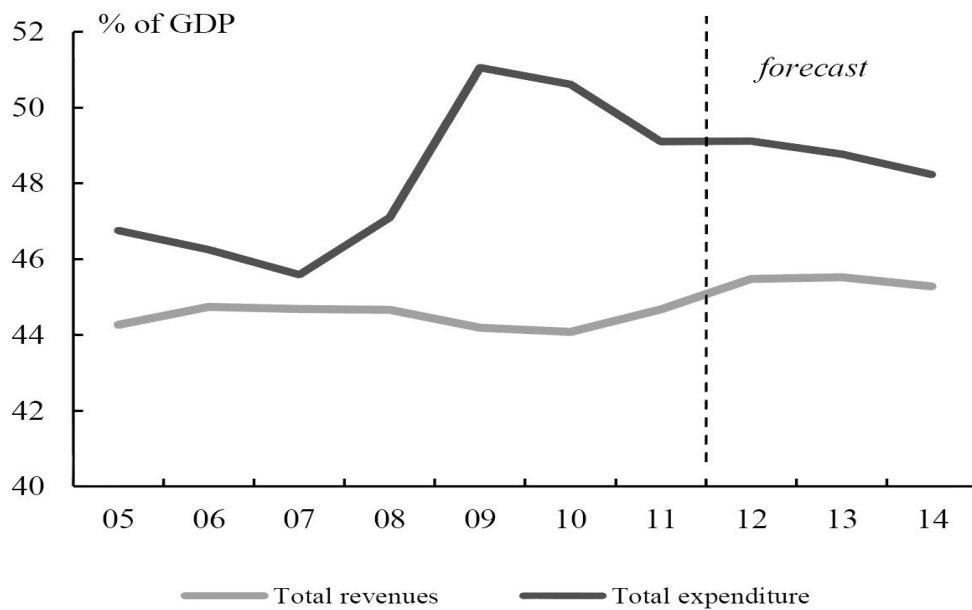
<표 I-6>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EU)

(단위: GDP 대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수지					
미국	-11.3	-10.1	-8.5	-7.3	-6.2
일본	-8.4	-7.8	-8.3	-7.9	-7.7
유로지역	-6.2	-4.1	-3.3	-2.6	-2.5
EU 전체	-6.5	-4.4	-3.6	-3.2	-2.9
정부부채					
미국	99.2	103.5	109.6	112.3	113.3
일본	215.3	233.2	240.6	249.5	250.8
유로지역	85.6	88.1	92.9	94.5	94.3
EU 전체	80.2	83.0	86.8	88.5	88.6

자료 :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

[그림 I-4] EU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Autumn 2012

- IMF의 주요국 재정 전망(Fiscal Monitor, 2012.10)
 - (미국)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시 201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7.3%로 전망
 - 2012-13년 재정적자(headline deficit)를 매년 GDP 대비 1.5%p 감소 예상
 - 큰 규모의 수지 불균형에 대처할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의 제정과 시행이 필요
 - (일본) 지진 대처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2013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p 줄어듦 전망
 -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기 재정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정책 필요
 - (캐나다) 세입증가, 성장의 회복세와 지출제한에 따라 재정 상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독일) 독일은 2013년에 재정조정 속도를 늦춰 중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지의 경우 2011년의 Over performance의 결과로 부채제한법의 재정한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됨

-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Economic Outlook, 2012.11)
 - (미국) 재정절벽 및 유로지역 신용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
 - FY2013, FY2014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1.5% 수준으로 재정 감축을 시행할 예정이나, 재정 지원 중단이 가처분 소득 성장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지출 감축 등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FY2015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3.2% 수준 달성 기대
 -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10%로 인상하고, 추가적 지출 감축 정책을 통해 GDP 대비 2%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계획
 - (유로지역) 경기 진작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강화 및 개선이 요구되며,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의 부재가 현재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됨

- (프랑스) 2012년 목표치를 GDP 대비 4.5%로 설정하였으며, 2013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로, 2014년에 2.2% 달성을 계획함
- (독일) 경기 둔화로 2013-14년의 재정적자 폭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화를 통한 재정감축으로 수출 및 국내수요의 점진적 증가를 전망

□ EU의 주요국 재정 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2.11)

- (미국)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2년 8.5%에서 소폭 감소한 7.3%, 정부부채는 112.3%를 기록할 전망
 - 단기적으로는 2013년 초의 부채한도의 만료와 2013년 3월 이후 다가올 정부폐쇄의 상호작용으로 2013년 1월 재정절벽이 시작될 전망
- (일본)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7.9%, 정부부채는 소폭 상승한 249.5%를 기록할 전망
 - 공공 투자와 정부 소비는 건전화 정책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재건 작업은 계속될 것이나 일반 공공 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
- (중국) 중국 정부는 부정적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2%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당 지도부 교체는 정책대응의 크기 및 범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

<참고 1> OECD의 세계 장기성장 전망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⁵⁾

- 개요
 - 세계 각 국가들의 점진적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함
 - 206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향후 50년간 세계경제 구성 변화를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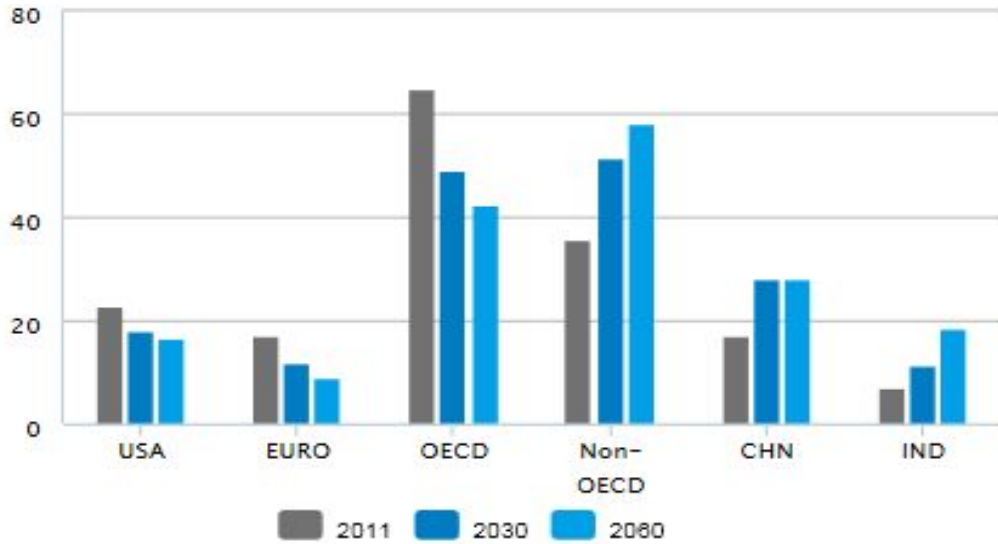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 결정요인
 - 세계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MFP(multi-factor productivity)로 분석함
 - 노동의 절대적인 양보다 노동력의 인구학적인 특성이 중요함
 - 지난 10년간 노동의 총량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향후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은 인구학적인 특성(경제활동인구의 분포, 교육수준, 성별 등)일 것임

- 세계경제 장기성장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면 향후 50년간 GDP 성장률은 매년 3%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각 국의 지속적인 재정 및 구조적 개혁과 신흥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임
 - 경제성장률은 국가별로 편차를 보일 것이나, 신흥국의 성장도 점차 둔화되어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수렴될 것임
 - OECD 비회원국들의 성장률은 과거 10년간 7%를 넘었으나, 2020년 5% 수준으로 감소, 2050년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 OECD 국가들의 장기 성장률은 평균 1.75~2.25% 수준이 될 것임
 - 2060년, 세계경제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비OECD 국가들의 지속된 성장으로 OECD 회원국과의 경제성장 차이는 점차 좁혀져 2060년에는 비OECD 국가들이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

5)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Economy Policy Papers NO.3, November 2012

[그림 I-5] 2060년 세계 GDP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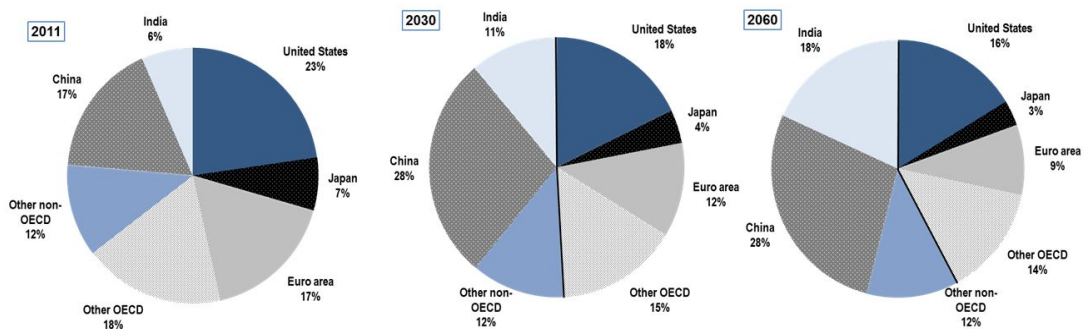


주: 2005년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평가(PPP)를 기초로 작성

자료: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3

- 중국 및 인도는 GDP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30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미국은 18% 수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GDP 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함
- 2060년에는 세계 GDP 구성 중 중국 28%, 인도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I-6] 향후 50년간 세계 GDP 구성비율의 변화



주: 2005년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평가(PPP)를 기초로 작성

자료: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3

<표 I -7> 2011~2060년 국가별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전망

	Average growth in GDP in USD 2005 PPPs				Average growth in GDP per capita in USD 2005 PPPs			
	1995-2011 ¹	2011-2030	2030-2060	2011-2060	1995-2011 ¹	2011-2030	2030-2060	2011-2060
Australia	3.3	3.1	2.2	2.6	1.9	2.0	1.7	1.8
Austria	2.0	1.5	1.4	1.4	1.7	1.2	1.4	1.3
Belgium	1.8	2.1	2.0	2.0	1.3	1.5	1.7	1.6
Canada	2.6	2.1	2.3	2.2	1.6	1.3	1.8	1.6
Switzerland	1.7	2.2	2.0	2.1	1.0	1.5	1.8	1.7
Chile	3.9	4.0	2.0	2.8	2.8	3.4	2.0	2.5
Czech Republic	3.2	2.7	1.8	2.1	3.1	2.6	1.9	2.2
Germany	1.4	1.3	1.0	1.1	1.4	1.5	1.5	1.5
Denmark	1.5	1.3	2.1	1.8	1.1	1.0	2.0	1.6
Spain	2.9	2.0	1.4	1.7	1.9	1.6	1.3	1.4
Estonia	3.6	2.8	2.0	2.4	3.8	3.1	2.3	2.6
Finland	2.5	2.1	1.6	1.8	2.2	1.8	1.5	1.6
France	1.7	2.0	1.4	1.6	1.1	1.6	1.2	1.3
United Kingdom	2.3	1.9	2.2	2.1	1.9	1.3	1.8	1.6
Greece	2.4	1.8	1.2	1.4	1.9	1.7	1.3	1.4
Hungary	2.4	2.5	1.7	2.0	2.6	2.7	2.0	2.3
Ireland	4.7	2.1	1.7	1.9	3.2	1.3	0.9	1.1
Iceland	3.0	2.2	2.4	2.3	1.8	1.2	1.9	1.6
Israel	3.7	2.7	2.6	2.6	1.5	1.3	1.6	1.5
Italy	1.0	1.3	1.5	1.4	0.6	0.9	1.5	1.3
Japan	0.9	1.2	1.4	1.3	0.8	1.4	1.9	1.7
Korea	4.6	2.7	1.0	1.6	4.0	2.5	1.4	1.8
Luxembourg	3.8	1.8	0.6	1.1	2.3	0.7	0.1	0.3
Mexico	2.6	3.4	2.7	3.0	1.2	2.5	2.6	2.5
Netherlands	2.2	1.8	1.6	1.7	1.7	1.5	1.7	1.6
Norway	3.0	2.9	1.9	2.3	2.2	2.0	1.4	1.6
New Zealand	2.7	2.7	2.6	2.6	1.6	1.8	2.2	2.0
Poland	4.3	2.6	1.0	1.6	4.4	2.6	1.4	1.9
Portugal	1.7	1.4	1.4	1.4	1.3	1.4	1.6	1.5
Slovak Republic	4.5	2.9	1.4	2.0	4.4	2.8	1.7	2.1
Slovenia	2.6	2.0	1.6	1.8	2.2	1.7	1.8	1.8
Sweden	2.5	2.4	1.8	2.0	2.1	1.7	1.5	1.6
Turkey	4.2	4.5	1.9	2.9	2.8	3.6	1.8	2.5
United States	2.5	2.3	2.0	2.1	1.5	1.5	1.5	1.5
Argentina	3.6	3.6	2.2	2.7	2.6	2.9	1.9	2.3
Brazil	3.3	4.1	2.0	2.8	2.1	3.4	2.1	2.6
China	10.0	6.6	2.3	4.0	9.3	6.4	2.8	4.2
Indonesia	4.4	5.3	3.4	4.1	3.1	4.5	3.3	3.8
India	7.5	6.7	4.0	5.1	5.8	5.6	3.6	4.4
Russia	5.1	3.0	1.3	1.9	5.4	3.2	1.7	2.3
Saudi Arabia	4.4	4.2	2.4	3.1	1.3	2.5	1.7	2.0
South Africa	3.4	3.9	2.5	3.0	2.1	3.4	2.3	2.7
World unweighted average ²	3.1	2.8	1.9	2.2	2.3	2.2	1.8	2.0
World weighted average ²	3.5	3.7	2.3	2.9	2.5	3.1	2.3	2.6
OECD unweighted ²	2.8	2.3	1.7	2	2.1	1.8	1.6	1.7
Non-OECD unweighted ²	4.3	4.7	2.5	3.3	3.1	4.0	2.4	3.0
OECD weighted ²	2.2	2.2	1.8	2.0	1.5	1.7	1.7	1.7
Non-OECD weighted ²	6.7	5.9	2.8	3.9	5.6	5.2	2.7	3.7

주: 2005년 미국 달러 기준 구매력평가(PPP)를 기초로 작성
 자료: OECD, Economic Policy Paper No.3

Ⅱ.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6개국 종합 -

- 제2부 각국 예산안 분석에서는 주요 6개국 -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 의 2012 또는 2013년 예산안을 분석
 -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는 2012년 봄에 발표한 FY2012-13 예산안을 분석
 - 경제·재정 전망의 경우 2012년 가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를 활용
 - 따라서 캐나다, 호주의 경우 2013년 2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2-13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영국은 사전예산안(Pre-budget)을 대체한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를 기준으로 분석
 - 예산안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3월 말에 발표되지만, 예산안 발표 3~4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정책을 담은 가을보고서를 발표
 - 미국의 경우 현재 FY2013 예산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국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기
캐나다*	FY2012-13	2012.04 ~ 2013.03	2012.03.29
일본	FY2013	2013.04 ~ 2014.03	2013.01.29
프랑스	FY2013	2013.01 ~ 2013.12	2012.09.28
독일	FY2013	2013.01 ~ 2013.12	2012.06.27
영국	FY2013-14	2013.04 ~ 2014.03	2012.12.05 (가을보고서)
호주*	FY2012-13	2012.07 ~ 2013.06	2012.05.08

주: *는 2012년에 발표한 FY2012-13 예산안을 분석하였음

- IMF의 Fiscal Monitor(2012.10)에 따르면 적자 감축의 측면에서 각 국가들이 재정건전화의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향후 전망들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예상
 - OECD Economic Outlook(2012.11)에서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으로 회복이 더디고 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IMF(2012)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연금 관련 지출의 증가와 재정취약성의 증가에 대응한 장기적 측면에서의 재정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자의 감축이 아직까지 부채비율의 감소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출부문의 구조조정을 위주로 한 재정건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표 II-2> 2013년 재정 전망

(단위: %)

국가	GDP 대비 재정수지 ¹⁾		GDP 대비 국가부채 ²⁾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미국	-8.7	-7.3	107.2	111.7
캐나다	-3.8	-3.0	87.5	87.8
일본	-10.0	-9.1	236.6	245.0
프랑스	-4.7	-3.5	90.0	92.1
독일	-0.4	-0.4	83.0	81.5
영국	-8.2	-7.3	88.7	93.3
호주	-2.9	-2.1	74.3	74.9

주: 1) General Government Balance
 2)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출처: IMF, Fiscal Monitor, 2012.10

-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확대 속에서 주요국의 경제적 전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은 전반적으로 2012년에 이어 기존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속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부양·경제성장에 대한 노력을 확대
 - (캐나다) 글로벌 경제상황이 여전히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재정적자 폭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FY2015-16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2년 예산안은 부처별 지출검토(Review of departmental spending)를 지속하여 약 52억캐나다달러를 절감 계획
-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FY2013-14까지 총 30억캐나다달러를 투입
- (일본)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부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9.4%로 예상되고 GDP 대비 부채비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제재생과 성장을 위한 예산의 3가지 중점분야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분야의 적정성 검토를 계획
- (유로지역) 유럽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꾸준한 재정건전화의 노력 속에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이 강화
 - (프랑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외무역의 성장으로 점차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지속하는 한편 성장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최고 소득세율의 인상,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 및 감면 폐지, 각종 보조금 삭감,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 등을 포함한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청년지원분야, 고용분야, 사범 및 치안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계획
 - (독일) 국내 내수의 유지로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계획
 -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에너지정책을 강화
 - 재정건전화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4년 구조적 수지 균형을 목표
- (영국) 지속적인 유로존의 위기로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고 있으나, 꾸준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FY2016-17에 경기조정수지 흑자를 전망
 - 예산기조는 재정건전화의 지속 및 경제성장과 공정성을 위주
 -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목표(Fiscal Mandate)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촉진을 위해 교육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

- (호주)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계획대로 흑자재정 전환을 목표
 - 광산 붐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는 목표로 사회복지 확충을 계획
 -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절감계획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확대 계획

1. 캐나다 (FY2012-13: 2012.4 ~ 2013.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2년 11월 기준,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 실업률은 7.2%로 예측
- (재정 전망)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II-3> 캐나다 경제 전망(2012년 11월 기준)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2016
실질 GDP 성장률	2.1	2.0	2.5	2.5	2.3	2.2	2.3
실업률	7.3	7.2	6.8	6.6	6.5	6.4	6.9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7.3	7.2	6.8	6.6	6.5	6.4	6.9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2.2 일부 발췌

<표 II-4> 캐나다 재정 전망(2012년 11월 기준)

(단위: 억캐나다달러)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총세입	2,488	2,544	2,672	2,816	2,961	3,088	3,198
총지출	2,750	2,804	2,837	2,902	2,979	3,071	3,164
재정수지	-262	-260	-165	-86	-18	17	34
연방채무	5822	6094	6258	6344	6362	6945	6311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3.4 일부 발췌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2-13 총세입 전망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54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0%)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7% 상승 전망
- (세출) FY2012-13 총지출 전망은 2,50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8%)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 이전지출, 직접 프로그램 지출을 포함
 - (정부부문 이전지출) 특히 캐나다 보건지출(CHT)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최소 3.0%씩 될 것으로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 정부의 새로운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세액공제(근로자 소득 혜택, 의료비 세금감면, 캐나다영화 제작 세금감면,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 세금감면 등)를 직접 프로그램 지출 하위의 이전지출로 분류

□ 재정건전화

- 2012년 예산안은 부처별 지출검토(Review of departmental spending)를 지속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부처별 지출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지출절감 노력으로 예산안 작성시점 기준으로 약 52억캐나다달러를 절감 계획
- 국내 및 국외 채무의 관리를 위한 중기 채무전략(Medium-Term Debt Strategy) 수립

□ 경기부양책

- FY2013-14까지 경기부양지출로 총 30억캐나다달러 투입
 - 초기기업(early-stage) 대상 벤처캐피탈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이 운용하는 거대 규모의 벤처캐피탈 기금 설립을 위해 4억캐나다달러 투자
 - FY2014-15부터 연구기반시설 선진화를 위해 캐나다혁신기금(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에 향후 5년간 5억캐나다달러 투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임시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2억 500만캐나다달러 투자
 - 캐나다 원주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향후 3년간 원주민 교육사업 및 학교 시설물 개선에 2억 7,500만캐나다달러 지원

- 건강 관련 연방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및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경감혜택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세시스템 개편

<표 II-5> 캐나다 FY2012-13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1-12	2012-13	2013-14	합계
비즈니스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 (Supporting Entrepreneurs, Innovators and World-Class Research)		454	312	767
기업 투자환경 개선 (Improving Condi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298	120	418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시장 참여기회 확대 지원 (Investing in Training, Infrastructure and Opportunity)	51	609	601	1,262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297	279	577
총 경기부양지출	51	1,659	1,313	3,023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3.0 일부 발췌

2. 일본 (FY2013: 2013.4 ~ 2014.3)

□ 경제 및 재정 전망

- 2013년도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정부는 2013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2.5%, 명목성장률 2.7%로 예상
- 주요기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 2013년 일본 경제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임
 - 일본 중앙은행(BOJ) 2.3%, 국제통화기금(IMF) 1.2%, 세계은행(WB) 0.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0.7%
- 2013년도 완전실업률은 경기회복세로 고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0.3%p 감소한 3.9%를 기록할 전망

-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9.0%를 기록할 전망
- 2013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24.3%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

<표 II-6> 일본 경제 전망

(단위: 조엔, %)

구 분	2011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1		2012		2013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3.3	474.9	487.7	△1.4	0.3	0.3	1.0	2.7	2.5
완전실업률	4.5	4.2	3.9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3.1.28

<표 II-7> 일본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3.3	△9.3	△8.1	△8.8	△8.4
재정수지 ²⁾	△3.9	△10.5	△9.0	△9.7	△9.4
국채 비율	174.1	194.1	200.0	211.7	219.1
국채의존도 ³⁾	39.2	51.5	44.4	51.9	49.0

주: 1) OECD 「Economic Outlook 92」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92」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2013.1.29

- 예산기조: 2013년도 예산은 중점적·전략적인 예산의 대담한 편성을 위해 중점 배분해야하는 분야와 예산의 재편성을 위한 구조 등 기본방침 및 특별중점요구로 구성
 - i) 2012년도 추경 예산과 일체적인 편성
 - ii)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한 효과적·효율적인 편성
 - iii) 재정에 대한 신임 확보를 위한 편성

□ 예산안 내용

- FY2013 세입 규모는 지난해 대비 2조 2,776억엔(2.5%) 증가한 92조 6,115억엔 수준
- FY2013 세출은 '12년에 비해 2.5% 증가한 92조 6,115억엔 편성
 - 사회보장과 공공사업 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예산의 중점화」(2013.1.29)
 - FY2013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일본 경제재생 실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3개 분야에 대한 예산 중점화를 추진
 - 「예산의 중점화」의 3개 분야
 - i) 부흥·방재 대책
 - ii)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 iii)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
- 재정건전화
 - 세출 분야의 적정성 검토(2013.1.29)
 - : FY2013 예산안에서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실현을 위해 주요 세출 분야의 적정성 검토
 - 검토 분야
 - i) 지방 공무원 급여
 - ii) 생활 보호
 - iii) 제도의 폐지·전환
 - iv) 기타: 공립학교 교직원 수 조정, 과학 연구 보조금 시스템 도입 등
 - 「FY2013 예산 편성에 대한 소고 - 재정운영의 방향」발표(2013.1.21) (재정 현황)
 - 「OECD Economic Outlook 92」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명목 GDP 대비 214%로 그리스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중 최악 (재정건전화 방안)
 - FY2013 예산 편성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지출의 효율화에 임할 것을 요구

- 당분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건전한 재정으로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소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3. 프랑스 (FY2013: 2013.1 ~ 2013.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3년 경제성장률은 0.8%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속적인 대외무역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4~2017년에 2%대로 성장회복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12년 GDP 대비 4.5% 규모(836억유로)의 재정적자가 2013년에는 GDP 대비 3%(616억유로)로 감소하며, 2016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II-8> 프랑스 2012~2017년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0.3	0.8	2.0	2.0	2.0	2.0
인플레이션율	2.0	1.75	1.75	1.75	1.75	1.75
구조적 재정수지	-3.6	-1.6	-1.1	-0.5	0.0	0.0
재정수지	-4.5	-3.0	-2.2	-1.3	-0.6	-0.3
국가채무 ¹⁾	89.9	91.3	90.5	88.5	85.8	82.9
국가채무 ²⁾	87.4	88.4	87.3	85.4	82.9	80.1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제외

출처: PLF 2013

□ 예산기조

- 2012년보다 300억유로를 감축하는 건축예산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분야는 청년 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

□ 예산안 내용

- (수입) 2013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126억유로로 전망되고, 201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14.1%정도 증가한 3,568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46억유로로 전망되고, 201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2.0%정도 증가한 3,821억유로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3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100억유로의 재정지출 감축과 200억유로의 재정수입 증대 내용 포함
 - 최고 소득세율 45%로 상향 조정, 연간 소득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75%의 특별세 부과, 대기업에 대한 기존의 공제 및 조세감면 혜택 폐지 등 각종 세제 개편으로 200억유로 이상 재정수입 확대
 - 정부지출은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8억유로), 농업분야 및 기업 지급 보조금 삭감(20억유로), 국방비 조정(22억유로), 투자의 합리화(12억유로),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지급액 감액(18억유로)를 통하여 100억유로를 감축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청년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청년지원분야는 교육, 청년 고용, 청년 자율성 부문으로 나뉘 대학 내 1,000개의 일자리, 16~25세 극빈층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10만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부문에 1만개 일자리 등을 창출할 계획
 - 고용분야에 고용센터의 2,000개 신규 일자리 및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390,000개의 고용계약을 포함하여 39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사법 및 치안분야에 1,000개(사법분야 520개, 치안분야 4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4. 독일 (FY2013: 2013.1 ~ 2013.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낮은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개선으로 구매력이 향상되고, 내수가 유지되어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 12월 발표 기준, 2013년 경제성장률은 0.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실업률은 7.2%로 전망
- (재정 전망) 국내외 기관별로 201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 ~ -0.1%, 부채는 GDP 대비 80~81.5% 수준으로 전망

<표 II-9> 독일 경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실질 GDP 성장률	3.0	0.7	0.4	1.9
실업률	7.1	6.8	7.2	7.0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5	2.1	1.5	1.6

출처: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12.12

<표 II-10> 독일 재정 전망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지출	311.6	302.0	302.9	303.3	309.9
재정수입	311.6	302.0	302.9	303.3	309.9
재정수지	-1.0	-0.5	-0.0	0.0	0.0
연방채무	82.0	80.0	78.0	76.0	73.0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plan des Bundes 2012 bis 2016*, 2012.8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2*, 2012.4

- 예산기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연구분야에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한 137억유로, 인프라분야에 100억유로 지출예정
 - (재정건전화) 2013년 구조적 적자는 GDP 대비 0.3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함

- 예산안 내용
 - (수입)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49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신규차입금은 171억유로를 목표로 함
 - (지출) 총재정지출은 3,020억유로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수준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39.5%로 가장 큼
 - (교육·연구) 17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분야 강화정책을 반영, 전년 대비 6.2%(8억유로) 증가한 137억유로 편성
 - (개발협력) 전년 대비 8천만유로 감소한 63억유로 편성,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DP 대비 0.7% 수준으로 계획함
 - (내무) 정보기술 보안, 연방경찰 지원 등의 국내안보와 관련된 지출로 전년 대비 6.6%(4억유로) 증액된 59억유로 편성
 - (국방) 자원입대자의 수가 5천명을 넘어서면서 발생된 추가지출과 군인들의 연말 보너스 인상분을 포함해, 약 330억유로 편성
 - (환경) 16억유로가 편성되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석관 재건 사업, 디젤 차량의 미립자 감소 시스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경제·기술) 61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구조 개선사업(GRW), 대체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망 확충 등을 계획
 - (교통·건설) 도로, 철도, 수로, 복합운송 부문에 100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도시 개발 부문에 약 4.5억유로가 편성됨
 - (사회보장)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120억유로, 연금보험지출은 815억유로 편성, 수발보험에는 2014년부터 매년 1억유로 편성 계획
 - (노동)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주택 및 난방(Unterkunft und Heizung) 등에 대한 급부로 234억유로 편성

- (가족) 부모수당(Elterngeld)으로 49억유로 편성, 1~3세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Betreuungsgeld)정책 시행으로, 매달 1인당 100유로씩 지급
- (영양·농업·소비자보호) 농업정책(Agrarsozialpolitik) 부문에 37억유로 집중 편성되었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 강화에 2,500만유로 편성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금융거래세(FTT)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추구
- (에너지정책)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연구,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에 투자

5. 영국 (FY2013-14: 2013.4 ~ 2014.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2013년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2%로 하향 조정
 - 2012년 경제성장률을 2012년 3월 0.8%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여 2017년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FY2013-14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은 GDP 대비 6.1%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할 전망이며, FY2017-18에는 GDP 대비 1.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3-14에 GDP 대비 2.2% 적자로 예측하였으며 FY2016-17에는 0.4%만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4년 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GDP 대비 76.8%로 전년보다 2.1%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FY2015-16에 GDP 대비 79.9%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하여 FY2017-18에는 77.3%를 나타낼 전망

<표 II-11> 영국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단위: %, GDP %)

경제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실질 GDP 성장률	0.9	-0.1	1.2	2.0	2.3	2.7	2.8
실업률(ILO)	8.1	8.0	8.2	8.2	8.0	7.6	7.1
재정 전망	실적치	전망치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공공부문 순차입	7.9	5.1	6.1	5.2	4.2	2.6	1.6
공공부문 순부채	66.4	74.7	76.8	79.0	79.9	79.2	77.3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 예산기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Growth)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달성을 위한 정책 유지
 -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와 기업활동 지원 등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구조적 개혁 진행
 - (공정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인적공제 확대, 연료세 인상 연기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 시행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3-14 경상세입은 GDP 대비 38.3%로 전년보다 0.3%p 증가
 - FY2013-14 경상세입은 2012년 3월 전망 대비 19억파운드 감소한 6,206억파운드 규모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NICs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짐
 - (지출) FY2013-14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1.3%p 증가한 44.4%로 전망
 - 2012년 3월 전망 대비 1억파운드 감소한 7,199억파운드 규모로 FY2012-13보다 456억파운드(6.8%)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영국 의회는 FY2011-12부터 FY2015-16까지 총 4,31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및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달성 가능
 - FY2013-14에 8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이 중 590억파운드가 지출삭감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
 -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준시점인 FY2017-18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GDP 대비 0.9%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FY2016-17은 0.4%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 영국은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FY2012-13부터 FY2014-15까지 약 55억파운드 규모의 capital package를 시행할 전망
 - (학교) 잉글랜드 지역의 학교에 9억 8,000만파운드 투자 증액
 - (과학)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기술혁신 및 R&D를 위한 시설지원에 추가 6억파운드 투입
 - (도로) 정부는 국가 도로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15억파운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0억파운드를 이번 Spending Review 기간에 투입
 - (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첫 주택 마련에 대한 지원 투자 확대

6. 호주 (FY2012-13: 2012.7 ~ 2013.6)

□ 경제 및 재정 전망

-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하게 성장
- FY2012-13 실질 경제성장률은 3%로 예측되며 실업률은 5.5%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세계경제여건 둔화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FY2012-13재정수지 흑자를 목표

<표 II-12> 호주 경제 전망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경제성장률	3	3.25	3	3	3	3	3	3	3
실업률	5.25	5.5	5.5	5.5	5.5	5	5	5	5

주: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Budget 2012-13, 2012.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표 II-13> 호주 재정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1-12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338.1	376.1	373.7	402.2	403.2	424.8	421.9	449.6	446.4
재정지출(Expenses) ¹⁾	377.7	376.3	375	398.5	397.9	416.4	413.7	439	435.8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44.5	2.5	1.2	2.6	4.3	7	6.9	9.5	9.8
순채무(Net debt)	147.3	143.3	144.0	144.9	144.6	140.1	144.3	131.6	137.7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1.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12-13, 2012.5

Final Budget Outcome 2011-12, 2012.9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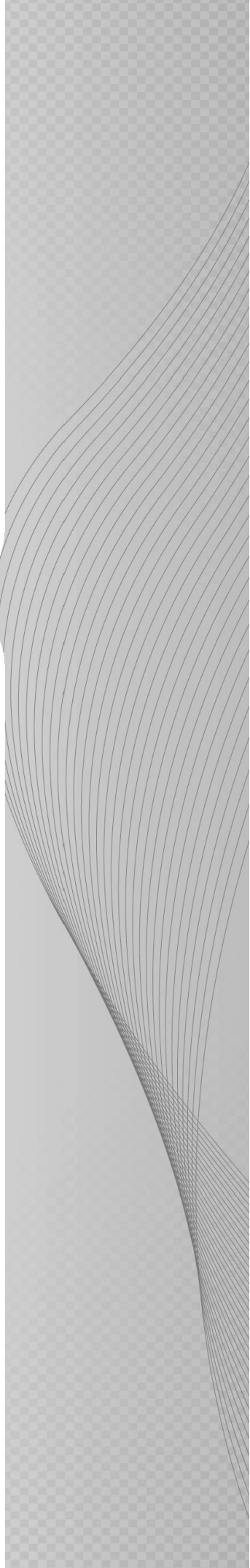
□ 예산기조: FY2012-13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흑자재정 전환을 목표로 하며 광산 붐의 공유를 중점 기조로 삼음

- 광산 붐(resources boom)의 혜택을 가계·기업과 공유
- 국민장애인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도입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
- 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 노인요양제도(Aged care system) 구축

- 노동 생산성 향상(Building a more productive workforce)
 -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생산성 구축
- 예산안 내용(세입·세출 내역)
- FY2012-13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3,761억호주달러
 -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은 예산안 대비 23억호주달러 감소
 - FY2012-13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763억호주달러
 -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은 예산안 대비 12억호주달러 감소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 FY2012-13에 GDP의 0.1%에 해당하는 15억호주달러 흑자재정 달성 계획
 - FY2012-13 동안 44억호주달러, 2015-16년까지 총 326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광물자원임대세 수입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제도 시행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호주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우대조치 시행
 - 광산세 수입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 가족세제혜택 증액에 18억호주달러 투입
 - 기존의 교육세환급을 대체하여 지원직접지원 형식인 학자녀 보너스 제도 시행
 -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수당 지급을 위해 11억호주달러 지원

제 2 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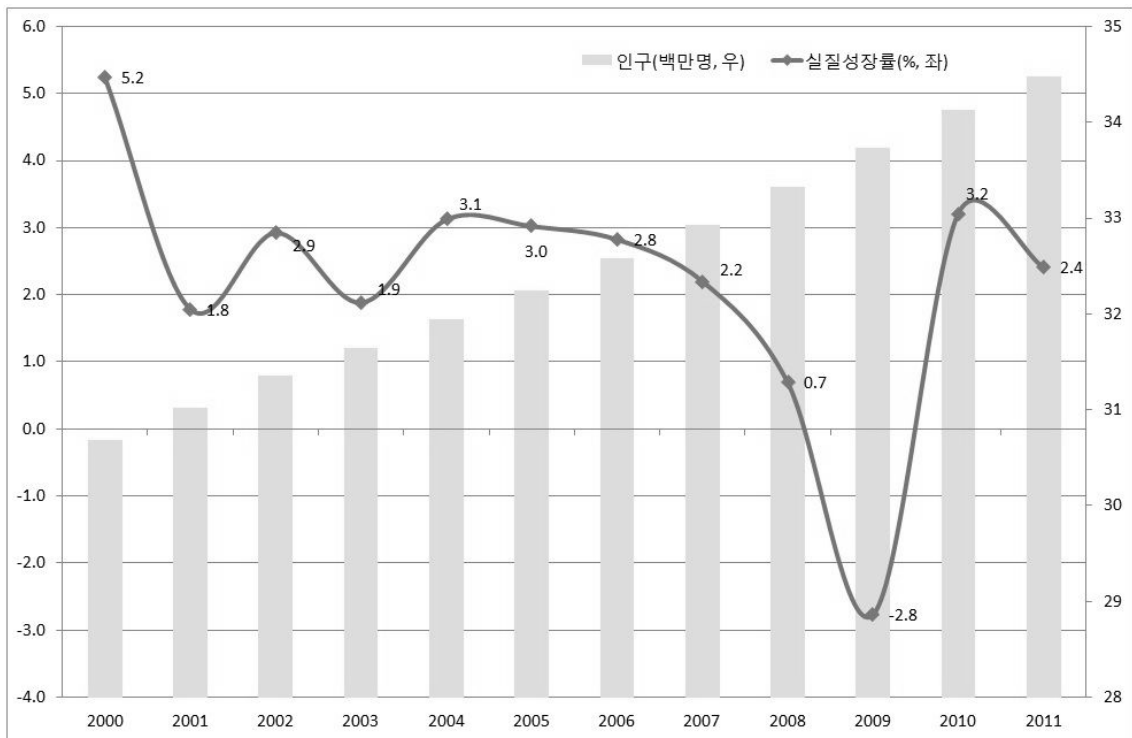
- FY2012-13: 2012년 4월 ~ 2013년 3월
- 출처
 - Budget 2012(2012. 3. 29)
 - Supplementary Estimates (A) 2012-13(2012. 5)
 - Supplementary Estimates (B) 2012-13(2012. 11)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 The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PRPP) Act(2012. 11)
<http://www.prppcanada.com/>
 - Four measures for new government-backed insured mortgages (모기지 대출 조건 강화 대책), 재무부 보도자료(2012. 6)
<http://www.fin.gc.ca/n12/12-070-eng.asp>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2~3월에 발표되며 FY2013-14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따라서 『주요국 예산안 2012』 중 ‘II. 캐나다’의 내용은 2012년 예산(Budget 2012) 및 2012년 11월에 발표된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 환율: 1캐나다달러 = 1127.26원(2012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1조 3,937억원 달러(우리나라 0.93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63.5%(우리나라는 110.3%)

□ 인구: 3,449만명(2011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2년 11월 기준,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 실업률은 7.2%로 예측
- (재정 전망) 글로벌 경제 약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예산기조

- Budget 2013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2013년 2~3월 발표 예정)
- Budget 2012는 2011년 예산안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및 재정건전화에 주력
 - 세부적으로 비즈니스 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 비즈니스 투자환경 개선,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시장 참여기회 확대지원, 고용창출 지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세입·세출(2012. 11)

- (세입) FY2012-13 총세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54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0%)이며, 연평균 4.7%씩 상승 전망
- (프로그램 지출) FY2012-13 총지출은 2,50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3.8%)로 예측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Budget 2012는 2010년 및 2011년 예산안에서 시행된 부처별 지출 검토(Review of departmental spending)를 지속하여, 불필요한 지출절감 노력
- (경기부양정책) Budget 2012 예산기조 참조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년 3월	Budget 2012 발표	201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2년 5월	추경(A) 발표	
2012년 6월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RPP)도입 법안 통과	
2012년 6월	모기지대출(Mortgage) 조건 강화대책 시행	
2012년 10월	FY2011-12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2년 10월	「2012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법안(Jobs and Growth Act, 2012)」 발표	
2012년 11월	추경(B) 발표	
2012년 11월	경제 및 재정 전망 조정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2년 12월	「2012년 일자리 창출 및 성장법안(Jobs and Growth Act, 2012)」 왕실재가(Royal Assent)	

1. 경제 및 재정 전망⁶⁾

가. 경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의 완만한 성장세로 인해 Budget 2012 전망치보다 0.4%p 감소한 2.0%로 전망
 - 2012~2016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2014~2016년에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명목 GDP 증가율) 2013년 명목 GDP 증가율은 4.0%로 전년 대비 0.6%p, Budget 2012 대비 0.4%p 하락 전망
- (실업률) 2013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p 하락한 7.2%로 Budget 2012와 동일하게 전망
 - 실업률은 향후 5년간 점차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6.4% 수준 달성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3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12~2016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9%가 될 것으로 예상

6) 본 장의 내용은 캐나다 재무부에서 12개 그룹의 민간부문 경제 전문가 대상* 서베이(2012.10)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발표한 경제 및 재정 전망치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를 위주로 작성 *참여 전문가: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UBS Securities Canada,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I-1> 캐나다 경제 전망(2012년 11월 기준)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2016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2	2.1	2.4	2.4	2.4	2.2	-	2.3
October 2012 survey	2.1	2.0	2.5	2.5	2.3	2.2	2.3
GDP 인플레이션							
Budget 2012	2.4	2.0	2.1	2.0	2.0	-	2.1
October 2012 survey	1.3	2.0	2.1	2.1	2.1	2.1	1.9
명목 GDP 성장률							
Budget 2012	4.6	4.4	4.6	4.4	4.2	-	4.4
October 2012 survey	3.4	4.0	4.7	4.7	4.4	4.3	4.2
실업률							
Budget 2012	7.5	7.2	6.9	6.7	6.6	-	7.0
October 2012 survey	7.3	7.2	6.8	6.6	6.5	6.4	6.9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2	2.1	2.0	2.0	2.0	2.0	-	2.0
October 2012 survey	7.3	7.2	6.8	6.6	6.5	6.4	6.9
U.S. 실질 GDP 성장률							
Budget 2012	2.3	2.4	2.8	2.9	2.8	-	2.6
October 2012 survey	2.2	2.0	2.9	3.1	3.0	2.8	2.6

출처 :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2.2 일부 발췌

나. 재정 전망

- (재정 전망) 글로벌 경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FY2015-16 이후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 (재정수지) FY2011-12 재정적자는 262억캐나다달러로 2012년 예산 전망치(249억캐나다달러)보다 14억캐나다달러 높은 규모이나, 향후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에 18억캐나다 달러, FY2017-18에 흑자 재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의 부진으로 FY2011-12 세입이 예상보다 28억캐나다달러 감소했으며, 명목 GDP 약세 및 이자율 하락 전망으로 FY2012-13부터 FY2016-17까지 세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 FY2012-13부터 FY2016-17까지의 총지출은 2012년 예산 전망치보다 약 52억 캐나다 달러 감소하였으며, 프로그램 지출이 다소 높은 반면 이자율의 하락 영향으로 이자지출은 감소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⁷⁾비율은 FY2010-11 33.1%에서 FY2011-12 33.0%로 감소하였으며, FY2017-18년에 28.1%까지 하락 전망
 -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FY1995-96)였던 연방채무비율 67.1%의 절반 이하이며, 2017년경 G7 국가들 중 총 순채무(Net Debt)가 가장 낮을 것으로 기대

<표 I-2> 캐나다 재정 전망(2012년 11월 기준)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총세입 ¹⁾	2,488	2,544	2,672	2,816	2,961	3,088	3,198
프로그램 지출 ¹⁾	2,440	2,509	2,539	2,592	2,659	2,726	2,804
이자지출	310	296	298	310	320	345	360
총지출	2,750	2,804	2,837	2,902	2,979	3,071	3,164
재정수지	-262	-260	-165	-86	-18	17	34
연방채무 ²⁾	5822	6094	6258	6344	6362	6945	6311
GDP 대비 비중							
총세입	14.1	14.0	14.2	14.3	14.4	14.4	14.3
프로그램 지출	13.8	13.8	13.5	13.2	12.9	12.7	12.5
이자지출	1.8	1.6	1.6	1.6	1.6	1.6	1.6
재정수지	-1.5	-1.4	-0.9	-0.4	-0.1	0.1	0.2
연방채무	33.0	33.6	33.4	32.3	30.9	29.5	28.1

주: 1) 새로운 회계기준(일부 세액공제를 직접 프로그램지출 하위의 이진지출로 분류)을 반영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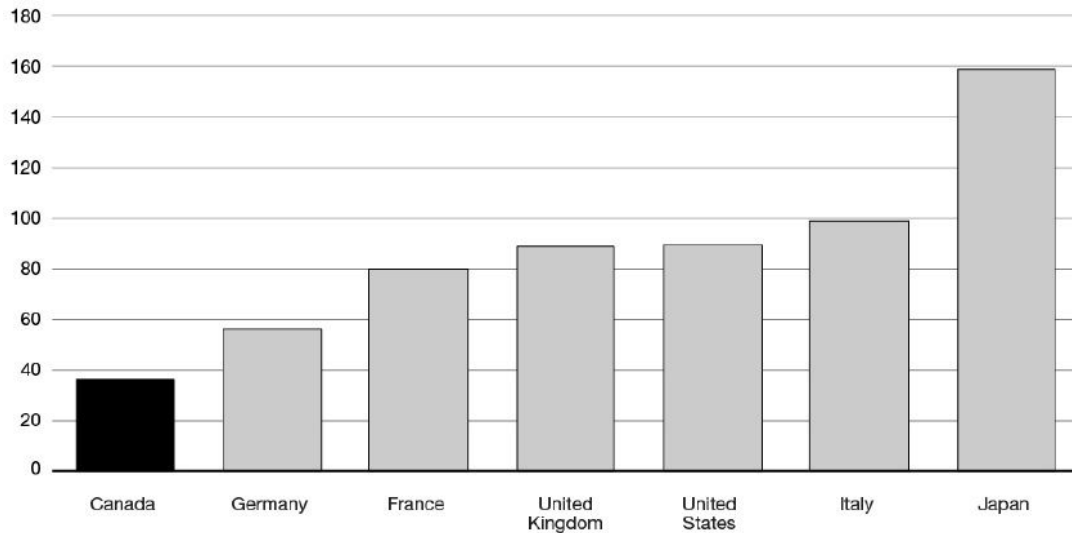
2) 2012-13년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포함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3.4

7)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그림 I-1] G7 국가¹⁾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전망(2017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주: 1) 국가 포괄범위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계획을 포함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Chart 3.3

2. 예산기조(Budget 2012)

※ 2013년 예산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대신 Budget 2012의 기조로 대체함

- 캐나다 2012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2)은 지속되는 세계 경기불안에 대응하고자 2011년 예산과 동일하게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및 재정건전화에 주력
 - 2012년 3월 29일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을 주제로 한 2012년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
- 비즈니스 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
 -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캐나다의 기초연구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 확대

- 초기기업(early-stage) 대상 벤처캐피탈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이 운용하는 거대 규모의 벤처캐피탈 기금 설립을 위해 4억캐나다달러 투자
- FY2014-15부터 연구기반시설 선진화를 위해 캐나다혁신기금(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에 향후 5년간 5억캐나다달러 투자

□ 비즈니스 투자환경 개선

- 천연자원 개발사업, 국제무역관계 등 더 나은 비즈니스 투자환경을 구축
 - 캐나다 천연자원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단위별 검토(One project, One review) 관리시스템 구축
 - 정부의 글로벌 무역 전략(Global Commerce Strategy) 등을 통해 국제무역 및 투자관계의 창출 지원 강화

□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시장 참여기회 확대 지원

-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창출을 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임시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2억 500만캐나다달러 투자
 - 안정적인 고용보험료율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 상승폭을 보험대상소득 100달러당 5센트로 제한
 - 캐나다 원주민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향후 3년간 원주민 교육사업 및 학교 시설물 개선에 2억 7,500만캐나다달러 지원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환경을 개선
 - 건강 관련 연방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및 통합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 경감혜택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세시스템 개편
 - 원주민 지역사회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자원기반시설 개선 등에 2년간 3억 3,000만캐나다달러 지원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2012년 11월 발표된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보고서에 따르면, FY2012-13 세입 전망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54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0%)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7% 상승 전망
- (개인소득세) FY2012-13 개인소득세 수입은 약 49억캐나다달러(4.1%) 증가한 1,255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⁸⁾로 명목 GDP 성장률(4.2%)에 비해 다소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법인세) FY2012-13 법인세 수입은 331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2% 증가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특히 이자비용 및 배당)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4% 증가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2-13 재화 및 용역세 수입(Goods and Services Tax, GST)은 과세 대상 소비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3.8% 증가, 향후 5년간 연평균 4.9% 증가 전망
- (관세) FY2012-13 관세 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 대비 2억캐나다달러(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의 증가로 향후 5년간 연평균 4.8% 증가 전망
 -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약 10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서서히 감소 전망

8) 실질소득수입과 결합된 소득세제시스템의 누적적인 성격 반영

- (고용보험) FY2012-13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보험 대상소득의 증가 및 2013년 고용보험료율이 100캐나다달러당 1.88캐나다달러로 수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8.3% 증가할 전망이며, 2013-014년부터 2015-16년까지 연평균 6.9% 상승 전망
- Budget 2012는 고용보험계정이 균형을 달성하기까지 보험료 인상폭을 보험대상소득 100캐나다달러당 5센트로 제한할 계획이며, 고용보험계정은 2016년까지 누적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됨

<표 I-3> 세입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205	12,55	1,321	1,404	1,487	1,569	1,642
법인세	340	331	355	378	394	411	427
기타소득세	53	53	57	60	65	69	73
총소득세(A)	1,598	1,639	1,732	1,842	1,946	2,043	2,142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84	294	308	323	339	356	373
관세	39	41	42	45	47	49	51
기타소비세	109	109	107	108	107	105	105
총소비세(B)	431	444	457	475	493	510	530
총조세수입(C=A+B)	2,029	2,083	2,189	2,317	2,439	2,553	2,672
고용보험(D)	186	201	218	233	246	239	213
기타세입(E)	273	260	265	266	276	296	313
총세입(F=C+D+E)	2,488	2,544	2,672	2,816	2,961	3,088	3,198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6.8	6.9	7.0	7.1	7.2	7.3	7.3
법인세	1.9	1.8	1.9	1.9	1.9	1.9	1.9
재화 및 용역세	1.6	1.6	1.6	1.6	1.6	1.7	1.7
총조세수입	11.5	11.5	11.7	11.8	11.9	11.9	11.9
고용보험	1.1	1.1	1.2	1.2	1.2	1.1	1.0
기타세입	1.5	1.4	1.4	1.4	1.3	1.4	1.4
총세입	14.1	14.0	14.2	14.3	14.4	14.4	14.3

출처 :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3.5

나. 세출

- 2012년 11월 발표된 프로그램 지출 전망에 따르면 FY2012-13 총지출은 2,509억캐나다 달러(GDP 대비 13.8%)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 이전지출, 직접 프로그램 지출을 포함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인구고령화와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해 FY2012-13 404억 캐나다달러에서 FY2017-18 526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5.4%로 명목 GDP 증가율(4.4%)보다 빠른 속도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이 지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는 향후 FY2012-13 520만명에서 FY2017-18 620만명까지 연평균 3.5% 증가 예상

- (고용보험) FY2012-13 고용보험지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82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연평균 2.3%의 증가율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아동지원)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및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포함한 아동지원 지출은 인플레이션 조정과 급여 대상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증가 전망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FY2012-13의 58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7-18의 711억캐나다달러로 증가될 전망이며, 특히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은 연간 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캐나다 보건지출(The Canada Health Transfer: CHT),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 재정균등화교부금 및 준주교부금(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등을 포함
 - 정부는 캐나다 보건지출(CHT)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소 3.0% 이상 증가시키기 위한 법안을 준비 예정

- (직접 프로그램 비용) 직접 프로그램 비용은 FY2012-13에 1,208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4-15 1,186억캐나다달러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FY2017-18까지 1,222억캐나다달러로 다시 증가될 전망이며, 직접 프로그램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FY2012-13에 6.7%에서 FY2017-18에 5.4%로 감소
 - 직접 프로그램 비용은 국방부 및 기타 부처의 경비, 공기업(Crown Corporation) 경비, 농가 지원, 주정부의 천연자원 로열티, 학자금 보조 등을 포함
 - 정부의 새로운 회계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세액공제(근로자 소득 혜택, 의료비 세금 감면, 캐나다영화 제작 세금감면, 과학 연구 및 연구개발 세금감면 등)를 직접 프로그램 지출 하위의 이전지출로 분류함

<표 I-4>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380	404	427	449	473	499	526
고용보험	176	182	189	194	195	200	204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127	129	132	135	138	140	142
소계(A)	684	715	747	779	806	839	872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건강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87	408	428	447	470	494	514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9	178	187	194	201	209	218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2	-33	-35	-37	-39	-41	-44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22	21	20	20	20	20	20
기타	23	12	4	4	3	2	2
소계(B)	568	586	603	627	655	685	711
직접 프로그램 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81	375	371	370	366	363	360
감가상각(Capital amortization)	46	52	54	58	60	63	65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254	264	252	246	248	244	250
운영비 동결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06	517	510	513	524	533	547
소계(C)	1,188	1,208	1,189	1,186	1,198	1,203	1,222
총프로그램 지출(A+B+C)	2,440	2,509	2,539	2,592	2,659	2,726	2,804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3.9	3.9	4.0	4.0	3.9	3.9	3.9
정부부문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2	3.2	3.2	3.2	3.2	3.2	3.2
직접 프로그램 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6.7	6.7	6.3	6.0	5.8	5.6	5.4
총프로그램 지출	13.8	13.8	13.5	13.2	12.9	12.7	12.5

출처 :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Table 3.6

<참고 1> 캐나다 추경예산 내용⁹⁾

- FY2011-12 추경예산은 2012년 5월 17일 추경(A), 2012년 11월 8일 추경(B)가 상정되어 총 2회 편성
- FY2012-13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는 23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을 본세출 예산안(Main Estimates)의 2.3%인 21억캐나다달러 편성
 - 각 부처·관청별 퇴직금 지급에 8억 5,000만캐나다달러
 - 의회의사당(Parliament Hill) 건물 및 주변환경 개선에 2억 4,000만캐나다달러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협정(Copenhagen Accord)에 따라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활성화에 2억 250만캐나다달러
- FY2011-12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는 28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을 본세출 예산안(Main Estimates)의 약 2.7% 수준인 25억캐나다달러 편성
 - 캐나다 원주민 수자원 및 폐수 관리 계획(First Nations Water and Wastewater Action Plan) 지원에 1억 6,200만캐나다달러 편성
 -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을 위한 산업조사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에 9,100만캐나다달러 편성

<표 I-5> 추경예산 편성내역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일반예산 (Budgetary)	투융자예산 ¹⁾ (Non-Budgetary)
추경 (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1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2	0
	합계	23	0
추경 (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5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	0
	합계	28	0

주: 1) 투융자예산은 투자(investment)·융자(loan)·선급금(advances)에 해당하는 지출로 정부 금융자산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예산인. 박기백 외, 「주요국의 예산편성 방식」, 한국조세연구원(2004. 12) 참고

9) 추경안(A), (B)는 FY2012-13 본세출 예산안(Main Estimates)이 Budget 2012보다 먼저 상정됨에 따라 Budget 2012에서 계획하였으나 본세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출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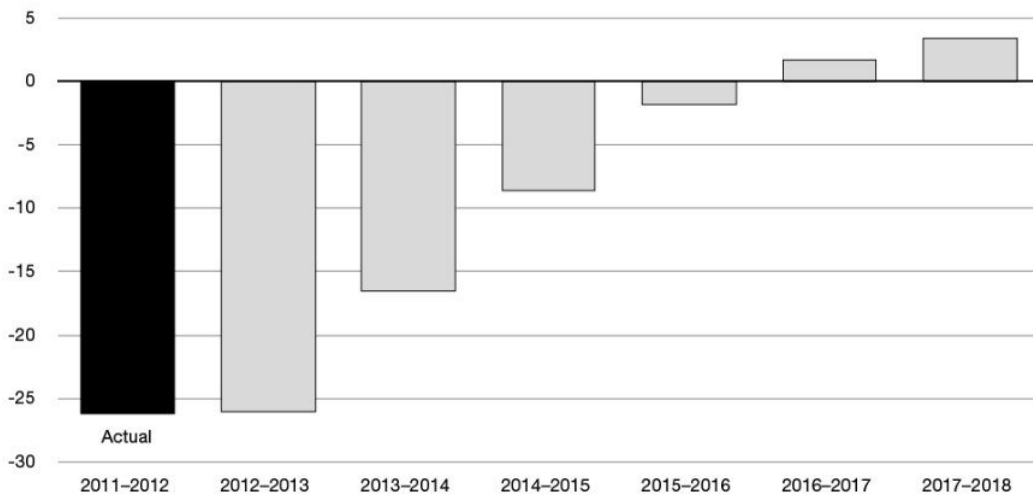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2012년 예산안은 2010년 및 2011년 예산안에서 시행된 부처별 지출검토(Review of departmental spending)를 지속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부처별 지출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지출절감 노력으로 예산안 작성시점 기준으로 약 52억캐나다달러를 절감 계획
 - 부처별 지출검토는 노인, 아동, 실업자에 대한 이전지출 및 보건 및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연방 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중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함
 - 절감액은 총 753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출검토(Review Base) 중 6.9% 규모이며, FY2016-17 연방정부 프로그램 지출의 약 2% 수준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세부 절감 내역은 <표 II-7> 참고)

[그림 I-2] 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출처: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2. 11), Chart 1.5

<표 I-6> 부처별 지출 절감 계획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계획)	2012-13	2013-14	2015-16	진행중	총프로그램지출 대비 비중 ¹⁾
캐나다원주민·북부 문제부	26.9	60.1	165.6	165.6	0.06
국회	8.3	8.8	16.4	16.4	0.01
농업·농업식품부 (AAFC)	17.1	168.5	309.7	309.7	0.12
국세청(CRA)	14.8	87.0	225.4	253.1	0.09
시민권 및 이민부(CIC)	29.8	65.2	84.3	84.3	0.03
환경부	19.5	56.4	88.2	88.2	0.03
재무부	20.6	32.6	34.6	38.6	0.01
수산해양부(DFO)	3.8	13.4	79.3	79.3	0.03
외무부	72.4	116.6	169.8	169.8	0.06
보건부	111.7	218.5	309.9	309.9	0.12
문화유산부	52.2	130.7	191.1	191.1	0.07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	10.6	64.7	286.7	286.7	0.11
산업부	89.2	182.7	217.3	217.3	0.08
국제지원통합체계(IAE)	180.7	242.1	377.6	377.6	0.14
법무부	21.2	69.0	76.9	76.9	0.03
국방부	326.8	706.1	1,119.8	1,119.8	0.42
천연자원부	68.3	86.0	108.3	108.3	0.04
추밀원사무처	3.7	6.5	12.2	12.2	0.00
공공안전부	179.4	370.7	687.9	687.9	0.26
공공서비스위원회	2.2	4.5	9.0	9.0	0.00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부(조달부)	1.5	28.1	85.3	177.6	0.07
지역개발국	26.7	73.4	86.9	86.9	0.03
단일 이메일 시스템 (shared service canada)	74.7	104.5	150.0	150.0	0.06
교통부	63.4	97.2	152.6	152.6	0.06
국채	10.4	18.6	30.2	30.2	0.01
보훈부	36.1	49.3	66.7	36.9	0.01
절감분 합계	1,472.1	3,061.2	5,141.5	5,235.7	1.9

주: 1) FY2016-17 연방정부 프로그램 지출 대비 절감액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5.1

- 재무부는 국내 및 국외 채무의 관리를 위한 중기 채무전략(Medium-Term Debt Strategy) 수립
 - 예산서 및 재무결산서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Market debt)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Medium-Term Debt Strategy)을 수립
 - 시장채무는 단기공채, 유가증권, 소매채무, 외채, 연금채권으로 구성
 - FY2012-13 연방채무 전략은 ‘안정적·저금리 자금조달’을 목표로 하며, 단기공채(Treasury bills) 발행 비중을 줄이고 10년채 발행(10-year bond issuance) 비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할 계획
 - FY2012-13 총 시장채무 약 6,620억캐나다달러 중 단기공채는 약 1,590억캐나다달러, 유가증권은 약 4,810억캐나다달러 비중 차지
 - 금융 자산의 유동성을 국내 예금 및 외화 준비금의 형태로 확보하는 유동성 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을 통해 자금 시장에서의 지불 능력 및 캐나다 연방채무의 신뢰성 제고
 - 유동성 플랜(Prudential Liquidity Plan)으로 캐나다 정부의 유동성 수준이 약 350억 캐나다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

<표 I-7> FY2012-13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계획)
단기공채(Treasury bills)	192	176	163	163	159
유가증권(Marketable bonds)	295	368	416	445	481
소매채무(Retail debt)	13	12	10	9	9
외채(Foreign debt)	10	8	8	11	13
연금채권(CPP bonds)	0.5	0.5	0	0	0
총 시장채무	511	564	597	628	662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A3.2

나. 경기부양책

□ FY2012-13 예산안 내용 참조

<표 I-8> 캐나다 FY2012-13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1-12	2012-13	2013-14	합계
비즈니스혁신 및 기초연구분야 지원(Supporting Entrepreneurs, Innovators and World-Class Research)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255	171	426
연구,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200	141	341
소계		454	312	767
기업투자환경개선(Improving Condi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책임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78	87	165
천연자원 투자		136	-24	112
신흥시장 개방 및 거래망 확대		43	47	90
조세시스템의 중립성 증진			-10	-10
농어업 종사자 경제적 환경 개선		38	17	55
캐나다의 재정분야 강점 개발		3	3	6
소계		298	120	418
직업훈련, 사회기반시설, 시장 참여기회 확대 지원(Investing in Training, Infrastructure and Opportunity)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51	186	40	277
고용보험사업 개선		177	305	482
원주민의 노동시장진입 기회 확대		92	129	221
신속하고 유동적인 경제적 이민시스템 구축		5	4	9
사회기반시설 강화		150	124	274
소계	51	609	601	1,262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건강 및 안전 보장		37	37	73
지역사회 투자		228	204	431
가계 지원		4	7	12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29	32	60
소계		297	279	577
합계	51	1,659	1,313	3,023

출처: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2(2012.3.29), Table 3.0

- 모기지 대출(Mortgage) 조건 강화대책 시행(2012. 6. 21)
 - 캐나다 재무부는 주택금융 시스템¹⁰⁾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기지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4가지 조치를 발표
 - (최장 분할상환 기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예정이며, 상환기간 단축으로 인한 총 이자부담액 및 부채 해소기간 감소로 가계 부담 경감 기대
 - * '08년 35년→ '11년 30년으로 단축한 바 있음
 - (모기지 한도액) 모기지 한도액을 주택순가치의 85%에서 80%로 하향조정
 - (대출 가능 주택가격) 1백만캐나다달러 이하로 제한
 - (GDS/TDS 비율¹¹⁾ 상한선) 최대 GDS(Gross Debt Service Ratio) 비율을 39%로, 최대 TDS(Total Debt Service Ratio) 비율을 44%로 고정하여 경기충격 및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캐나다 가계 보호

다. 기타

- 2012년 예산안은 장기재정 측면에서 캐나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수혜자격 기준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
 -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는 현행 불입요율인 9.9% 유지 시 장기재정 측면에서 향후 최소 75년간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고, 현 불입요율을 유지할 계획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 및 소득보장지원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수혜자격 기준 연령을 2023년 4월부터 2029년 1월까지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캐나다 정부가 2011년 11월 제정한 공동출자공인연금법(The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Act, PRPP)에 따라 향후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퇴직소득 확대

10) 캐나다는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정부보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모기지보험프로그램(government backed mortgage insur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주택금융제도의 국제간 비교 및 정책제안」, 2011.7 참고)

11) GDS 비율(Gross Debt Service Ratio)은 모기지 상환금액, 재산세, 난방비 등의 일정 부분 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가구 수입 대비 대출금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TDS(Total Debt Service Ratio)는 총 소득에 대한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금액과 모기지 이외의 부채 상환에 들어가는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PRPP는 형편상 사설연금에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출자로 사설연금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낮은 투자비용으로 은퇴자금 마련 가능
- PRPP 투자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들에게 세금유예(tax-deferred saving) 혜택을 제공받음¹²⁾

12) 기존 사설연금(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과 마찬가지로 PRPP도 투자금액에 대해서 일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향후에 연금 지급 시 세금을 납부하나, 개인출자만 가능한 RRSP와 달리 PRPP는 공동출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RRSP와 다르게 투자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Ⅱ. 일 본

- FY2013: 2013년 4월 ~ 2014년 3월

- 2013 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12. 8. 17 FY2013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 2012. 9. 12 FY2013 각 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2. 11. 19 FY2013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 조서 공개
 - 2013. 1. 16 FY2013 각 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수정
 - 2013. 1. 24 FY2013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 2013. 1. 29 FY2013 예산 정부안 결정

- 출처:
 - 概算要求組替え基準閣議決定 (2012.8.17)
 - 中期財政フレーム(平成25年度~平成27年度) (2012.8.31)
 - 經濟財政の中長期試算 (2012.8.31)
 - 平成25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額等 (2012.9.12)
 - 各府省の概算要求書、特別重点要求・重点要求一覧及び政策評価調書公開ページへのリンク先一覧 (2012.11.19)
 - 平成24年度補正予算案 (2013.1.15)
 - 平成25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入れ替え要求額 (2013.1.16)
 - 平成25年度予算編成に向けた考え方 (2013.1.21)
 - 平成25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3.1.24)
 - 我が国の財政事情 (2013.1.25)
 -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3.1.28)
 - 平成25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3.1.29)
 -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2013.1.29)
 - OECD Economic Outlook 92 (2012.11)

- 환율: 100엔 = 약 1,413.14원 (2012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4조 3,851억달러(우리나라 2.9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31.4%(우리나라 110.3%)
- 인구: 1억 2,878만명(2011년 기준 추정치)
-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2013년도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부흥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 중반대의 성장률이 예상됨
 - 그러나, 일본은행(BOJ)을 제외한 주요기관에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2013년 일본 경제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
-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9.0%, 국가채무 비율은 224.3%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2013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경제 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점적인 예산 배분, 이를 통한 예산 낭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구성

◇ 예산안 내용

- FY2013 조세 및 인지 수입은 전년 대비 7,500억엔(1.8%) 증가한 43조 960억엔으로 예상
- FY2013 세출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92조 6,115억엔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일본 경제재생을 위해 3개 분야(부흥·방재 대책,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예산 배분
- 재정건전화
 - FY2013 예산 편성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지출의 효율화에 임할 것을 요구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4.18	FY2012 「재정법 제 46조에 근거한 국민에의 재정보고」 발표	201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2.7.27	「FY2012 연차경제재정보고」 발표	
2012.8.10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위한 소비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2012.8.17	FY2013 예산 개선요구기준 각의 결정	
2012.8.17	「FY2012 경제동향에 대해서(내각부 연중시산)」 발표	
2012.8.31	중기재정프레임(FY2013~FY2015) 발표	201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2.8.31	경제재정 중장기 전망 발표	
2012.9.12	FY2013 일반회계 개선요구액 발표	
2012.10.1	일본의「재정관계자료(2012.9)」 발표	
2012.10.26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등의 활용(제1차)」각의 결정	
2012.11.30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등의 활용(제2차)」각의 결정	2013년 1월 제1호 재정동향
2012.11.30	「일본재생가속프로그램~경제의 재생과 재해지의 부흥을 위하여~」각의 결정	
2013.1.11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에 대해서」 발표	
2013.1.15	FY2012 1차 추경안 발표	2013년 2월 제1호 재정동향
2013.1.16	FY2013 일반회계 개선요구액 수정 발표	
2013.1.21	「FY2013 예산편성에 대한 소고 - 재정운영의 방향」 발표	
2013.1.24	「FY2013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 발표	
2013.1.28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발표	
2013.1.29	FY2013 예산 정부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일본의 2012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1.0%, 명목성장률은 0.3%로 전망
 - 일본 경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수요 및 정책 효과의 발현 등으로 2012년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을 예상
 - 그러나,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 및 생산 감소, 내수침체 등 경기 하향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2013년 1월, 정부가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본 대책의 정책 효과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예상
 - 물가동향은 완만한 디플레이가 계속될 전망, 소비자물가는 4년 연속 하락

- 2013년도 일본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함과 동시에 부흥정책의 추진에 따라 꾸준한 수요의 증대와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국내수요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성장률) 2013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2.5%, 명목성장률은 2.7%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수치임
 - (물가) 2013년 소비자물가(종합)상승률은 0.5%로 예상, GDP 디플레이터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고용)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긴급경제대책 시행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
 - [고용자 수] 전년 대비 0.9% 증가한 5,559만명으로 전망
 - [완전실업률] 고용자 수의 증가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한 3.9%로 전망
 - 향후, 유럽의 정부부채 문제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외환시장의 동향, 전력 공급 제한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긴급경제대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함은 인정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주요기관의 2013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반된 결과를 보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1.2%(2013.1), 세계은행(WB)은 0.8%(201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7%(2012.11)로 전망
- 일본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를 종합한 닛케이NEEDS에서는 1.3%(2012.12)로 전망
- 반면, 일본 중앙은행(BOJ)은 FY2013 일본 경제성장률을 1.6%(2012.10)에서 2.3%(2013.1)로 상향 조정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1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1		2012		2013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73.3	474.9	487.7	△1.4	0.3	0.3	1.0	2.7	2.5
민간최종소비지출	287.3	289.2	294.2	0.9	1.6	0.7	1.2	1.7	1.6
민간주택투자	13.5	13.8	14.8	4.2	3.7	2.3	3.1	7.5	6.8
민간설비투자	63.8	63.1	65.4	3.1	4.1	△1.1	△0.7	3.6	3.5
민간재고품증가 (기여도)	△2.8	△2.4	△2.0	(△0.5)	(△0.5)	(0.1)	(0.1)	(0.1)	(0.1)
재화서비스수출	70.9	69.0	73.6	△3.9	△1.7	△2.8	△1.8	6.8	4.3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77.3	79.3	84.2	11.2	5.2	2.5	4.0	6.2	3.7
내수기여도				0.8	1.3	1.2	1.9	2.7	2.5
민간				0.6	1.1	0.4	0.8	1.8	1.7
공공				0.2	0.2	0.8	1.0	0.9	0.8
외수기여도				△2.2	△1.0	△0.8	△0.9	△0.0	0.0
노동·고용		(만명)			(%)				
노동력인구	6,578	6,547	6,550	△0.8		△0.5		0.0	
취업자수	6,279	6,270	6,297	△0.3		△0.1		0.4	
고용자수	5,501	5,511	5,559	△0.1		0.2		0.9	
완전실업률	4.5	4.2	3.9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1.0	△2.9	3.4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1.4	△1.2	0.8						
소비자물가지수	△0.1	△0.1	0.5						
GDP디플레이터	△1.7	△0.6	0.2						
국제수지		(조엔)							
무역서비스수지	△5.3	△9.3	△9.3						
무역수지	△3.5	△6.4	△6.6						
수출	62.6	61.0	65.3	△2.8		△2.5		7.0	
수입	66.1	67.4	72.0	14.0		2.0		6.8	
경상수지	7.6	4.4	5.0						
GDP 대비 경상수지(명목, %)	1.6	0.9	1.0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3.1.28

나. 재정 전망

-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9.0%를 기록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9.2%로 추정되는 2012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포함할 경우 2013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9.0%에서 10.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3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24.3%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3년도 채권 잔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37조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채권 잔액 비율은 154%로 전망
 - 국가 및 지방 장기 채무는 지난해보다 약 35조엔 증가한 977조엔(GDP 대비 200%)로 전망
 - 국채의존도는 46.3%로 전망

<표 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조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8.8	△8.7	△9.1	△9.2	△9.0
재정수지 ²⁾	△10.1	△9.5	△10.0	△10.2	△10.2
국채 비율	188.7	192.7	205.3	214.3	224.3
채권잔액 비율	125(594)	133(636)	142(670)	150(713) ³⁾	154(750)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173(820)	179(862)	189(895)	198(942)	200(977)
국채의존도 ⁴⁾	51.5	44.4	42.5	49.2	46.3

주: 1)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2」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2」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단년도 특수요인은 제외, 2013년 예산 정부안 내용 포함하지 않음

3) 1차 추경을 포함한 채권 잔액 비율

4)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13.1.25

2. 예산기조

- 2013년 개산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2012.8.17)
 - 2013년도 예산은 중점적·전략적인 예산의 대담한 편성을 위해 중점 배분해야하는 분야와 예산의 재편성을 위한 구조 등 기본방침 및 특별중점요구로 구성

<표 II-3> FY2013 예산의 개산 요구 기준

FY2013 예산을 포함한 당면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개념
1. 재정건전화목표(FY2015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적자를 FY2010 수준까지 반감) 달성을 위해 작년 개정한 중기재정프레임(FY2012~FY2014)에서 결정된 세출 범위 71조엔을 준수 2. 「일본재생전략」 ¹⁾ 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의 재생·성장을 위한 대담한 예산편성에 의해 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 3.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개혁(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행정의 효율화 및 간소화를 철저히 행함 4.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개혁에 수반하여 FY2014부터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경제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동향 등을 살펴본 후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실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방침
1. 동일본 대지진재해로부터의 부흥대책, 재해방지 및 감소 대책에의 중점화 2. 그린(Green)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재생전략」에 입각한 예산분배의 중점화 3. 부처 단위를 넘어선 대담한 예산 편성에 이바지하는 편성 구조의 도입

주: 1) 정부의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FY2020까지의 경제성장전략을 정리하여 결정한 것으로 2012년 7월 31일 각의결정됨. ①재해지역 부흥을 최우선, ②의료, 환경, 농림어업의 세가지를 중점분야로 하고 중소기업 활력향상을 포함한 4대 프로젝트 실시, ③2020년까지 평균 명목 3%, 실질 2%의 경제성장을 목표(디플레 조기탈각, 급속한 엔고진행 대응), ④예산편성의 중점화(정책중심, 횡단적 조직), ⑤진척관리의 철저함을 기본 방침으로 함

자료: 일본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の概算要求組替え基準について」, 2012.8.17

- 2013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발표(2013.1.24)
 - 기본적으로 경제 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점적인 예산배분, 이를 통한 예산 낭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구성
 - i) 2012년도 제1차 추경 예산과의 일체적인 편성
 -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과의 일체적인 예산편성으로 디플레이션 조기 탈피 및 성장력 강화를 도모

- ii) 경제 재생 실현을 위한 효과적·효율적인 편성
- iii) 재정에 대한 신임 확보를 위한 편성
 - 재정건전화 목표를 감안하여 국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목표로 함
- 예산 배분을 대담하게 검토하고 부흥·방재 대책,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 3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
 - i) 부흥·방재 대책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재생 가속화, 인프라 노후화 대책 및 사전 방재·감재 대책, 생활공간의 안전 확보 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
 - ii)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 민간 투자의 환기에 의한 성장력 강화, 중소기업 경영 지원 및 자금 조달의 원활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iii) 생활의 안심·지역 활성화
 - 안심할 수 있는 의료·육아·교육 체제 추진 및 생활공간의 질적 향상, 해상 보안 체제 강화 등을 포함
- 일본의 악화된 재정 상황과 동일본 대지진 및 지역 방재, 경제 활성화 등에 대처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출 분야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3. 예산안 내용

<표 II-4> FY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2	FY2013	비교증감액	증감율
	추정(A)	전망(B)	(B-A)	(%)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423,460	430,960	7,500	1.8
기타 수입	37,439	40,535	3,096	8.3
국채발행	442,440	428,510	△13,930	△3.1
연금특례공채급	-	26,110	26,110	-
계	903,339	926,115	22,776	2.5
세 출				
국채비	219,442	222,415	2,973	1.4
기초재정수지 경비	683,897	703,700	19,803	2.9
계	903,339	926,115	22,776	2.5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2013.1.29

가. 세입

- FY2013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조 2,776억엔(2.5%) 증가한 92조 6,115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 FY2012 예산(당초) 대비 1.8% 증가한 43조 960억엔 예상
 - 전년 대비 상속세(4.5%), 담배세(4.9%), 항공기연료세(13.6%), 석유석탄세(19.0%) 등 큰 폭 증가한 반면, 법인세(△1.1%), 자동차증량세(△7.4%), 관세(△1.4%) 등은 감소
 - (기타 수입) FY2012 예산(당초) 대비 3,096억엔(8.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채발행액) FY2012 예산(당초) 대비 1조 3,930억엔(△3.1%) 감소한 42조 8,510억엔으로 조세 및 인지수입(세수)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¹³⁾

13) 지난 3년간 국채발행액이 세수를 초과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함
 FY2012: 세수(42.3조엔) < 국채발행액(44.2조엔), FY2013: 세수(43.1조엔) > 국채발행액(42.9조엔)

<표 II-5> FY2013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2		FY2013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¹⁾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10,940	112,040	114,620	3,680	3.3	2,580	2.3
신고소득세	23,970	23,970	24,360	390	1.6	390	1.6
(소득세 계)	(134,910)	(136,010)	(138,980)	(4,070)	(3.0)	(2,970)	(2.2)
법인세	88,080	89,920	87,140	△940	△1.1	△2,780	△3.1
상속세	14,300	15,040	14,950	650	4.5	△90	△0.6
소비세	104,230	103,160	106,490	2,260	2.2	3,330	3.2
주세	13,390	13,390	13,470	80	0.6	80	0.6
담배세	9,450	9,450	9,910	460	4.9	460	4.9
휘발유세	26,110	26,110	25,660	△450	△1.7	△450	△1.7
석유가스세	110	110	11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440	440	500	60	13.6	60	13.6
석유석탄세	5,460	5,460	6,500	1,040	19.0	1,040	19.0
전원개발촉진세	3,290	3,290	3,300	10	0.3	10	0.3
자동차중량세	4,170	4,170	3,860	△310	△7.4	△310	△7.4
관세	9,100	9,100	8,970	△130	△1.4	△130	△1.4
톤세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0,320	10,320	11,020	700	6.8	700	6.8
합계	423,460	426,070	430,960	7,500	1.8	4,890	1.1

주: 1) 추경은 1차까지 포함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3.1.29

□ FY2013 세제개정 대강¹⁴⁾

- ‘성장과 부의 창출의 선순환’ 실현을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의 환기, 고용 및 소득 증대, 중소기업 대책, 농림 수산업 대책 관련 세제 조치를 취함
 -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주택 취득 관련, 부흥 지원 관련 등의 세제 조치를 포함

14) 본 내용은 재무성에서 발표한 「2013년 세제개정의 대강(각의 결정)」을 요약한 것으로 FY2013 예산 정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재무성, 「平成25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13.1.29)

- (소득세)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조뿐만 아니라, 과세 소득 4,000만엔에 기존 40%에서 45%로 고소득층 과세 강화
- (금융·증권 세제) 10년간 500만엔의 비과세 투자가 가능한 ISA 창설
 - ISA는 비과세 계좌의 소수 금액 상장 주식 등에 관한 배당 소득 또는 양도 소득 등의 비과세 조치를 의미
- (주택 세제) 올해 말 종료되는 주택론 감세 제도(주택 용자 감세)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연장
- (부흥 지원 세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재 집단 이전 촉진 사업에서 부수 토지 매입에 관한 양도 소득에 대해 5,000만엔의 특별 공제를 창설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이재민의 경우 주택 용자 감세 최대 공제액을 600만엔으로 인상(현행 360만엔)
- (상속세)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55%로 인상
- (법인세)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경우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중 3%를, 인건비를 5% 이상 인상할 경우 인건비 증액분의 10%를 법인세에서 차감 등

나. 세출

- FY2013 세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92조 6,115억엔으로 편성
 - 공공사업 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
 - 사회보장관계비(10.4%)와 공공사업관계비(15.6%)의 증가가 두드러짐
 - 국채비는 1.4% 증가한 22조 2,415억엔으로 전망됨
- FY2013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9조 1,224억엔 편성
 - [생활보호] 생활·의료 부조 기준의 경우 전문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연령·세대 인원 및 지역 차이에 의한 영향 등을 조정
 - [연금] 연금 국고 부담의 경우 '11년 정산 금액(약 3,300억엔) 확대를 반영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대비 1.2% 감소한 16조 3,927억엔 편성

- [공무원 인건비] 조례 개정 등의 준비 기간 확보를 고려하여 '13년 7월부터 7.8% 삭감할 예정
- [지방 재정] 지방 일반 자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9.8조엔 편성
- [지방 경제] 긴급 방재 및 감재 사업비(0.46조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건강 증진 사업비(0.30조엔) 편성
 - (방위관계비) 전년 대비 0.8% 증가한 4조 7,538억엔으로 11년 만에 처음 증액 편성
 - 이는 남서 방면의 경계 감시·안전 확보 및 방위 체제의 강화 등에 기인
 - (공공사업관계비) 전년 대비 15.6% 증가한 5조 2,853억엔 편성
 - FY2012 추경예산과 함께 민간 투자 유발 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프라 노후화 대책과 방재 대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
 - 지역자주전략교부금의 폐지로 인해 약 6,400억엔 정도 자원 확보

<표 II-6> FY2013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2	FY2013	비교증감액	증감률
	당초(A)	전망(B)	(B-A)	(%)
사회보장관계비	263,901	291,224	27,323	10.4
문교 및 과학진흥비	54,113	53,687	△426	△0.8
국채비	219,442	222,415	2,973	1.4
연금관계비	5,712	5,045	△668	△11.7
지방교부세교부금	165,940	163,927	△2,013	△1.2
방위관계비	47,138	47,538	400	0.8
공공사업관계비	45,734	52,853	7,119	15.6
경제협력비	5,216	5,150	△66	△1.3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802	1,811	9	0.5
에너지대책비	8,144	8,496	352	4.3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1,041	10,539	△502	△4.5
기타경비	62,556	59,931	△2,625	△4.2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9,100	-	△9,100	-
예비비	3,500	3,500	-	-
합계	903,339	926,115	22,776	2.5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3.1.29

<참고 1> FY2013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세입	
부흥특별세	12,240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12,462
세외수입	112
부흥채	19,026
계	43,840
세출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37,178
부흥채비	662
동일본대지진부흥예비비	6,000
계	43,840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予算政府案」, 2013.1.29

<참고 2> FY2012 1차 추경예산

-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으로 10조 3,000억엔 투입, 총 13조 1,054억엔의 추경예산을 결정(2013.1.15)
 - (목표) 대담한 금융정책,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의 ‘세개의 화살(三本の矢)’을 강력하게 실행함으로써 ‘경제재생’, ‘부흥’, ‘위기관리’를 실현
 - (기본자세)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가속 및 방재의 강화, 적극적인 경제재정 운영, 성장을 위한 전략의 실행·실현
 - (경기부양지출) 긴급경제대책 규모는 약 20조 2,000억엔으로 10조 3,000억엔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
 - (기대효과) 실질 GDP의 약 2% 인상 및 약 60만명의 고용창출을 기대

<FY2012 1차 추경예산 일반회계 프레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사전방재·감재 등	22,005	조세 및 인지수입	2,610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26,924	세외수입	1,495
생활의 안심·지역활성화	31,017	국채발행	52,210
기타 경비	2,397	전년도 잉여금	8,706
기본 경비	△17,322		
부흥 특별회계에 전입	14,493	전년도 잉여금(부흥재원)	11,165
국가공무원 등 인건비	△3,328		
기초연금 국고부담 등	25,842	연금특례공채금	25,842
합계	102,027	합계	102,027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긴급경제대책재정지출(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 지출 합계(중복분 제외)): 102,815억엔
 3. 긴급경제대책재정지출에 일반회계세출 4, 8을 포함한 추경 예산 전체 지출은 131,054억엔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補正予算案」, 2013.1.15

<참고 3> 중기재정프레임(국가전략실, 2012.8.31)

- (기본인식)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개혁 실현과 동시에 「일본재생전략」에 입각하여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및 후쿠시마 재생을 최우선으로 함
- (기간) 재정운영전략으로 정했던 FY2015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반감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관점에서 FY2013~FY2015를 대상으로 적용
- (구체적인 내용)
 - 국채발행액
 -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국채발행을 억제, 이에 따라 2013년도 신규 국채발행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 수준(약 44조엔)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세입 측면
 - 소비세법 개정법안 등과 삼당합의에 기초한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각 연도 예산편성 및 세제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세출 측면
 -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상회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함
 - FY2014, FY2015에는 사회보장 등에 관한 경비를 각 연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하여 ‘세출의 대략적인 한도’에 가산함

<FY2013~FY2015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단위: 조엔)

	세출의 대략적인 한도		
	FY2013	FY2014	FY2015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¹⁾	71	71	71
경제위기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²⁾	0.9	0.9	0.9

주: 1) 2012년 당초 예산은 약 68.4조엔, 그 외 연금특례공채 발행을 통해 연금 재정에 이월하는 연금 차액분(2.6조엔)이 포함

2) 2012년도 이후의 세출 한도는 현 단계에서 경기 상황을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

자료: 국가전략실, 「中期財政フレーム(平成25年度~平成27年度)」, 2012.8.31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예산의 중점화」¹⁵⁾

- FY2013 예산안의 핵심내용으로 일본의 경제재생 실현을 위해 3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조치
 - 예산의 중점적 배분을 통한 경제재생 실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함
 - 공공사업분야에 집중적인 예산 분배로 인프라 노후화 대책 및 사전 방재 대책 등 긴급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
 -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위력 정비를 위해 국방 예산에 중점적으로 배분

- 「예산의 중점화」의 3가지 분야
 - 부흥·방재 대책
 -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가속(부흥특별회계)
 - 후쿠시마 부흥·재생 가속화(신규), 동일본 대지진 부흥 교부금(3,095억엔 증), 피해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신규) 등
 - 사전 방재·감재 등
 - 도로 및 하천 관리 시설 등 유지 관리(414억엔 증), 수도 시설의 내진화 및 노후 대책(26억엔 증), 공립학교 등의 내진화(△100억엔) 등
 -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
 - 민간 투자 환기에 의한 성장력 강화
 - 에너지 연구 개발 지원(410억엔 증), 연구 개발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235억엔 증), 핵심 교통 인프라 등의 정비 추진(51억엔 증) 등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기술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및 신기술 전개 등 지원(20억엔 증), 사

15) FY2013 정부 예산안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의료 부조) 후발의약품 사용 원칙화 및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강화
- 제도의 폐지·전환
 - 농업인 호별 소득보상제도 변경
 - 2013년에는 ‘경영 소득안정대책’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소요 금액을 조사
 - 일괄 교부금 폐지 및 전환
 - 지역 자주 전략 교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각 부처 교부금 등으로 전환하여 중요한 과제에 대응 및 사무 절차 간소화 등의 운영 개선을 실시
- 기타
 - 공립학교 교직원 수 조정, 과학 연구 보조금에 대한 시스템 도입, 장학금 대출의 경우 정액 반환 제도에서 졸업 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환하는 제도(소득연동반환제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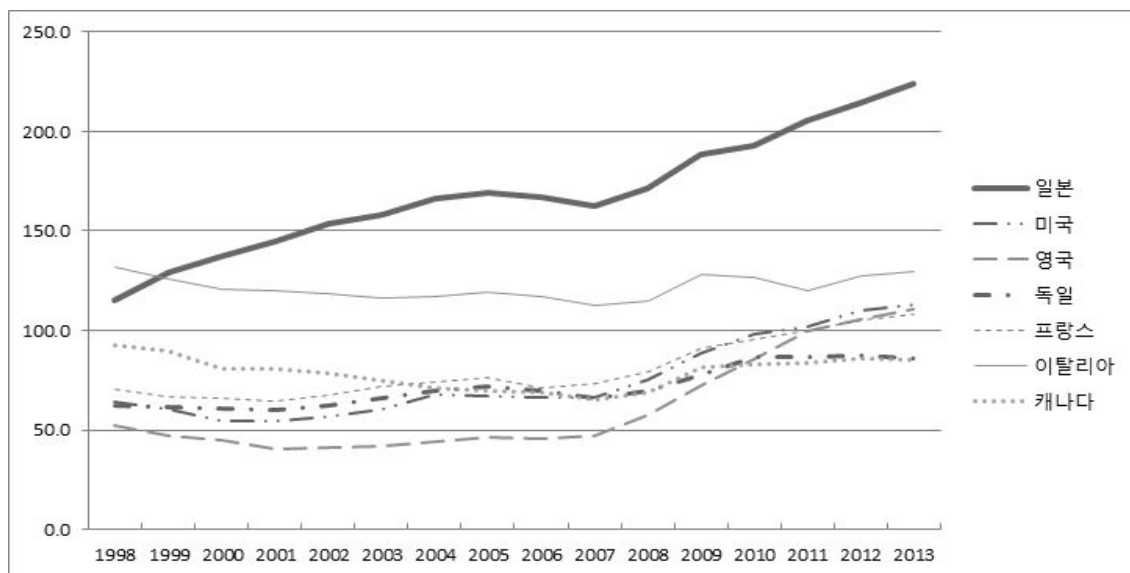
2) 「FY2013 예산 편성에 대한 소고 - 재정운영의 방향」¹⁷⁾

- (재정 현황) OECD Economic Outlook 92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명목 GDP 대비 214%로 그리스보다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중 최악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매년 세출과 세입이 크게 괴리되는 상황
 - [세입]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감세정책과 지속적인 장기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
 - [세출]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확대 및 급속도로 증가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보장 관계비 증가 등에 따른 세출 확대
 - 채권발행액은 해마다 누증하고, 채권 잔액은 2012년 말 713조엔까지 오를 전망
 - 사회보장관계비는 1990년도 결산과 비교 시 약 2.3배로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비용 증가가 지난 20년 동안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 140조엔을 넘는 총 국채발행액(부흥채권 제외)과 세수 규모의 3배를 상회하는 국채 상환액

17) 본 내용은 지난 1월 21일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의 「平成25年度予算編成に向けた考え方」 중 재정건전화 관련 부분인 ‘Part 1. 재정운영의 방향’을 요약함

[그림 II-1] 국가별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주: 일반정부 기준이며, 일본의 경우 FY2013 예산안 내용이 미반영된 수치임

자료 :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13.1.25

OECD, *Economic Outlook 92*, 2012.11

□ (재정건전화 목표와 국제 공약)

- 2021년 이후 GDP 대비 국가 및 지방 채권 잔액 비율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
 - 2015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10년 수준에서의 적자반감을 목표(국가-지방 $\Delta 3.2\%$, 국가 $\Delta 3.4\%$), 2020년까지 흑자화를 목표로 설정¹⁸⁾
-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분야에 중점 배분하여 명확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추진이 바람직함

□ (사회보장·세제일체개혁 관련법)

- 사회보장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소비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18) 「경제재정 중장기 전망」(내각부, 2012.8.31)에서는 FY2015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국가, 국가-지방 두 부문 모두 해당 목표를 달성 예상(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할 경우), FY2020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국가-지방 $\Delta 2.8\%$, 국가 $\Delta 2.9\%$ 정도로 전망함

- 소비세율 인상 외에 기초연금의 1/2 국고부담 영구화, 육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세금 환급,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도 포함
- 그러나, 관련 법안 성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대책이나 사회보장의 안정 재원 확보의 의의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혜택의 효율화를 비롯한 급부 구조의 재검토 등이 필요함을 강조
- 이에 따라 FY2013 예산 편성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2020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지출의 효율화에 임할 것을 요구

□ (특례공채법안)

- 정부는 FY2012 추경예산에서 정책적 경비를 포함한 세출의 재검토를 실시, 동년도 특례공채 발행액을 억제해야 함
- 재정건전화 목표하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례공채 발행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확보해야 함
-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화를 목표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세출 및 세입 측면의 전략을 마련하고, 특례공채 발행 방식에 대해서도 적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긴급경제대책과 중장기 재정운영)

- 디플레이션 조기 탈피와 적극적인 경제 재정 운영을 통한 경기 침체 방지를 목표로 13조엔 이상의 재정 지출을 수반한 대규모의 FY2012 추경예산을 각의 결정함
- 당분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건전한 재정으로 국민 개개인이 안심하고 소비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FY2013 예산은 '15개월 예산'의 개념하에 FY2012 추경예산과 일체된 편성으로 최대한 낭비를 감축하고, 예산의 중점화 및 효율화를 추진해야 함

<참고 4> 소비세법 개정 내용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인「사회보장의 안정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소비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통과(2012.8.10)
 - (과정)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
 - 3월 30일 국회 제출, 6월 26일 중의원 수정 및 가결, 8월 10일 참의원에서 수정 법안 통과
 - (내용)
 - [기존] 소비세법 일부개정(제2조와 제3조), 소득세법 일부개정(제4조), 상속세법 일부개정(제5조), 조세특별조치법 일부개정(제6조), 세제에 관한 발본적인 개혁 및 여러 시책에 관한 조치(제7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
 - [변경] 소비세법 개정 외에 소득세법, 상속세법,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고 사회보장 개혁이 약화

2014년 4월 1일 시행(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율 4 → 6.3%로 인상 (지방소비세 1.7%와 합하여 8%) · 소비세 용도의 명확화 (소비세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매년도 제도로서 확립된 연금, 의료, 사회보장혜택 및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함) · 과세 적정화 (사업자면세점제도 및 중간신고제도의 재검토)
2015년 10월 1일 시행(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율 6.3 → 7.8%로 인상 (지방소비세 2.2%와 합하여 10%)

자료: 재무성, 「社会保障の安定財源の確保等を図る税制の抜本的な改革を行うための消費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案」の概要, 2012.8.10

Ⅲ. 프랑스

- FY2013: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2013년 예산법안(PLF 2013: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3)은 2012년 9월 28일에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20일 예산법(LF 2013: Loi de finance)으로 통과

- 출처
 - 2013년 예산법안(PLF 2013: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3)
 - 2013년 예산안 관련 언론공개 자료(프랑스 정부 발표)
 - Les missions de l'Etat, Les chiffres clés 등
 - 2012~2017 중장기 예산법안(LFPF 2012 a 2017: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2 a 2017)
 - 201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3: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Les chiffres clé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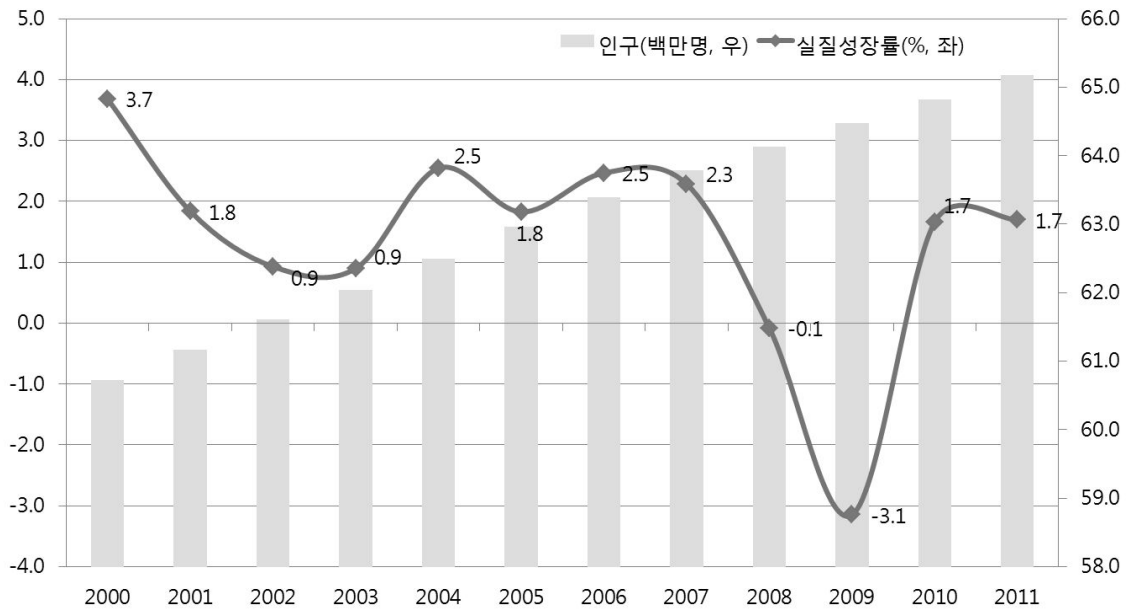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448.2원(2012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2조 3,063억달러(우리나라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56.7%(우리나라는 110.3%)

- 인구: 약 6,517만명(2011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2013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2%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
- (재정 전망) 201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746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126억유로로 전망

◇ 예산기조

- 긴축예산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분야는 청년 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3년 재정수입은 3,126억유로로,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확대 및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에 초점을 두어 2012년 대비 9.9% 증가
- (세출) 2013년 재정지출은 3,746억유로로, 이민 및 통합정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언론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3년 예산안에 정부지출 100억유로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8억유로 감축), 농업분야 및 기업 지급 보조금 삭감(20억유로 감축), 국방비 조정(22억유로 감축), 투자의 합리화(12억유로 감축),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지급액 감액(18억유로 감축)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분야인 청년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년 1월 16일	□ 2012년 사회보장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9호
2012년 2월 8일	□ 의회에 2012년 수정예산안 발표	
2012년 2월 29일	□ 2012년 수정예산법 의회 통과	
2012년 4월 3일	□ 2011년 예산집행결과 발표	재정동향 4월 2호
2012년 4월 10일	□ 2011년 사회보장예산(LFSS 2011) 집행결과 발표	재정동향 5월 1호
2012년 4월 12일	□ 2012-2016 안정화 프로그램 (Stability Program) 발표	재정동향 4월 2호
2012년 6월 26일	□ 2011년 프랑스 결산보고서 발표	재정동향 7월 1호
2012년 7월 4일 발표 및 7월 31일 채택	□ 2012년 2차 수정예산안(PLFR 2012) 발표	재정동향 7월 2호
2012년 7월 10일	□ 2013년 예산 및 2013-2015년 중기재정계획 지침 발표	
2012년 9월 12일	□ 2013년 예산 가이드라인 발표	재정동향 9월 2호
2012년 9월 28일	□ 2013년 예산법안 및 2012-2017 중장기 예산법안 발표	재정동향 10월 2호
2012년 10월 1일	□ 201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2012년 11월 14일	□ 2012년 3차 수정 예산법안 발표	재정동향 12월 1호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13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지만 지속적인 대외무역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2%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무역) 수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어 2013년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2.1%p 상승한 4.8%로 전망
 - (소비) 2013년 소비는 2012년보다 회복되어 0.1%p 상승한 0.3%로 전망
 - (기업투자) 2013년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기업투자는 전년 대비 1.4%p 상승한 1.5%로 전망
 - (물가상승) 소비자물가지수는 2013년 1.8%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III-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프랑스 GDP	1.7	0.3	0.8
가정소비	0.3	0.2	0.3
기업투자	5.1	0.1	1.5
수출	5.3	2.7	4.8
수입	4.9	1.3	3.8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2.1	2.0	1.8

자료: PLF 2013 en chiffres clés

나. 재정 전망

1) 세입 및 세출 전망

- (지출) 2013년에는 2012년의 3,686억유로보다 1.6%정도 증가한 3,746억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
 - 2014년은 3,724억유로로 2013년보다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그 이후 2017년까지

-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3,821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2~2017년 재정지출증가율은 연평균 0.7%이며, 2017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2012년 대비 약 3%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입) 2013년 조세수입은 2012년 대비 10.3% 증가한 2,985억유로로 전망되고, 2013년 세외수입은 2012년 대비 0.7% 높은 141억유로로 전망
 - 2017년까지 조세수입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13.9%정도 증가한 3,402억유로로 전망
 - 세외수입도 201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 대비 17.7% 증가한 166억유로로 전망

<표 III-2> 프랑스 2012~2017년 재정 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정지출	368.6	374.6	372.4	373.8	378.6	382.1
재정수입	284.4	312.6	324.1	339.1	350.1	356.8
조세세입	270.4	298.5	309.4	323.8	334.2	340.2
세외수입	14.0	14.1	14.7	15.3	15.9	16.6
특별계정	0.6	0.3	0.7	0.7	0.8	0.8
재정수지	-83.6	-61.6	-47.6	-33.9	-27.7	-24.5
재정지출 비중 (GDP 대비 %)	56.3	56.3	55.6	54.9	54.2	53.6

자료: LPFP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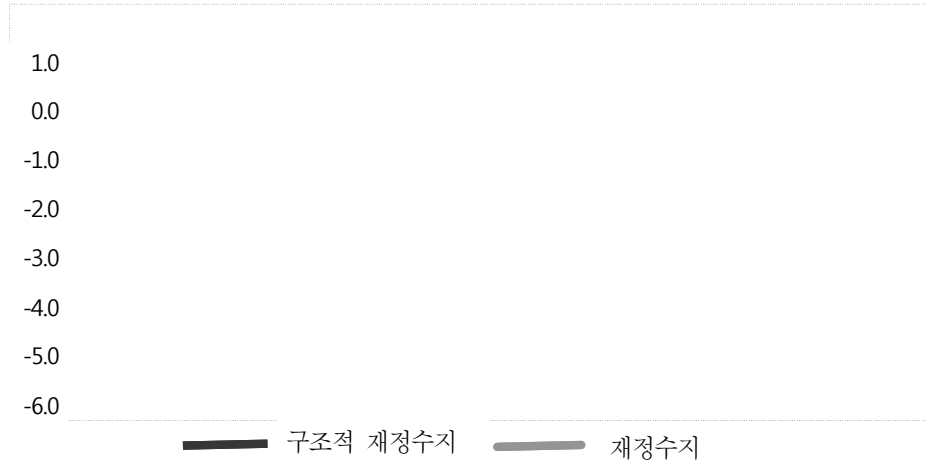
2) 재정수지

- 2016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¹⁹⁾
 - 2012년 GDP 대비 4.5% 규모(836억유로)의 재정적자가 2013년에는 GDP 대비 3%(616억유로)로 감소할 전망

19) 재정수지 기준으로는 2017년이 균형재정 달성(-0.3) 시점

[그림 III-1]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표 III-3> 2012~2017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적 재정수지	-3.6	-1.6	-1.1	-0.5	0.0	0.0
재정수지	-4.5	-3.0	-2.2	-1.3	-0.6	-0.3

자료: LFPF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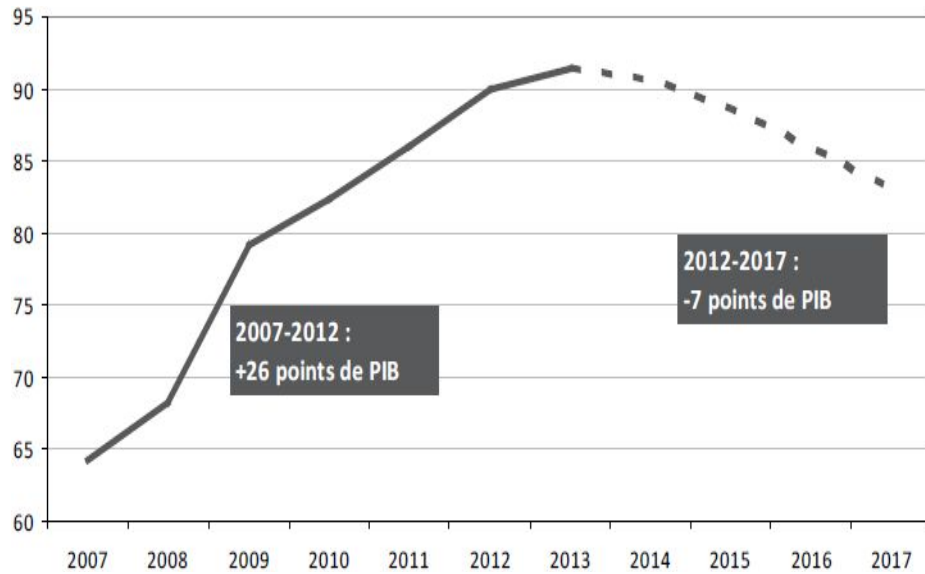
3) 부채비율

- 2012년 GDP 대비 89.9%인 국가 채무 비율을 2017년 82.9%로, 7%p 감소시킬 계획²⁰⁾
 - 국가채무(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의 경우, 2013년 91.3%로 2012년 보다 증가하나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 5년간(2007~2012) 26%p 증가

20)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포함

[그림 III-2]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표 III-4> 2012~2017년 부채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채무 ¹⁾	89.9	91.3	90.5	88.5	85.8	82.9
국가채무 ²⁾	87.4	88.4	87.3	85.4	82.9	80.1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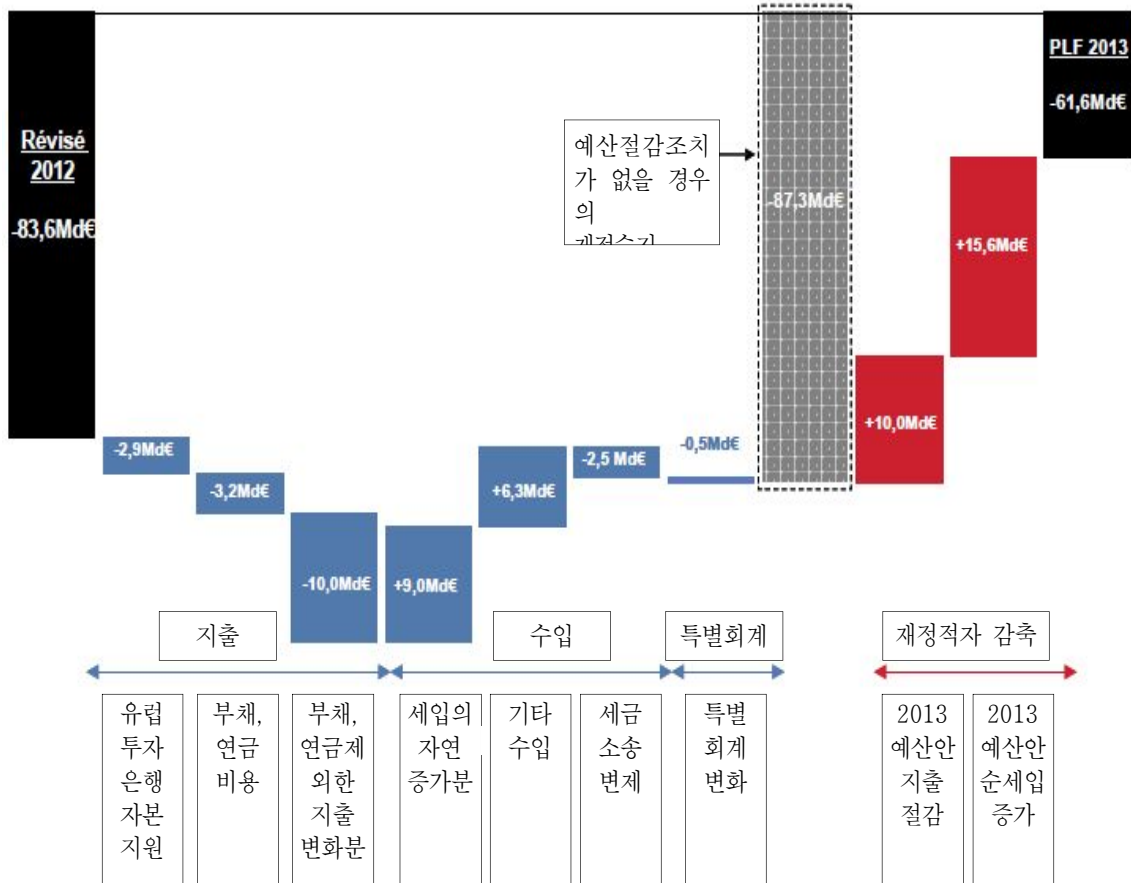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 제외

자료: PLF 2013

2. 예산기조

[그림 III-3] 긴축예산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과정

(단위: 십억유로=Md€)



자료: PLF

- 2013년 긴축예산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
 - 2012년보다 300억유로를 감축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절감되는 예산 가운데 200억유로는 세금 인상을 통해, 100억유로는 정부 지출을 줄여 마련하기로 함
 - 200억유로의 세금 인상분 중 158억유로는 예산안(156억유로는 정부 재정수지, 2억유로는 사회보장행정수지에 영향), 42억유로 사회보장부문예산안에 포함

-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분야는 청년 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
 - (청년 지원) 교육, 청년 고용, 청년 자율성 부문으로 나뉘 정책을 수행
 - (교육) 교육부문의 인력 증원을 통한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재정 추가 투입
 - (청년 고용) 16~25세 청년 실업이 가장 높은 지역에 10만개 일자리가 배치될 것이며, 기업들에게 ‘연령별 계약(generation contract)’²¹⁾을 적용
 - (청년 자율성) 16~25세 사이 청년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자 공공단체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600만유로의 재정 투입
 - (고용)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상황 개선에 주력
 - 정부 산하부문 8만개 일자리와 교육부문 6만개 일자리를 창출 예정
 - (사법 및 치안) 사법 및 치안 분야의 지출은 각각 전년 대비 2013년 3%와 0.2% 증가
 - 정의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의 구현, 청소년 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의 개혁, 피해자 지원 및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용이를 위해 재정 추가 투입

<표 III-5> 프랑스 FY2013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1 결산	2012 2차 수정	2012 3차 수정	2013
재정지출	361.5	369.2	368.6	374.6
재정수입	271.4	287.9	284.4	312.6
조세세입	255.0	272.5	270.4	298.5
세외수입	16.4	15.4	14.0	14.1
특별계정	-0.6	0.2	0.6	0.3
재정수지	-90.7	-81.1	-83.6	-61.6

자료: PLF 2013

21) 고졸 학력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16~25세)을 고용하는 공기업, 비영리 재단, 민간 기업에 최저임금의 75%까지 보조금을 지급

3. 예산안 내용(PLF 2013)

- 9월 28일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세운 2013 회계연도('13.1월~'13.12월)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12월 20일 의회 통과

가. 세입내역

- 2013년 재정수입은 3,126억유로로,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확대 및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에 초점을 두어 2012년 수정 전망 대비 9.9% 증가
 - 2013년 세입 중 부가가치세 47.3%, 소득세 24.3%, 법인세 17.5% 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3년 소득세는 전년 대비 23% 증가, 법인세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수 확대 정책(200억유로 이상) 실시: 최고 소득세율 45%로 상향 조정, 연간 소득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해 75%의 특별세 부과, 대기업에 대한 기존의 공제 및 조세감면 혜택 폐지 등
 - 200억유로의 세수확대 규모 중 158억유로는 예산안에 나머지 42억유로는 사회보장부문예산안에 포함될 것

<표 III-6> FY2013 세입 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2	2012 2차 수정	2012 3차 수정	2013
I. 재정수입	289.2	287.9	284.4	312.6
II. 조세세입	273.3	272.5	270.4	298.5
소득세	60.0	60.0	59.0	72.6
법인세	43.1	40.7	40.3	52.3
석유세	14.1	14.1	13.6	13.8
부가가치세	137.1	135.7	136.7	141.4
기타 세입	19.1	22.0	20.7	18.4
III. 세외수입	15.9	15.4	14.0	14.1

자료: PLF 2013

<표 III-7> 주요 세제개편 현황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세수효과
1. 소득세	4.7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2.0
자본이득세 누진세율 적용	1.0
연간 소득 15만유로 초과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 45% 인상	0.3
가족계수(family quotient) ²²⁾ 의 혜택 한도 아동당 2336유로 → 2000유로 하향 조정	0.5
연간 소득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75%의 최고소득세율 신설	0.2
소득세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전체 한도 축소	0.0
부유층의 연대세(solidarity tax) 개혁	1.0
저소득층을 위해 공제 및 할인, 면제기준을 개선	-0.3
2. 법인세	8.8
대기업의 금융비용 공제 혜택 제한되어 금융비용의 85%까지만 공제 혜택	4.0
기업의 지분증권 판매에 따른 이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제한	2.0
대기업의 전년도 손실분을 당해연도 과세대상수익에 이월할수 있는 한도를 100만유로로 제한	1.0
2011년부터 보험회사에 유리한 세제상 혜택 폐지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7% 세율구간 신설	0.8
법인세의 최저 과세구간의 기준금액을 현재 5억유로에서 2억5천만유로로 하향조정	1.0
3. 부동산세	0.3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세제개편	0.18
빈 주택의 임대 또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빈 주택에 대해 2013년 세율 12.5%에서 2014년에는 25%로 상승	0.15
4. 환경을 고려하는 녹색 조세제도	0.2
오염활동에 대한 세금(The general tax on polluting activities) 강화	0.04
자동차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세금 강화	0.2
5. 기타 제도	1.8
조세포탈(tax fraud)에 대한 징벌 강화	1.0
배당금의 3% 기부금 상향 조정	0.8
총합계	15.8

자료: PLF 2013

22) 가족 계수(family quotient)는 부양가족 수와 가족 상황(독신, 기혼, 동거, 이혼 등)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책정된 제도

나. 세출내역

- 2013년 재정지출은 3,746억유로로 2012년 수정 전망 대비 1.6% 증가
 - 이민 및 통합정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언론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이민 및 통합정책: 외국인 이민자(난민 포함)가 프랑스 사회로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과 망명」, 「통합과 프랑스국적에의 접근성」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3.6% 증가(8,900만유로)
 - 언론 분야: 공영 방송기관에 대한 지원 2012년 대비 1.6% 축소, 단기 프로그램의 규모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13.5% 감소(1억 9,000유로)
 - 외교: 프랑스의 해외교육기관과 대학에의 교부금, 해외 교육기관에 있는 프랑스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전문가의 해외교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 증가(5,500만유로)
 - 법무부: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 상습적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구금·보호시설을 개발, 피해자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3% 증가(2억유로)
 - R&D 및 고등교육: 2013~2015년 대학 내 연간 일자리 1,000개 추가 창출, 학생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2,000만유로 투입, 신생 혁신형기업의 R&D 투자지원 위해 전년 대비 2.1% 증가(5억 2,000만유로)
 - 복지 및 은퇴자 지원: 2011~2015년 은퇴자 연금관리 운영비용 13% 감축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년 대비 2.7% 증가(1억 7,000만유로)

<표 III-8> 2012~2013년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12 본(수정)예산 (A)	2013 예산범안 (B)	B-A (%)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79	2.83	1.4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22	1.96	△11.7
농업. 임업. 수산업(Agriculture. pêch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47	3.10	△10.7
공공보조 - 저소득층 지원. 외국인 이민자 지원 감소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3.30	3.10	△6.1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3.12	3.04	△2.6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48	0.49	2.1
문화(Culture)	2.54	2.43	△4.3
국방(Défense)	30.35	30.15	△0.7
국가정책방향 - 정책통합. 자유 및 권리보호. EU내 프랑스 지위 확보(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10	1.10	0.0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aménagement durables)	8.00	7.64	△4.5
경제 - 산업 및 기업 지원(Economic)	1.59	1.56	△1.9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5.40	45.70	0.7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9.08	8.91	△1.9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59	0.67	13.6
법무부(Justice)	6.02	6.20	3.0
언론(Media,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1.41	1.22	△13.5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1.90	1.99	4.7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34	0.32	△5.9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5.12	25.64	2.1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7	6.54	2.7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56	2.61	2.0
건강 복지(Santé)	1.41	1.29	△8.5
치안(Sécurité)	11.58	11.61	0.3
시민안정 - 자연재해 및 화재등(Sécurité civile)	0.39	0.39	0.0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2.53	13.17	5.1
체육 및 건강. 청소년 지원 (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9	0.46	△6.1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9.95	10.12	1.7
건설 및 주택(Ville et logement)	8.20	7.77	△5.2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국채발행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1.15	1.11	△3.5
예비비(Provisions)	0.15	0.16	6.7
의회. 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00	0.99	△1.0
미션별 합계	204.6	204.27	△0.16
국가채무	46.7	46.9	0.4
연금	37.6	40.0	6.4
지방정부와 유럽연합(EU) 부담금	74.6	75.3	0.9
기타 지출	5.1	8.13	59.4
재정지출 총합계	368.6	374.6	1.6

자료: PLF 2013

<참고 1>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3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3) 발표(2012.10.1)
 - 2013년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139억유로로, 2011년(209억유로), 2012년(174억유로)에 비해 감소할 예정
 - 2013년 약 42억유로 세수증가와 24억유로 지출삭감 시행 계획
 - 담배 및 맥주 판매세 인상, 일반가계가 고용한 잡역부에 대한 면세혜택 폐지
 - 약제비 및 의료서비스 비용 삭감, 처방전 발급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
 - 2012~2017년 중기적인 사회보장 지출 목표의 경우, 연간 평균 27억유로의 지출 절감 계획 포함
 - 의료 물품 가격 절감, 지역 의료시설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등 의료지출의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보험지출 목표(ONDAM) 제한
 - 의료보험비 지출 증가율은 2013년 2.7%, 2014년 2.6%, 2015~2017년 2.5%로 전망

<표 III-9> 2013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안
의료보험(CNAM)	-8.6	-5.5	-5.1
산재보험(CNAM AT/MP)	-0.2	-0.1	+0.3
법정연금기금(CNAV)	-6.0	-5.2	-4.0
가족지원금(CNAF)	-2.6	-2.5	-2.6
일반 제도 수지 (Total Regime general)	-17.4	-13.3	-11.4
노후연대기금(FSV)	-3.4	-4.1	-2.6
총액	-20.9	-17.4	-13.9

출처: LFSS 2013

<표 III-10> 2012~2017년 사회보장 지출 목표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목표	454.7	469.6	484.2	499.2	514.4	530.5

출처: LPFP 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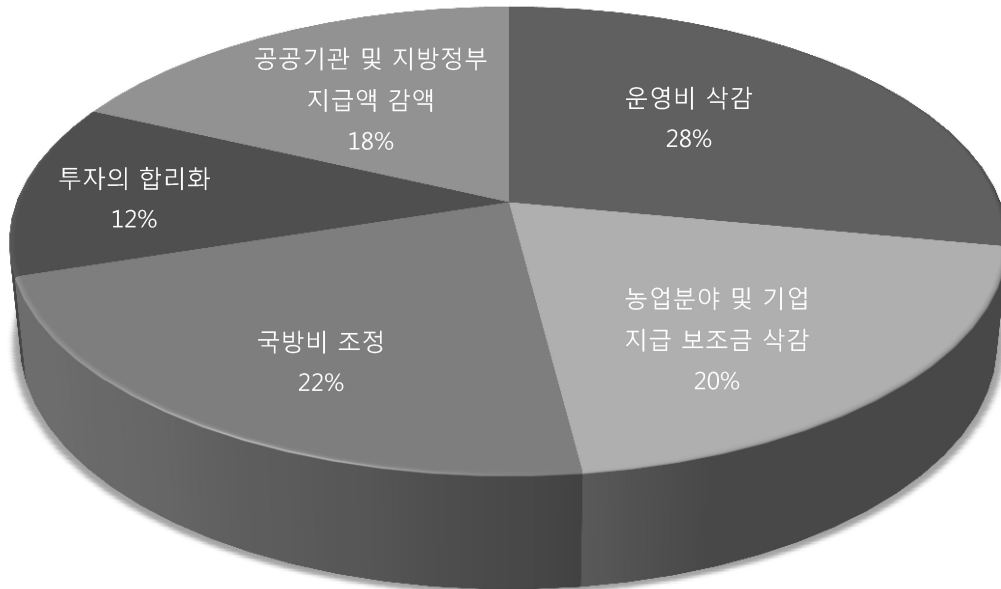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2013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고, 중기적으로 2016년까지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며 2017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3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5%에서 3%로 감축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총 규모 300억유로 중 100억유로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200억유로는 재정수입(가계세수 100억유로, 기업세수 100억유로)을 증대하여 마련
 - 2012~2017년 구조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총규모 중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측면을 각각 2분의 1씩 조정

- 2013년 예산안에 정부지출 100억유로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급여동결 및 운영비 삭감(28억유로 감축): 2013년 모든 부처의 운영비용을 2012년에 비해 5% 감소시키고 공공부문의 임금과 공무원 수를 전년과 같게 동결
 - 농업분야 및 기업 지급 보조금 삭감(20억유로 감축): 농업분야의 낮은 임금을 받는 임시직에 대한 근로 소득공제 제도 등과 같은 재량적인 정책들을 재검토
 - 국방비 조정(22억유로 감축): 군사 프로젝트에 의해 계획된 지출 조정
 - 투자의 합리화(12억유로 감축): 재원이 없는 민관공동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진행되는 교도소 건설의 중지,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합리화
 -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지급액 감액(18억유로 감축): 공공기관 경영자 수당의 2% 감축,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를 통한 재정회복에의 참여

[그림 III-4] 2013년 재정지출 감축 내역



자료: PLF 2013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정부가 중점을 두는 정책분야인 청년지원, 고용, 사법 및 치안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청년지원 분야
 -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에 8,781개, 기술농업교육(technical agricultural education)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을 포함하여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내 230개, 대학내 1,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정
 - ‘미래를 위한 일자리(jobs for the future)’라는 기조하에 16~25세 극빈층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10만개 일자리 확대, 기업들에게 ‘연령별 계약(generation contract)’을 적용
 - 16~25세 사이 청년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자 공공근로사업부문에 1만개 일자리 확대

-
- 고용 분야
 - 고용센터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0명 신규 채용
 - ‘미래를 위한 일자리’ 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390,000개의 고용계약을 유지
 - 사법 및 치안 분야
 - 법무부는 청소년 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의 개혁, 상습적 범행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정비, 법정의 현대화 등에 주력하기 위해 520명의 고용 확대 예정
 - 내무부는 국립경찰과 헌병대의 치안 임무수행 강화를 위해 480명의 고용 확대 예정

IV. 독일

- FY2013: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FY2013 예산편성 일지
 - 2012. 3. 21 내각 2013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결의
 - 2012. 6. 27 연방정부 2013년 예산안 및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2. 9. 11 의회 심의 시작
 - 2012. 11. 23 하원 통과
- 출처
 - 재무부: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Eckwerte Bundeshaushalt 2013 und Finanzplan bis 2016*
 - *Monatsbericht des BMF Juli 2012*
 - *Finanzplan des Bundes 2012 bis 2016*
 - *Bundeshaushaltsplan 2013*
 - 안정화 위원회: Stabilitätsrat (<http://www.stabilitaetsrat.de>)
 - 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http://www.bundesbank.de>)
 - 뮌헨대학 경제연구소: ifo Institut (<http://www.cesifo-group.de>)
 - 킬대학 세계경제연구소: IFW Institut (<http://www.ifw-kiel.de>)
 - 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http://www.destatis.de>)
 - EU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index_en.htm)
 - 국제통화기금: IMF (<http://www.imf.org>)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http://www.oecd.org>)
 - OECD 통계DB: OECD Statistics (<http://www.oecd.org/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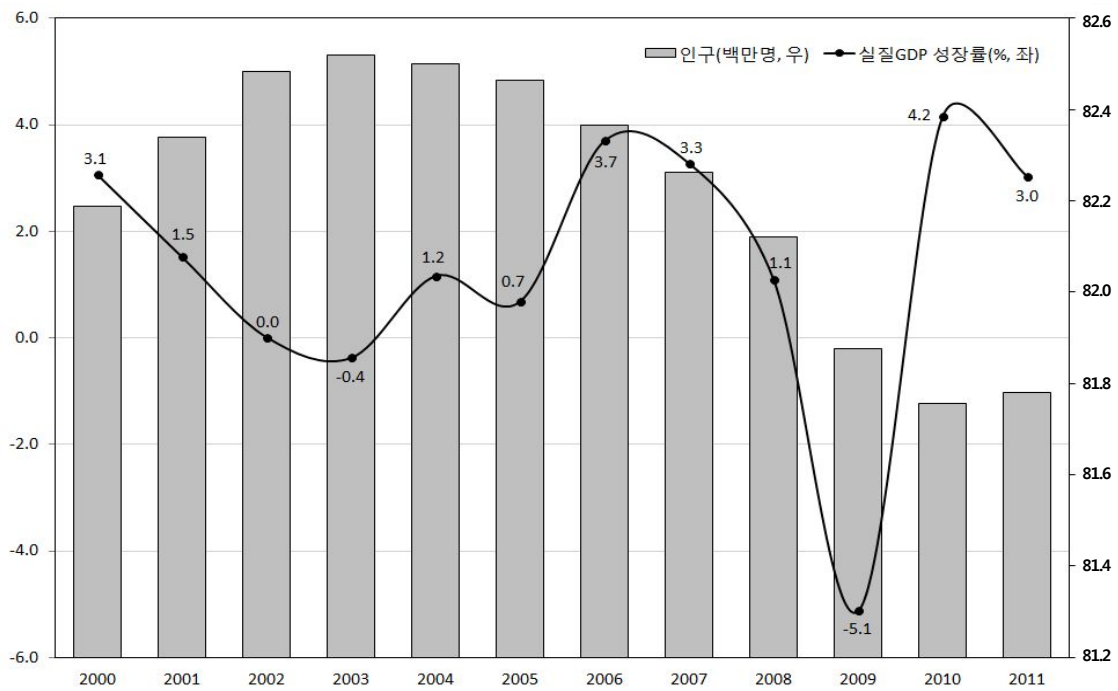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448.2원 (2012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3조 2,274억달러(한국의 2.14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1년 95.3%(한국은 110.3%)

□ 인구: 2011년 8,178만 명(한국의 1.64배 수준)

□ 인구 및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중앙은행 12월 발표 기준, 2013년 경제성장률은 0.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실업률은 7.2%로 전망
- (재정 전망) 국내외 기관별로 2013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0.1%, 부채는 GDP 대비 80~81.5%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연구분야에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한 137억유로, 인프라분야에 100억유로 지출예정
- (재정건전화) 2013년 구조적 적자는 GDP 대비 0.3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함

◇ 예산안 내용

- (수입)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2,849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신규차입금은 171억유로를 목표로 함
- (지출) 총 재정지출은 3,020억유로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수준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이 39.5%로 가장 큼
 - (사회보장) 연금보험지출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14~2016년까지 매년 12.5억유로씩을 감축할 예정
 - (노동) 실업수당(ALG II), 주택·난방(Unterkunft und Heizung) 등에 대한 급부로 234억유로 편성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시행, 금융거래세(FTT)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추구
- (에너지정책)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연구,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에 투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 2.23	FY2011 잠정결산 보고서 발표	
2012. 3.21	FY2013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상반기 재정동향
2012. 3.21	FY2012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12. 4.18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채택	
2012. 5.24	제 5차 안정화위원회 개최	
2012. 6.14	FY2012 1차 추가경정예산 하원 통과	
2012. 6.19	FY2011 결산 보고서 발표	
2012. 6.27	FY2013 예산안 및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12. 6.30	신재정협약 비준 및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 승인	
2012. 9.11	FY2013 예산안 의회 심의 시작	
2012. 9.12	신재정협약 비준 및 ESM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2012. 9.25	연방정부 보조금 보고서 발표	
2012. 9.26	FY2012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12.10.22	FY2012 3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2.10.24	제 6차 안정화위원회 개최	
2012.11.21	FY2012 2차 추가경정예산안 하원 통과	
2012.11.23	FY2013 예산안 하원 통과	
2012.12. 7	2013년, 2014년 경제 전망 발표	
2012.12.14	FY2013 예산안 상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13년도는 낮은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개선으로 구매력이 향상되고, 내수가 유지되어 전년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2012년 6월 연방정부는 2013년 GDP 성장률을 전년 대비 1.6%로 전망한바 있으나, 최근 기관별 전망은 0.3~0.9%로 하향 조정됨
 - 국내 연구소인 IFW²³⁾는 0.3%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였고, 비교적 높은 수치인 0.9%를 전망했던 IMF는 2013년 1월 0.6%로 수정 전망
 - 경제기술부는 2013년 1월에 경제 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3)를 통해 2013년의 GDP 성장률을 0.4%로 전망
 - (물가) 2012년도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이 기대되며, 이는 가계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실업률) 2012년 노동수요 증가로 인한 고용증가, 실업감소 추이를 반영, 2013년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의 개선과 함께 노동임금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
 - 경제기술부는 2013년 1월에 경제 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3)를 통해 2013년 실업률을 7%로 전망

23) ifo(뮌헨대학 경제연구소), IFW(킬대학 세계경제연구소)는 DIW(독일경제연구소), IWH(할레 경제연구소), RWI(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와 함께 독일의 5대 경제연구소에 속함. 이들 5대 경제연구소는 예산안 편성 시 연방정부 재무부, 중앙은행 등과 함께 세수추계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음

<표 IV-1> 기관별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GDP 성장률		CPI ¹⁾		실업률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중앙은행	0.7	0.4	2.1	1.5	6.8	7.2
ifo	0.7	0.7	2.0	1.6	6.8	6.9
IFW	0.7	0.3	2.0	2.0	6.8	7.0
EU 집행위원회	0.8	0.8	2.1	1.9	5.5	5.6
IMF	0.9	0.9	2.2	1.9	5.2	5.3
OECD	0.9	0.6	2.1	1.9	5.3	5.5

주: 1)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

출처: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 Dezember*, 2012.12

ifo Institut, *ifo Konjunkturprognose 2012/2013*, 2012.12

IFW Institut,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2*, 2012.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2*, 2012.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2012.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2*, 2012.11

나. 재정 전망

1) 중기재정계획 2012~2016

- 2013년 예산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3,020억유로로 편성, 향후 2016년까지 0.1~2.2% 증액을 계획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음
 - (재정지출) 2012년 재정지출 규모는 3,116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이후 2016년까지 17억유로 정도의 소폭 증액을 계획
 - (재정수입) 2012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2%(2,835억유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100%(3,099억유로) 달성할 계획
 - 조세수입의 재정수입 대비 비율은 2012년 82%(2,562억유로)에서 2016년 93%(2,885억유로)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
 - 세외수입의 재정수입 대비 비율은 2012년 8.8%(273억유로)에서 2016년 6.9%(214억유로)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계획
 - (신규차입) 신규차입은 2012년 약 281억유로로 계획하였고, 2016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함

<표 IV-2> 중기재정계획(2012~2016)

(단위: 십억유로, %)

	2012 ¹⁾ (추정치)	2013 (확정)	중기재정계획		
			2014	2015	2016
I. 재정지출	311.6	302.0	302.9	303.3	309.9
증감률 ²⁾	3.4	△3.1	0.3	0.1	2.2
II. 재정수입	311.6	302.0	302.9	303.3	309.9
조세수입	256.2	260.6	269.1	277.3	288.5
세외수입	27.3	24.3	20.7	21.3	21.4
신규차입	28.1	17.1	13.1	4.7	0.0

주: 1) 추경예산²⁴⁾ 포함

2) 전년 대비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Monatsbericht des BMF Juli 2012*, 2012.7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shaushaltsplan 2013*, 2012.12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plan des Bundes 2012 bis 2016*, 2012.8

2) 재정수지

□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의 점진적인 개선이 전망됨

- 국내외 주요 기관은 2013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0.5~-0.1%로 전망
- 국내 기관인 재무부, IFW 외에 국제기구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표 I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무부	-1.0	-0.5	-0.0	0.0	0.0
ifo	-0.1	-0.1	-	-	-
IFW	-0.1	-0.5	0.0	-	-
EU 집행위원회	-0.2	-0.2	0.0	-	-
IMF	-0.5	-0.3	-0.2	-0.1	-0.0
OECD	-0.2	-0.4	-0.7	-	-

출처: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2*, 2012.4ifo Institut, *ifo Konjunkturprognose 2012/2013*, 2012.12IFW Institut,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2*, 2012.12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2*, 2012.11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2012.10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2*, 2012.11

24) 추경예산 관련 내용은 후술되는 <참고 1> 참고

3) 부채

- 연방정부가 예상한 2012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82%이며, 2013년에는 80%로 재정 상황에 있어 개선이 전망됨
 - 재정개선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16년 부채는 GDP 대비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OECD 등 국외 기관들 역시 2013년 연방정부의 부채비율을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IMF는 2013년 부채비율을 81.5%로 타기관에 비해 다소 높게 전망하였으나, 2016년까지 재정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표 IV-4> 기관별 연방정부 부채 규모 전망

(단위: GDP 대비 %)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무부	82.0	80.0	78.0	76.0	73.0
IFW	81.5	80.0	77.4	-	-
EU 집행위원회	81.7	80.8	78.4	-	-
IMF	83.0	81.5	79.6	77.6	75.8
OECD	81.8	80.4	79.3	-	-

출처: Stabilitätsrat,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2*, 2012.4
 IFW Institut, *Deutsche Konjunktur im winter 2012*, 2012.12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2*, 2012.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2012.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2*, 2012.11

<참고 1> FY2012 추경예산

- (1차 추경) 유럽 채무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약 87억유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채택(2012. 6. 14)
 - 2013년 예정되었던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설립이 2012년 7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인 자국분담금을 반영
 - 신규차입의 변화분 87억유로 중 ESM으로의 금융거래분(Finanzielle Transaktion)이 86.9억유로로 대부분을 차지

- (2차 추경) 유럽투자은행(EIB)에 대한 지원과 유아원시설 확충을 위해 약 22억유로의 추가적인 지출계획 채택(2012.11.21)
 - 추가적인 지출 22억유로 중 EIB 지원이 16억유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세수입의 증가로 신규차입은 오히려 감소
 - 유아원시설 확충 명목으로 5억 8,050만유로 책정

<표 IV-5> FY2012 추경예산 추이

(단위: 십억유로)

	2012 기존 예산	2012 1차 추경	2012 2차 추경
I. 재정지출	306.2	312.7	311.6
II. 재정수입	306.2	312.7	311.6
조세수입	229.2	249.7	256.2
세외수입	28.2	28.2	27.3
신규차입	48.4	34.8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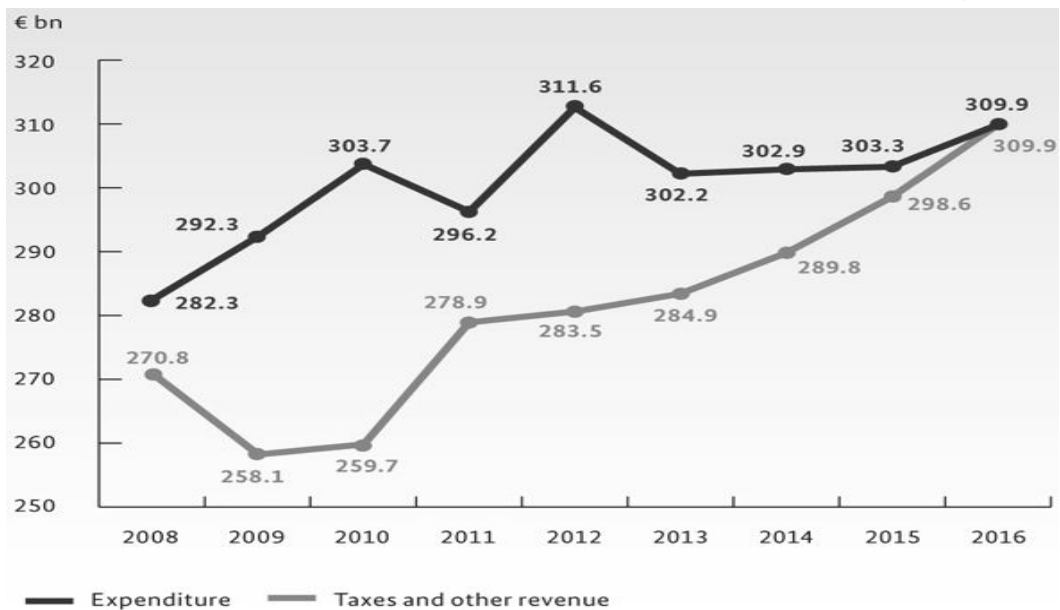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Nachtrag zum Bundeshaushaltsplan 2012*, 2012.6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Zweiter Nachtrag zum Bundeshaushaltsplan 2012*, 2012.12

2. 예산기준

-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부채제한법(Schuldenregel)²⁵⁾상 규정된 부채한도를 목표 연도보다 조기 달성하고자 함²⁶⁾
 - (성장) 교육과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연구분야에 2012년보다 8억유로 증가한 137억유로를, 인프라분야에 10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재정건전화) 2013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88억유로로 GDP 대비 0.3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함

[그림 I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갭 변화 추이

(단위: 십억유로)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Media centre 2012.11.23.

25) 연방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16년부터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

26) 2013년 1월 15일 FY2012 잠정결산 결과, 구조적 적자가 GDP 대비 0.32%로 잠정 집계되어 부채한도는 이미 달성한 것이 확실시됨. FY2012 잠정결산은 후술되는 <참고 2> 참고

<참고 2> FY2012 잠정결산

- 재무부, FY2012 잠정결산 발표(2013. 1.15)
 - 재정지출은 3,068억유로, 재정수입은 2,843억유로로 잠정 집계됨
 - 신규차입은 225억유로, GDP 대비 구조적 적자는 0.32%로 예측되며, 이는 부채제한법상의 0.35%보다 0.03%p 낮은 수치임

<표 IV-6> FY2012 잠정결산

(단위: 십억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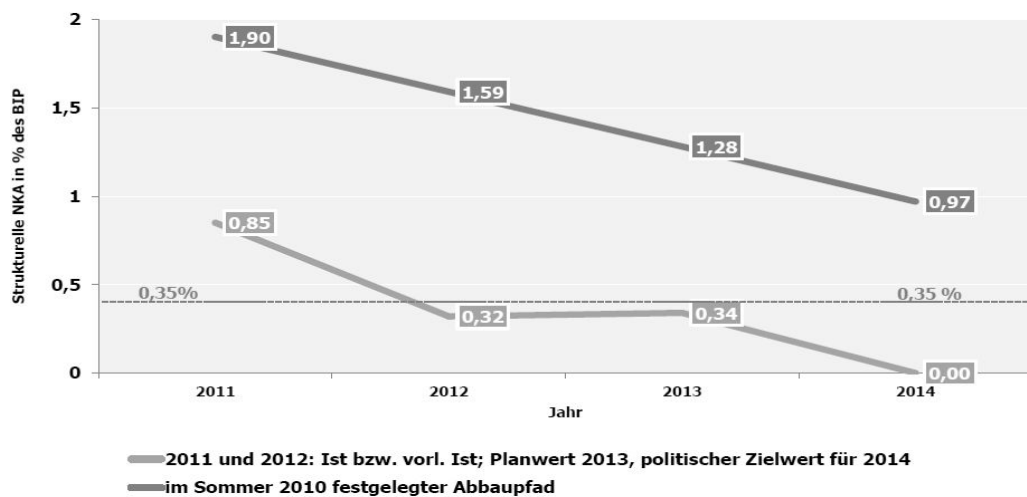
	2012 ¹⁾ (추정치)	2012 잠정결산
재정지출	311.6	306.8
재정수입	283.5	284.3
조세수입	256.2	256.1
세외수입	27.3	28.2
신규차입	28.1	22.5

주: 1) 추경예산 포함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Öffentliche Finanzen 2013. 1.15

[그림 IV-2] 구조적 재정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Öffentliche Finanzen 2013. 1.15

3. 예산안 내용

가. 재정수입

-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정부안에서 2,834억유로로 계획하였으나, 심의를 거치며 2,849억 유로로 15억유로가 증액되었고, 전년 대비로는 0.5% 증가
 - (조세수입) 2,606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1.7%(44억유로) 높게 편성되었으며,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6.3%로 전년에 비해 4.1%p 증가
 - (세외수입) 243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11%(30억유로) 감축되었으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년 8.8%에서 8%로 0.8%p 감소
 - 노동청의 분담금²⁷⁾(40억유로) 감소, 채용자로 인한 중앙은행 수익금의 감소가 주된 요인

- 신규차입은 171억유로로 전년 대비 39.1%(110억유로) 낮게 계획하였고,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9%에서 2013년 5.7%로 큰 폭으로 감소

<표 IV-7> 재정수입의 항목별 규모

(단위: 십억유로, %¹⁾)

	2012 ²⁾ (추정치)	2013 (정부안)	2013 (확정)	증감률 ³⁾
조세수입	256.2	259.8	260.6	1.7
비중	82.2	86.0	86.3	
세외수입	27.3	23.6	24.3	△11.0
비중	8.8	7.8	8.0	
신규차입	28.1	18.8	17.1	△39.1
비중	9.0	6.2	5.7	
합계	311.6	302.2	302.0	

- 주: 1) 재정수입 대비 비중
 2) 추경예산 포함
 3) 2012(추정) 대비 2013(확정)의 증감률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Öffentliche Finanzen 2012.6.27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haushaltsplan 2013, 2012.12

27) 사회법 제2권(SCB II) 46조 4항에 따라, 연방정부와 노동청은 구직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및 행정서비스 비용을 공동 분담해 왔으나, 2013년부터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

나. 재정지출

□ 정부안은 3,022억유로 규모였으나, 심의를 거치면서 약 2억유로가 감액되어 3,020억유로로 편성됨. 이는 전년 대비 3.1%(약 96억유로)가 감소된 규모

1) 부처별 지출

□ 헌법재판소, 법무부, 재무부 등의 예산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보건부, 가족노년여성청년부, 노동사회부 등의 예산은 크게 감소

<표 IV-8>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추이

(단위: 십억유로, %)

부처	2012 ¹⁾ (추정)	2013(정부안)	2013(확정)	증감률 ²⁾
대통령실	0.03	0.03	0.03	5.6
연방하원	0.69	0.73	0.73	5.4
연방상원	0.02	0.02	0.02	4.9
총리실	1.96	1.95	2.05	4.6
외무부	3.32	3.45	3.49	4.9
내무부	5.49	5.84	5.85	6.6
법무부	0.51	0.60	0.61	19.4
재무부	4.61	5.00	5.02	9.0
경제기술부	6.11	6.18	6.12	0.2
영양농업소비자보호부	5.28	5.26	5.27	△0.2
노동사회부	126.13	118.74	119.23	△5.5
교통건설도시개발부	25.93	25.72	26.41	1.8
국방부	31.87	33.28	33.26	4.3
보건부	14.49	12.49	11.99	△17.2
환경자연보호부	1.59	1.65	1.64	3.4
가족노년여성청년부	7.37	7.13	6.88	△6.6
헌법재판소	0.03	0.05	0.05	50.7
회계검사원	0.12	0.13	0.13	8.2
경제협력발전부	6.38	6.42	6.30	△1.4
교육연구부	12.94	13.75	13.74	6.2
연방부채	32.54	33.28	32.98	1.4
일반조세행정	24.18	20.50	20.20	△16.4
합계	311.60	302.20	302.00	△3.1

주: 1) 추경예산 포함

2) 2012(추정) 대비 2013(확정)의 증감률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Öffentliche Finanzen 2012.6.27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haushaltsplan 2013, 2012.12

2) 분야별 지출

- (교육·연구) 17대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구 분야 강화정책을 반영, 전년 대비 6.2%(8억유로) 증가한 137억유로 편성
 - 대학협약 2020(Hochschulpakts 2020)²⁸⁾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8억유로 증가한 22억유로 배정
 - 우수대학육성 프로그램(Exzellenzinitiative) 지원(4억유로) 등을 통해 대학 연구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개발협력) 관련 지출은 경제협력발전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협력발전부 예산은 약 63억유로가 편성됨
 - 에이즈와 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GFATM) 명목으로 2억유로 규모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DP 대비 0.7% 수준으로 계획함

- (내무) 전년 대비 6.6%(4억유로) 증액된 59억유로 편성
 - 정보기술 보안, 연방경찰 지원 등의 국내안보와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방) 약 330억유로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3%(14억유로) 증액됨
 - 자원입대자(freiwillig Wehrdienstleistende)의 수가 5천명을 넘어서면서 발생한 추가 지출과 군인들의 연말 보너스 인상분을 포함함

- (환경) 환경자연보호부 예산으로 16억유로가 편성됨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석관 재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디젤차량의 미립자 감소 시스템 지원으로 3천만유로를 지출할 계획임
 - 국제 기후보호 프로그램(Programme der nationalen Klimaschutzinitiative)에 2013년과 2014년 각각 3억유로 규모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28) 신입생 입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

- (경제·기술) 경제기술부 예산으로 61억유로가 편성되어, 201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지역경제) 지역경제구조 개선사업(GRW)에 2011년 683만유로가 편성된 바 있고, 2013년 큰 폭으로 증액되어 3,327만유로가 지출될 계획
 - (에너지) 대체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

- (교통·건설) 교통건설도시개발부 예산으로 264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50%이상이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²⁹⁾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도로, 철도, 수로, 복합운송 부문에 100억유로가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 부문에 약 4.5억유로가 편성됨

- (사회보장)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120억유로 규모이고, 연금보험지출은 815억유로 편성, 수발보험³⁰⁾에는 2014년부터 매년 1억유로 편성 계획
 - 연금보험지출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2014~2016년까지 매년 12.5억 유로씩 감축할 예정

- (노동)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주택 및 난방(Unterkunft und Heizung) 등에 대한 급부로 234억유로 편성
 - 경기 및 고용회복이 계속되면서, 중기재정계획상 2016년까지 218억유로로 예산 감축을 계획함

- (가족)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정부안 71.3억유로 규모였으나, 심의를 통해 2.5억유로 감액되어 68.8억유로 편성
 - 부모수당(Elterngeld)³¹⁾으로 49억유로 편성

29)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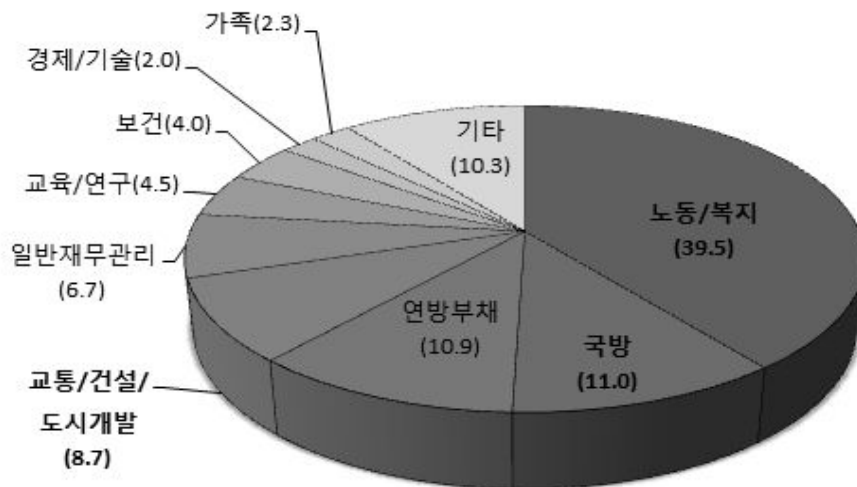
30) 1955년에 실시된 보험제도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과 유사함

31) 출산 직후 휴직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그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국가에서 지원(최대 14개월, 월급의 65~100%)

- 1~3세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Betreuungsgeld)³²⁾정책이 2013년부터 시행되어, 매달 1인당 100유로씩 지급되며, 2014년부터는 150유로씩 지급될 예정
 - 정부안 기준 예산규모는 2013년 3억유로, 2014년 11억유로, 2015년 12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확정안에는 5,500만유로 편성
- (영양·농업·소비자보호) 관련 분야의 예산은 약 53억유로 편성
 - (농업) 농업정책(Agrarsozialpolitik) 부문에 37억유로가 집중 편성
 - 이 중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으로 1억 5천만유로,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GAK) 프로그램에 6억유로 배정
 - (소비자) 소비자정책(Verbraucherpolitik) 부문에 150만유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을 강화하는 데에 2,500만유로 편성

[그림 IV-3] 2013년 예산 대비 분야별 지출

(단위: %)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shaushaltsplan 2013*, 2012.12

32)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육아보조금(Kindergeld)과는 달리 1~3세 자녀 중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연방 내각,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German Stability Programme)³³⁾을 통해 성장 지향적인 재정건전화 추구(2012. 4. 18)
 - 2011년부터 발효된 긴축패키지(Zukunftspaket)³⁴⁾의 연장선상에서 노동·복지 분야의 지출은 축소하고, 교육·연구 및 투자 부문의 비중은 높임
 - (노동) 연방정부와 노동청의 재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차원에서 소요되는 일자리 촉진비용 지급을 중지할 예정
 - (사회보장) 연금보험지출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 (교육·연구) 2016년까지 120억유로의 추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R&D 분야 지출 비중을 GDP 대비 3%로 목표
 - (신규차입)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14년에 새로운 한도(new ceiling)인 GDP 대비 0.35% 미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³⁵⁾
 - (부채) 2012년 GDP 대비 82%에서 안정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6년에는 7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IV-9> 2012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44.7	45	44.5	44.5	44.5	44.5
지출	45.7	46	45.5	44.5	44.5	44.5
재정수지	-1.0	-1	-0.5	0	0	0
부채	81.2	82	80	78	76	73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 Aktualisierung 2012*

33)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매년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을 EU 경제재무 이사회(ECOFIN)에 제출하고 있음

34) 긴축패키지 관련 내용은 후술되는 <참고 3> 참고

35) 2013년 1월 FY2012 잠정결산 결과, 구조적 적자가 GDP 대비 0.32%로 잠정 집계되어 부채한도는 이미 달성한 것이 확실시됨

- 제 6차 안정화위원회(des Stabilitätsrates) 개최³⁶⁾(2012.10.24)
 - 부채제한법 준수를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재차 언급하였으며, 이를 통한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유지 강조
 - 재건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을 이행 중인 4개 주정부³⁷⁾에 대한 보고서(Sanierungsberichte) 검토 결과, 해당 주정부들도 신규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기초 유지가 가능하다고 평가

- 금융거래세(FTT)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추구
 - 금융위기 이후 EU 차원에서의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요구되어 그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독일연방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 내각은 이에 대해 결의
 - 중기재정계획 2012~2016을 통해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 수입은 매년 2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1월 22일, 공동체 조약 상의 증진된 협력(Verstärkten Zusammenarbeit) 조항³⁸⁾을 적용, EU 재무장관회의에서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최종 승인

36) 연방재무장관 쇼이블레(Schäuble)의 주도하에 베를린에서 열림

37) The states of Berlin, Bremen, Saarland and Schleswig-Holstein

38) 특정 사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찬성하는 국가부터 부분적으로 체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으로, 특히 9개국 이상의 제안과 EU 집행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함

<참고 3> 긴축패키지(Zukunftspaket; Austerity Package)³⁹⁾ (2010.6.7)

- 안정성장협약(SGP)에서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축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긴축패키지가 도입되어 2011년부터 발효
- 지출감축과 세입증대를 통해 4년 동안(2011~2014년) 약 820억유로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지출감축)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 사회보장분야의 지출 축소와 공공부문 고용축소와 국방비 축소 등으로 재정절감 계획
 - 2011년 59억유로에서 2014년 198억유로로 연도별 감축 규모를 증가시켜, 2014년까지 총 531억유로의 지출감축을 목표함
 - (세입증대) 에너지세 및 국내 비행기 여객에 대한 출발세 등을 통해 세수증가, 가용시간 연장에 따라 원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 시행
 - 2011년 53억유로를 시작으로 매년 78억유로의 세입증대를 목표로 하며, 그 총액은 2014년까지 287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

<표 IV-10> 재정적자 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항공세 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적자감축계획		112	191	237	276	817		100.0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scal and budgetary policy 2010. 7. 7

39)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Fiscal_policy/Articles/2010-08-16-Government-draft-2011-budget.html

나. 에너지 정책

-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 Energie-und Klimafonds)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지원을 강조함
 - (수입)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원전연료세와 탄소배출권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나, 2011년 원전폐쇄 결의 후 탄소배출권 수익금으로만 운용
 -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2013년 약 20억유로의 수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됨
 - (지출)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연구, 재생에너지원 및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등을 위해 사용
 -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에 약 2억유로, CO2 감축 건물개조 프로그램(CO2-Gebäudesanierungsprogramm)⁴⁰⁾에 15억유로를 지출할 예정

<표 IV-11>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2 (추정치)	2013 (정부안)	2013 (확정)	중기재정계획		
				2014	2015	2016
기금	7.8	21.8	20.5	24.0	25.0	26.0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Finanzplan des Bundes 2012 bis 2016*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Bundeshaushaltsplan 2013, 2012.12

40) 건물(주택) 소유주가 기존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축 시, 저금리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V. 영국

- FY2013-14: 2013년 4월 ~ 2014년 3월
-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⁴¹⁾, 2012.12.5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2.5
- 환율: 1파운드 = 약 1,785.4원 (2012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2조 2,338억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66.6%(우리나라 110.3%)
- 인구: 6,274만명(2011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41)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을 대체하여 2011년부터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Report)와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보고서(Economic and Fiscal Outlook)를 함께 발표함. 이하 예산기조 및 예산안 내용 등은 가을보고서를 기준으로 함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지속되는 유로존의 위기와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2013년 경제 성장률을 당초('12.3월) 2.0%에서 1.2%로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3-14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는 GDP 대비 6.1%로 전년 대비 1.0%p 증가
- (국가채무) 2014년 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 규모는 GDP 대비 76.8%로 전년 대비 2.1%p 증가

◇ 예산기조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 성장(Growth)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세입 및 지출

- (세입) FY2013-14 경상세입은 GDP 대비 38.3%로 전년보다 0.3%p 증가
- FY2013-14 경상세입은 2012.3월 전망 대비 19억파운드 감소한 6,206억파운드 규모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NICs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짐
- (지출) FY2013-14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1.3%p 증가한 44.4%로 전망
- 2012년 3월 전망 대비 1억파운드 감소한 7,199억파운드 규모로 FY2012-13보다 456억파운드(6.8%)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영국 의회는 FY2011-12부터 FY2015-16까지 총 4,31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FY2013-14에 8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이 중 590억파운드가 지출삭감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
- (경제성장) 영국은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FY2012-13~FY2014-15까지 약 55억파운드 규모의 capital package를 시행할 예정
- 학교, 과학, 도로, 주택 등의 부문에 집중 투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 3. 21	FY2012-13 예산안	201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2. 3. 29	2012년 재정법안(Finance Bill) 제출	
2012. 4. 19	FY2012-13 본세출 예산안	
2012. 4. 23	인프라투자 비용 검토 보고서	
2012. 7. 12	FY2010-11 결산요약 보고서	
2012. 7. 12	예산책임청(OBR), 재정지속가능 보고서	
2012. 10. 31	감사 완료된 FY2010-11 통합결산보고서	201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2. 12. 5	FY2012-13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12. 12. 5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 전망보고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12년 경제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0.9%p 하락한 $\Delta 0.1\%$ 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3년에는 1.2%의 성장을 예측
 - 2013년 이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무역이익 증대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
 - 이후 2014년 2.0%~2017년 2.8%의 성장세 예측

<표 V-1> 2012년 3월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실적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안 (2012.03)	2.1	0.8	0.8	2.0	2.7	3.0	3.0	-
가을보고서 (2012.12)	-	0.9	-0.1	1.2	2.0	2.3	2.7	2.8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3)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2년 2.8%, 2013년 2.5%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목표치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CPI는 2011년 실적인 4.5% 대비 2012년 2.8%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에는 2.5%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실업) 2012-13년 실업률은 2012년 8.0%(3월 대비 0.7%p 감소), 2013년 8.2%(3월 대비 0.4%p 감소)로 2012 예산안 대비 실업률 하향 조정
 - 전반적으로 낮아진 성장을 반영하여 2013년까지는 실업률이 상승하다가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17년 말에는 6.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표 V-2> 영국 경제 전망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0.9	-0.1	1.2	2.0	2.3	2.7	2.8
- 가계소비	-0.9	0.5	0.9	1.6	1.8	2.4	2.9
- 민간투자	2.9	3.8	4.9	8.1	10.2	10.1	9.5
- 정부소비	0.2	2.4	-0.7	-1.4	-1.2	-2.1	-3.0
- 정부투자	-20.4	-9.2	-2.5	4.8	-3.0	-2.6	0.7
- 순무역	1.2	-0.6	0.3	0.2	0.2	0.2	0.1
물가상승률(CPI)	4.5	2.8	2.5	2.2	2.0	2.0	2.0
실업률(ILO)	8.1	8.0	8.2	8.2	8.0	7.6	7.1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나. 재정 전망

- (세입, 세출) FY2017-18까지 경상세입의 GDP 비중은 약 38% 수준을 유지하고, 총관리지출(TME)⁴²⁾은 FY2013-14에 GDP 대비 44.4%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17-18에 GDP의 39.5%를 기록할 전망
 - FY2013-14 경상세입은 GDP 대비 38.3%로 전년보다 약 0.3%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망 기간(~FY2017-18) 동안 38%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FY2013-14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PSNB)은 GDP 대비 6.1%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할 전망이며, FY2017-18에는 GDP 대비 1.6%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FY2013-14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2년 3월 전망치에 비해 약 0.2%p 상승하였으며, FY2016-17은 1.6%p 상승하는 등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조정

42)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로 구성. AME는 고정비적 성격의 지출로 크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DEL은 재량적성격의 지출로 AME와 마찬가지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의 기준지표인 경기조정 경상수지는 FY2013-14에 GDP 대비 2.2% 적자로 예측하였으며 FY2016-17에는 0.4%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
 - FY2012-13 경상수지는 GDP 대비 Δ 5.7%(890억파운드)로 예상되며 FY2017-18에는 0.4%(80억파운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FY2013-14년 GDP 대비 6.2%로 FY2012-13 대비 1.0%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전망기간 동안 재정적자는 꾸준히 감소하며 FY2016-17에 협약 기준인 3% 이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 FY2013-14 재정적자는 2012.3월 예산안 전망치에 비해 약 0.2%p 상승
- (국가채무) 2014.3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GDP 대비 76.8%로 전년보다 2.1%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PSND는 FY2015-16에 GDP 대비 79.9%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세로 전환하여 FY2017-18에는 77.3%를 나타낼 전망
 - 지난 몇 년간 명목 GDP 규모의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전망을 수정한 결과 FY2016-17 기준 PSND(GDP 대비 비율)는 2012.3월 예산안 대비 4.9%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기준인 일반정부 총채무는 FY2013-14에 GDP 대비 93.5%이며, FY2015-16에 최고치인 97.4%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표 V-3>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경상세입	37.3	38.0	38.3	38.1	38.1	38.2	37.9
총관리지출(TME)	45.2	43.1	44.4	43.3	42.2	40.9	39.5
공공부문 순차입	7.9	5.1	6.1	5.2	4.2	2.6	1.6
경기조정 순차입	6.0	3.0	3.8	2.9	2.0	0.9	0.3
기초수지	-5.0	-3.2	-4.2	-3.1	-1.8	-0.2	1.2
경상수지	-6.2	-5.7	-4.6	-3.7	-2.9	-1.4	-0.4
경기조정 경상수지	-4.3	-3.6	-2.2	-1.4	-0.8	0.4	0.9
공공부문 순부채 ¹⁾	66.4	74.7	76.8	79.0	79.9	79.2	77.3
재정적자 ³⁾	7.7	5.2	6.2	5.3	4.3	2.8	1.8
경기조정 재정적자 ²⁾	5.8	3.1	3.9	3.0	2.2	1.0	0.4
국가채무 ³⁾	85.8	90.3	93.5	96.3	97.4	96.6	94.4

주: 1) 3월 말 기준

2)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순차입

3)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총채무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Table B.5에서 발췌

2. 예산기조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Protecting the economy)를 비롯하여 경제성장(Growth)과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달성을 위한 정책 유지
 - Spending Review 기간인 FY2015-16까지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없이 재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만 3월 예산안에 비해 12월 가을보고서에서는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의 GDP 대비 감소 추세전환 시기가 1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 수정
 - (경제성장) 인프라 투자와 기업활동 지원 등 성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구조적 개혁 진행

- 도로, 과학, 학교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55억파운드의 capital package⁴³⁾와 장기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영국 전체의 인프라 투자는 2005~2010년 연간 290억파운드에서 2010~2012년에 연간 330억파운드로 증가
 - 경쟁적인 세제 시스템 구축
 - 2014년 4월부터 법인세 추가 1% 인하(21%)⁴⁴⁾ 및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일시적 투자공제 확대(2년간 25,000파운드→250,000파운드)
 - (공정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인적공제 확대(9,440파운드), 2013.1월 인상예정이었던 연료세 인상 연기 및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 시행
- 가을보고서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의 총재정효과는 FY2013-14 9억 1,000만파운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7-18에는 49억 4,000만파운드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FY2013-14는 조세정책에서 1억 8,000만파운드 절감, 지출정책에서 10억 9,000만파운드 확대
 - FY2016-17과 FY2017-18에는 각각 약 3억파운드, 49억파운드의 재정감축 효과 예상

<표 V-4> 2012년 가을보고서 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조세정책	-870	+180	-2,385	-905	+295	+305
지출정책	+4,840	-1,090	+1,465	0	0	+4,653
총 정책 효과	+3,970	-910	-920	-905	+295	+4,940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Table 1

43) 구체적인 capital package의 내용은 '4.주요 재정정책' 참고

44) 영국은 법인세를 2013.4월부터 24→23%로 1%p 인하 예정임을 Budget 2012에 발표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가을보고서 세입정책으로 FY2013-14에 총 1억 8,000만파운드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세입감소는 대부분 연료세 인상 연기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것으로 FY2013-14에 약 26억파운드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2012년 8월 예정이었던 연료세 인상 계획이 2013년 1월로 연기
 - 소득세법상의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공제(personal allowance)가 FY2013-14에 9,440파운드로 확대
 -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은 스위스와의 협정으로 맺어진 송금세(31억파운드)와 은행세(5억파운드) 등에 기인
 - 은행세(Bank Levy) 세율은 2012년 0.088%에서 2013년 1월부터 0.130% 적용

<표 V-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법인세	0	-10	-415	-785	-875	-875
연간 투자공제 한도 증액	-305	-670	-910	-400	+300	+235
비거주재산세 감면: empty property	0	-10	-55	-50	-30	-5
비거주재산세 감면 확대: 소규모기업	0	-475	+50	0	0	0
소규모기업을 위한 현금주의	0	0	-165	+25	-5	* 1)
북해(North Sea)의 석유와 가스	-10	-60	-120	-175	-145	-75
자산소득세 감면	0	0	0	* 1)	-20	-80
소득공제 확대	0	-1,000	-1,110	-1,110	-660	-580
연료세 인상 연기	-890	-1,640	-1,625	-1,715	-1,420	-1,465
higher rate threshold: index 1% ↑	0	0	+295	+875	+1,105	+1,085
상속세	0	0	0	+15	+30	+35
자본취득세 연간공제한도 1% ↑	0	0	0	+5	+5	+5
스위스로부터의 송금세	+330	+3,120	+610	+920	+180	+150
국세청(HMRC) 조세회피방지	+15	+200	+95	+330	+385	+355
연금: 조세감면 제한	+50	+200	+300	+600	+1,000	+1,125
은행세(Bank Levy)	0	+515	+545	+540	+545	+545
부가가치세	-35	-65	-70	-70	-80	-80
탄소감축서약	-25	-25	-25	0	+30	+65
소득세 감면 한도(cap) 수정	0	0	-80	-60	-65	-65
총 세입정책 효과	-870	+180	-2,385	-905	+295	+305

주: 1) 효과 거의 없음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Table 2.1에서 발췌

-
- OBR의 EFO(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따르면, 경상세입은 2012.3월 전망에 비해
 매해 감소하여 FY2016-17에는 291억파운드 하향 조정된 7,061억파운드로 전망
 - FY2013-14의 총 경상세입은 19억파운드 감소한 6,206억파운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 FY2013-14 세입 전망은 3월 전망에 비해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특히 법인세, 소득세,
 VAT 및 NICs 부분의 감소가 두드러짐
 - 법인세 60억파운드, 소득세(PAYE: Pay as you earn) 41억파운드, VAT 20억
 파운드, NICs 35억파운드 감소
 - 그 외 연료세 16억파운드, 비거주재산세 11억파운드 등 감소
 - 3월 전망 대비 대부분의 세입 항목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
 - 소득세(PAYE: Pay as you earn)와 NICs는 FY2013-14부터 임금 및 임금상승률의
 감소를 반영하여 전망
 - 법인세는 기업들의 수익 감소 및 FY2014-15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1% 감면을 반영
 - VAT는 예상보다 낮은 세입과 앞으로의 소비지출의 감소를 반영하여 전망 하
 향 조정
 - 이밖에도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연료세, 주식거래대금 및 거래양 감소로 인한
 인지세 및 자산세의 감소 등이 전망기간 동안 경상세입의 감소를 가져옴

<표 V-6> 경상세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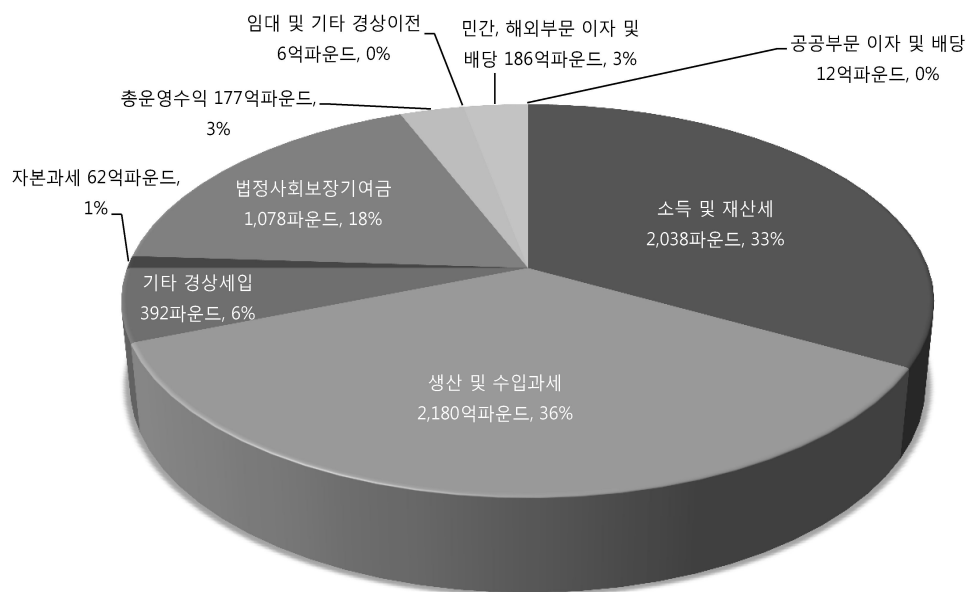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소득세	152.7	154.0	161.6	172.0	181.5	193.9	206.5
pay as you earn	132.1	132.2	137.1	142.2	152.5	162.9	173.8
self assessment	20.3	22.6	23.8	29.4	28.9	30.6	32.2
소득보전세제(negative income tax)	-4.7	-3.9	-3.8	-3.2	-1.8	-0.8	-0.1
NICs(사회보장세)	101.6	104.1	107.8	111.1	117.0	123.5	130.3
VAT	98.1	101.1	104.1	108.3	112.5	116.8	121.5
법인세	43.1	39.8	38.9	38.7	38.7	41.2	42.8
onshore	33.8	34.7	34.3	34.5	35.6	38.0	39.7
offshore	9.2	5.2	4.6	4.3	3.2	3.1	3.1
법인세 세액공제	-0.9	-0.9	-0.9	-0.8	-0.7	-0.7	-0.8
석유세	2.0	2.2	2.1	1.7	1.7	1.5	1.4
연료세	26.8	26.2	26.5	27.1	27.8	29.0	29.9
비주거재산세	25.0	25.7	26.8	28.2	29.6	30.6	31.2
지방세(Council tax)	26.0	26.3	27.2	28.0	28.8	29.8	30.7
VAT 환급(refunds)	14.0	14.0	14.6	14.6	14.6	14.4	14.2
자본취득세	4.3	3.7	4.6	5.4	6.0	6.7	7.4
상속세	2.9	3.1	3.3	3.5	3.6	3.8	4.0
인지세	6.1	6.5	7.5	8.6	9.7	10.9	12.2
인지세(on shares)	2.8	2.4	2.7	2.8	2.9	3.0	3.2
담배세	9.9	9.8	9.9	10.0	10.2	10.3	10.6
산업용주정(spirits)세	2.9	2.8	2.8	3.0	3.2	3.3	3.5
와인세	3.4	3.5	3.6	3.9	4.3	4.6	5.0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8	3.8	3.7	3.8	3.9	3.9	3.9
항공여객세	2.6	2.9	2.9	3.1	3.3	3.6	3.9
보험료세	3.0	3.1	3.2	3.2	3.3	3.3	3.4
기후변화세	0.7	0.7	1.4	1.8	2.4	2.4	2.4
기타 국세(HMRC taxes)	5.9	6.0	6.4	6.7	7.1	7.3	7.5
자동차세	5.9	5.9	5.9	5.8	5.8	5.7	5.6
은행세(bank levy)	1.8	1.8	2.8	2.9	2.8	2.8	2.8
Licence fee receipts	3.1	3.1	3.2	3.2	3.2	3.2	3.3
환경부담금	0.5	2.0	2.3	2.8	3.3	3.8	4.2
스위스자본세	0.0	0.3	2.9	0.0	0.0	0.0	0.0
EU ETS 경매세	0.0	0.4	0.9	0.9	0.9	1.0	1.0
기타 조세	5.9	6.7	6.9	7.1	6.9	6.8	6.7
National Accounts taxes	549.3	557.2	581.6	604.2	632.6	665.7	698.3
EU 부담금 공제	-5.2	-5.3	-5.2	-5.5	-5.7	-5.9	-6.1
이자 및 배당	2.9	17.6	18.9	17.9	17.1	18.0	13.1
총운영수지	23.5	25.2	26.2	27.4	28.4	29.4	30.0
기타수입	-0.9	-0.8	-0.9	-0.9	-1.0	-1.1	-1.1
총 경상수입	569.5	593.8	620.6	643.0	671.4	706.1	734.2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0.9	2.3	-1.9	-15.4	-20.6	-29.1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Table 4.6

- FY2013-14 일반정부 기준의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및 수입과세 36% (2,180억파운드), 소득 및 재산세 33%(2,038억파운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밖에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8%(1,078억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6%(392억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V-1] FY2013-14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 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 December, Table 2.29

나. 세출

- 가을보고서의 지출정책으로 FY2013-14에 10억 9,0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FY2013-14의 경우 경상지출에서 11억 7,000만파운드의 재정절감이 예상되며, 자본지출은 약 22억 6,000만파운드 확대
 - 부처별 지출한도(DEL)를 FY2013-14에 1%(9억 8,000만파운드), FY2014-15 2%(24억 파운드) 감축할 계획
 - 인프라 분야로의 추가 투자 및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재설정

- FY2015-16 이후 전망기간은 지출감축비율 0.7%를 가정하여 FY2015-16 65억파운드, FY2016-17 72억파운드, FY2017-18에는 78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절감 예상

<표 V-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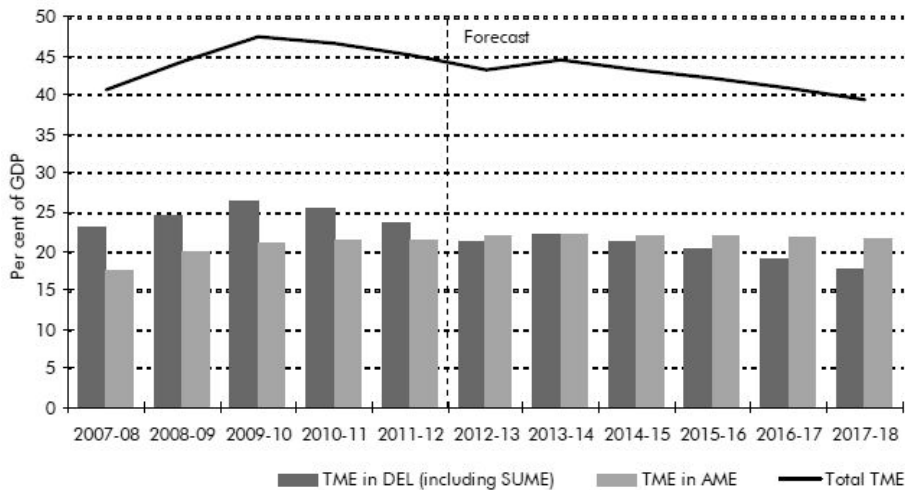
(단위: 백만파운드)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부처별 지출 감축	0	+980	+2,400	+2,400	+2,400	+2,400
Special Reserve	+650	0	0	0	0	0
공적개발원조 축소	+215	+250	+430	+515	+615	+870
지방세 동결	0	-270	-270	0	0	0
2017-18 재정건전화	0	0	0	0	0	+4,635
자본지출 패키지	-70	-2,340	-3,045	-	-	-
4G spectrum sale	+3,500	0	0	0	0	0
고급 TV 세금 감면	0	-5	-25	-45	-60	-70
자동차부문 2012-13 지출감소분	+555	0	0	0	0	0
근로자선택복지 및 세금감면	0	+505	+1,430	+2,280	+2,445	+2,555
아동세제혜택: 1% ↑	0	0	+175	+285	+310	+330
주택수당: 1% ↑	0	0	+105	+225	+245	+260
통합급여: 1% ↑	0	0	+170	+640	+1,000	+1,235
대출 이차지원 확대	-10	-95	-90	-20	0	0
신생기업수당	+5	-10	0	0	0	0
세금감면	+5	+80	+520	+310	+190	+90
국세청(HMRC) 투자	-10	-80	-25	0	0	0
Gift Aid Small Donation 제도	0	-10	-15	-10	-20	-30
총 지출정책 효과	+4,840	-1,090	+1,465	0	0	+4,635

주: 1) 이탤릭체는 2015-16, 2016-17, 2017-18 기간동안 TME 가정에 따른 차입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Table 2.1에서 발췌

- FY2013-14의 총관리지출(TME)은 2012.3월 예산안 전망보다 1억파운드 감소한 7,199억 파운드 규모로 예상되며 이는 FY2012-13 대비 456억파운드(6.8%) 증가한 수치
 - OBR은 3월 전망 대비 소매물가지수(RPI; retail price index) 및 평균임금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
 - FY2012-13에 비해 경상지출 중 부처별지출한도(DEL)는 13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은 125억파운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지출은 이후 전망기간 동안 480~490억파운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FY2013-14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은 전년보다 약 1.3%p 증가한 4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총관리지출(TME)의 증가는 대체로 경상지출 중 연간관리지출(AME) 증가에 기인하며, 전망기간 동안 연간관리지출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그림 V-2] 참고)
 - 다만 FY2014-15부터 GDP 대비 경상 및 자본지출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총관리지출의 비율이 줄어들어 FY2017-18에는 FY2013-14보다 4.9%p 감소한 39.5%로 전망

[그림 V-2] 총관리지출(TME)의 구성 변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chart 4.4

<표 V-8> 총관리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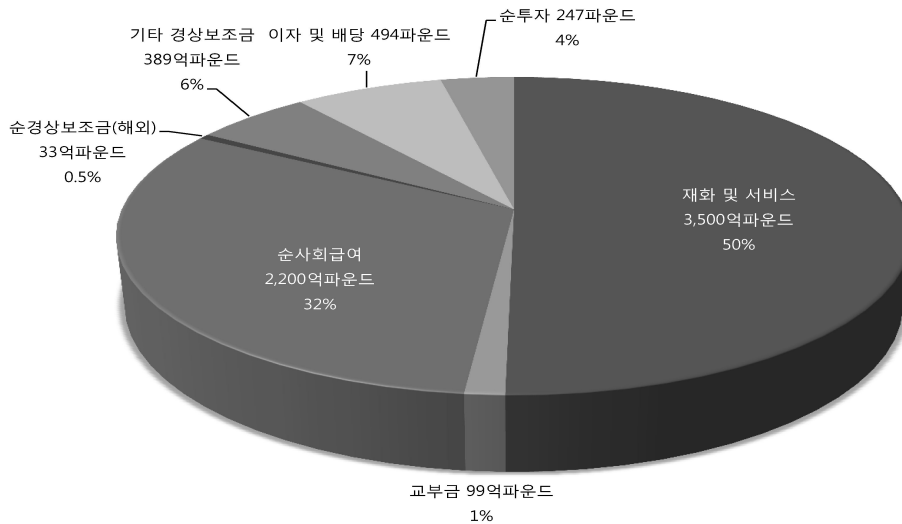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경상지출							
자원 DEL	322.6	322.4	321.1	317.6	318.7	313.7	306.7
자원 AME	320.5	338.3	350.8	363.9	378.6	393.2	409.5
사회보장급여	174.9	182.6	179.8	183.5	187.9	192.3	196.6
세액공제	27.2	27.8	27.9	28.6	30.5	32.5	34.1
순공공서비스연금	8.0	11.0	11.3	12.8	14.0	15.0	16.3
국가복권	1.1	1.1	1.2	1.2	1.3	1.3	1.3
BBC 내국 서비스	3.8	3.6	3.4	3.7	3.7	3.8	3.9
금융시장 개입 관련 수수료	-2.0	-0.6	-0.3	-0.2	0.0	0.0	0.0
기타부처지출	0.1	1.7	1.3	1.2	1.2	1.2	1.2
EU분담금	5.9	7.3	6.6	7.3	6.6	5.8	6.0
지방재정지출	21.6	23.2	36.0	37.8	39.2	40.6	42.7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47.1	47.1	48.6	51.8	56.6	61.6	67.1
감가상각	16.0	17.0	17.7	18.4	19.1	19.8	20.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1.8	11.7	12.5	12.5	12.5	12.3	12.0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5.5	5.0	4.7	4.7	4.7	4.8	5.0
환경부담금	0.5	1.3	1.7	2.1	2.8	3.6	4.3
기타 회계 조정	-1.1	-1.4	-1.6	-1.5	-1.4	-1.3	-1.5
공공부문 경상지출	643.1	660.7	671.9	681.5	697.4	706.9	716.2
자본지출							
자본 DEL	34.8	2.3	34.3	36.2	33.8	34.3	35.2
자본 AME	13.0	11.3	13.7	13.3	13.6	13.9	14.1
국가복권	0.4	0.5	0.5	0.6	0.6	0.6	0.6
기타 자본지출	-7.6	-1.5	1.1	1.1	0.9	0.8	1.1
지방재정 지출	16.0	6.2	4.8	4.9	5.3	5.6	5.4
공기업 지출	6.8	7.8	7.3	6.9	6.8	6.9	6.9
회계 조정	-2.5	-1.7	-0.1	-0.1	-0.1	0.0	0.0
공공부문 총투자	47.8	13.7	48.0	49.5	47.3	48.3	49.2
감가상각 공제	-21.1	-22.2	23.1	-23.9	-24.7	25.5	-26.4
공공부문 순투자	26.7	-8.5	24.9	25.6	22.6	22.7	22.9
총관리지출	690.9	674.3	719.9	731.0	744.7	755.1	765.5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5.5	-9.1	-0.1	-2.5	0.7	-1.2	-
총관리지출(GDP 대비 %)	-	43.1	44.4	43.3	42.2	40.9	39.5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Table 4.18

- FY2013-14의 일반정부 기준의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지출 중 재화 및 서비스(3,500억 파운드, 50.3%)과 순사회급여(2,200억파운드, 31.6%) 부문의 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본지출인 순투자 규모는 247억파운드로 전체 지출의 3.5%에 불과

[그림 V-3] FY2013-14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지출 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 December, Table 2.29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영국 의회는 FY2011-12부터 FY2015-16까지 총 4,31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 추진
 - FY2013-14에 8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절감 예상
 - 840억파운드 중 590억파운드는 지출삭감에서, 260억파운드는 세수확대를 통해 달성할 계획
 -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1-12에 약 56% 수준이었으나 FY2015-16에 약 7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지출에 중점을 둔 재정건전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OECD 및 IMF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책 방향

<표 V-9>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재정건전화 총규모	41	69	84	106	131
지출	23	48	59	81	104
세입	18	21	26	26	27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56	70	70	76	79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2(2012.12), Table 1.4에서 발췌

-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⁴⁵⁾인 5년 이내 경기조정 경상수지 균형달성 가능
-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기준시점인 FY2016-17에 경기조정 경상수지가 GDP 대비 0.4%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FY2017-18은 0.9%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보조 목표인 공공부문 순부채(PSND)는 2012.3월 예산안 당시 FY2015-16에 감소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12월 수정된 전망에서는 1년 미뤄진 FY2016-17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

<표 V-10>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변화

(단위: GDP 대비 %)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경기조정경상수지							
3월	-4.6	-4.2	-2.7	-1.5	-0.7	0.5	
12월	-4.3	-3.6	-2.2	-1.4	-0.8	0.4	0.9
공공부문 순부채							
3월	67.3	71.9	75.0	76.3	76.0	74.3	
12월	66.4	74.7	76.8	79.0	79.9	79.2	77.3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Table 5.1 발췌

45)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는 2010.5월 연립정부 수립 이후 긴급예산안(2010.6)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 책임 및 감사법 2011(2011.3월 승인)의 규정에 의거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명시되어 있음.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준 목표 : 향후 5년 이내에 경기조정 경상수지(cyclically adjusted current balance) 균형 달성
- 보조 목표 : FY2015-16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PSND)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함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영국은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FY2012-13부터 FY2014-15까지 약 55억파운드 규모의 capital package를 시행할 전망
 - (학교) 잉글랜드 지역의 학교에 9억 8,000만파운드 추가 투자
 - 100개의 무상학교와 더 나은 학교의 확장을 위한 투자 포함
 - (과학)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기술혁신 및 R&D를 위한 시설지원에 추가 6억 파운드 투입
 - (도로) 정부는 국가 도로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15억파운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0억파운드를 이번 Spending Review 기간에 투입
 - (주택) 서민 주거안정 및 첫주택마련에 대한 지원 투자 확대
 - 주택첫구입자들의 구입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FirstBuy equity loan 제도에 2억 8,000만파운드 지원
 - 저가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me Programme)에 3억파운드를 투자하여 15,000개의 저가주택을 지원하고 채무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지원을 확대

<표 V-11> Capital Package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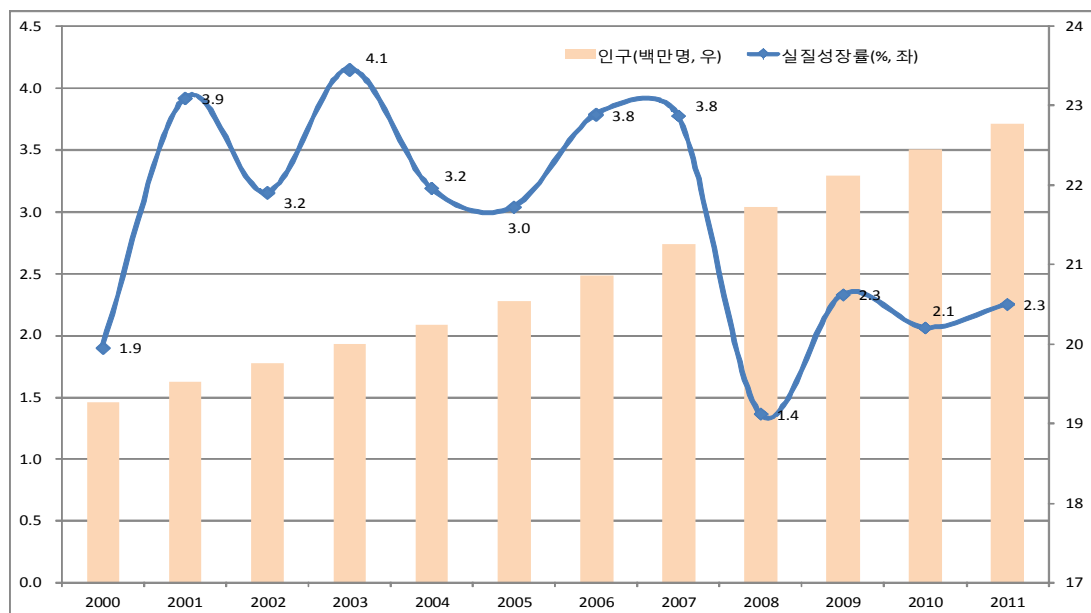
(단위: 백만파운드)

	2012-13	2013-14	2014-15
Transport	-5	-565	-710
Housing and Local Infrastructure	-50	-580	-560
Upfront Infrastructure Fund	0	-190	-380
Regional Growth and Business	0	-195	-545
Exports	0	-400	-390
Science and Innovation	-10	-410	-500
Schools	0	-275	-895
Further Education and Skills	-5	-290	-25
Total CAPITAL PACKAGE	-70	-2,905	-4,005
financial transactions	0	-460	-860
funded from existing allocations	0	-105	-85
New Funding	-70	-2,340	-3,045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2012.12), Table 2.7 발췌

VI. 호주

- FY2012-13: 2012년 7월 ~ 2013년 6월
- 출처:
 - Budget Overview 2012.5.8
 - Budget Paper No.1 ~ No. 2 2012-13, 2012.5.8
 - Final Budget Outcome 2011-12, 2012.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환율: 1호주달러 = 약 1166.7원 (2012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1년 경상 GDP 9,576억 7,000만달러 (우리나라 0.64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1년 기준 42.3% (우리나라 110.3%)
- 인구: 2,277만명(2011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하게 성장
- 세계경제여건 둔화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주정부는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

◇ 예산기조: FY2012-13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흑자재정 전환을 목표로 하며 광산 붐의 공유를 중점 기조로 삼음

- 광산 붐(resources boom)의 혜택을 가계·기업과 공유
- 국민장애인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도입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
- 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 노인요양제도(Aged care system) 구축
- 노동 생산성 향상(Building a more productive workforce)
-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생산성 구축

◇ 예산안 내용(세입·세출 내역)

- FY2012-13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준
- FY2012-13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수준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재정흑자 달성을 위하여 FY2012-13 동안 44억호주달러, 2015~2016년까지 총 326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결손금소급공제도(loss carry-back)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시행
- 광산세 수입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증액, 학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 지원, 부가수당(Supplementary Allowance) 지원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2.4.20	노인요양제도 개혁안 발표	2012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2.4.24	2012년 1사분기 CPI 발표	
2012.5.08	FY2012-13 예산안 발표	
2012.7.25	2012년 2사분기 CPI 발표	
2012.7.23	PBO (의회예산처) 운영 개시	201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2.8.28	탄소배출제 연동 발표	
2012.9.24	FY2011-12 결산보고서 발표	
2012.10.8	미래펀드 예산처리 보고서 발표	
2012.11.27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발표	2013년 2월 제2호 재정동향
2013.1.31	2012년 조세지출 보고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FY2012-13 호주 경제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견고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성장) FY2012-13 실질 경제성장률은 3%로 예측되며, 이는 5월 발표된 예산안(Budget)에 비해 0.25%p 하락한 수치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주요 수출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경상 성장률은 예산안에 비해 1.0%p 하락한 4%로 전망
 - (고용) FY2012-13 실업률은 5.5%로 FY2011-12에 비해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세계 주요국의 높은 실업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산안보다 소폭 하락한 3%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

<표 VI-1> 주요 경제변수

(단위: %)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경제성장률	3	3.25	3	3	3	3	3	3	3
고용률	0.5	1.25	1	1.5	1.25	1.5	1.5	1.5	1.5
실업률	5.25	5.5	5.5	5.5	5.5	5	5	5	5
소비자물가지수(CPI)	1.25	3.25	3	2.5	2.25	2.5	2.5	2.5	2.5
경상성장률	5.5	5	4	5.25	5.5	5.25	5.25	5.25	5.25

주: 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자료: Budget 2012-13, 2012.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나. 재정 전망

- 세계경제 여건 둔화와 그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FY2012-13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함
 - (재정수입)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의 재정수입은 3,737억호주달러로 2011~2012년 실적 대비 356억호주달러(10.5%) 증가
 -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3,750억호주달러(GDP 대비 24.5%)로 예산안에 비해 13억호주달러(0.3%) 감소함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12억호주달러로 예산안의 25억호주달러에 비해 50% 이상 감소함
 - (예산수지) 예산수지는 11억호주달러로 예산안의 15억호주달러보다 줄어들었으나 흑자상태는 유지함
 - (순채무) FY2012-13의 순채무는 예산안 예측보다 다소 많은 1,440억호주달러(GDP 대비 9.4%)로 전망
 - 예산안 전망보다 채무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은 CGS(Common Wealth Government Securities)의 이자율 인하에 의한 주식의 시장가치 증가와 CGS의 발행증가에 기인
 - 순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점차 하락하여 2015~2016년 7.7%로 전망, 이는 2016년 G7국가의 평균 순채무(GDP 대비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표 V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11-12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¹⁾	338.1	376.1	373.7	402.2	403.2	424.8	421.9	449.6	446.4
GDP 대비 비율	23.0	24.2	24.4	24.6	25	24.7	24.8	24.8	24.9
재정지출(Expenses) ¹⁾	377.7	376.3	375	398.5	397.9	416.4	413.7	439	435.8
GDP 대비 비율	25.7	24.3	24.5	24.4	24.7	24.2	24.3	24.2	24.3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44.5	2.5	1.2	2.6	4.3	7	6.9	9.5	9.8
GDP 대비 비율	-3.0	0.2	0.1	0.2	0.3	0.4	0.4	0.5	0.5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43.7	1.5	1.1	2	2.2	5.3	3.3	7.5	6.4
GDP 대비 비율	-3.0	0.1	0.1	0.1	0.1	0.3	0.2	0.4	0.4
순채무(Net debt)	147.3	143.3	144.0	144.9	144.6	140.1	144.3	131.6	137.7
GDP 대비 비율	10.0	9.2	9.4	8.9	9.0	8.1	8.5	7.3	7.7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2012-13, 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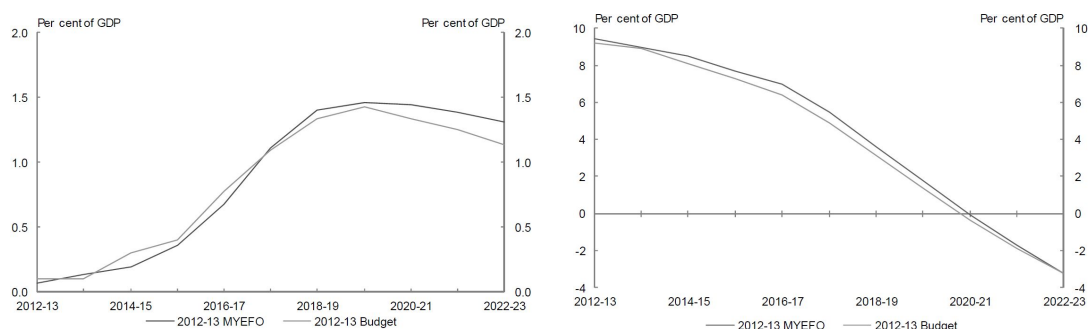
Final Budget Outcome 2011-12, 2012.9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호주정부는 FY2008-09부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안된 중기 재정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흑자재정 달성을 위한 추가적 조치 시행
 - (중기재정전략 유지) ① 예산 흑자 달성, ② FY2007-08(GDP 대비 23.5%)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을 유지, ③ 중기적(medium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 (추가적 조치) 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와 재정흑자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GDP 대비 세수 비중은 평균 2007-08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현금징수액(tax receipts)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
 - GDP 대비 1%의 재정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2%로 유지하며 흑자 증가를 위해 노력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예산수지는 FY2017-18에 GDP 대비 1%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는 2011-12 10% 수준에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하락하여 FY2020-21에는 0%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림 VI-1] FY2022-23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2. FY2012-13 예산기조

- FY2012-13년도 예산은 기존 계획대로 흑자재정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며 광산 붐의 공유를 중점 기조로 삼음
 - 광산 붐(resources boom)의 혜택을 가계·기업과 공유
 - 2013년 7월부터 가족세제혜택A(Family Tax Benefit Part A)에 18억호주달러 지원
 - 2013년 3월부터 실업자, 학생 및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부가수당(Supplementary Allowance)이 지급되며 11억호주달러가 지출될 예정
 - 학자녀보너스(Schoolkids Bonus)로 향후 5년간 21억호주달러 투자
 - 2012년 7월부터 면세기준점을 6,000호주달러에서 18,200호주달러로 세배 이상 증가
 - 국민장애인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도입
 - 국민장애인보험 도입을 위해 향후 4년간 10억호주달러가 지출될 예정이며, 2013년 7월부터 1만명, 2014년 중순까지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 살리기
 - 기업이 최근 2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손실을 소급하여 상계받을 수 있도록 허용
 - 2012년 7월부터 소기업들은 일시적인 자산증가에 대해 6,500호주달러까지 비용 상계
- 주요 의료 서비스 투자
 - 치과서비스 개선에 5억 1,500만호주달러 투자
 - 76개 보건인프라 프로젝트에 4억 7,500만호주달러 할당
 - 2012-13년도에 610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2007-08년 대비 서비스 수준 37% 향상
- 노인요양제도(Aged care system) 구축
 - 37억호주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요양개혁 실시
 - 자택요양지원(home care package) 수혜대상을 2012-13년도에 4만명 늘리고, 향후 5년간 10만명 증가시킬 계획
- 노동 생산성 향상(Building a more productive workforce)
 - 연방주정부연석회의(COAG)⁴⁶⁾는 올해 4월에 17억 5,000만호주달러를 국제기술개혁 파트너십 계약에 투자
 - 일자리, 교육, 보육프로그램 분야에 추가적으로 2억 2,500만호주달러가 지원되며, 중장년층 근로자(mature age workers)의 노동력 향상에 1억 100만호주달러 지출
-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생산성 구축
 - 도로·철도·항만에 2013~2014년까지 36억호주달러 지원
 - 도로복구에 연간 3억 5,000만호주달러 투자

46) 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호주는 연방과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조율이 필요한 법률적 또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호주정부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출처: 호주의 재정제도, 2012.8)

<표 VI-3> FY2012-13부터 FY2015-16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Health				
National Health Reform funding	13,264	14,014	15,537	17,192
National Partnerships	1,848	1,952	1,353	1,428
Education				
National Schools SPP	11,871	12,801	13,761	14,784
National Partnerships	1,649	822	545	951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SPP	1,389	1,415	1,443	1,471
National Partnerships	317	355	415	377
Community services				
National Disability SPP Partnerships	1,264	1,332	1,410	1,484
National Partnerships	964	1,054	503	523
Affordable housing				
National Affordable Housing SPP	1,265	1,288	1,312	1,337
National Partnerships	542	627	541	420
Infrastructure				
National Partnerships	3,570	5,459	3,671	3,672
Environment				
National Partnerships	572	340	326	304
Contingent payments				
National Partnerships	99	93	51	1
Other				
National Partnerships ¹⁾	1,610	2,547	2,625	2,723
Total payments for specific purposes	40,223	44,100	43,493	46,667

주: 1) 지방정부지원금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FY2012-13 예산안(Budget)의 총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준인 3,761억 호주달러(GDP 대비 24.2%)로 전망
 - 조세수입은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력이 회복되어 전년 대비 12.1%로 크게 증가하며, GDP 대비 22.9% 수준
 - 모든 세금수입이 2011-12년도 대비 증가하며, 특히 자원세 수입의 상승이 두드러짐(302%)
 - 세외수입은 FY2011-12 대비 7.4% 증가된 214억호주달러로 전망
 - 비금융 자산 매각수입 및 미래기금(Future Fund)에 의한 이자 수익 증가, 공기업(Government Business Enterprises) 배당 증가

<표 VI-4> FY2012-13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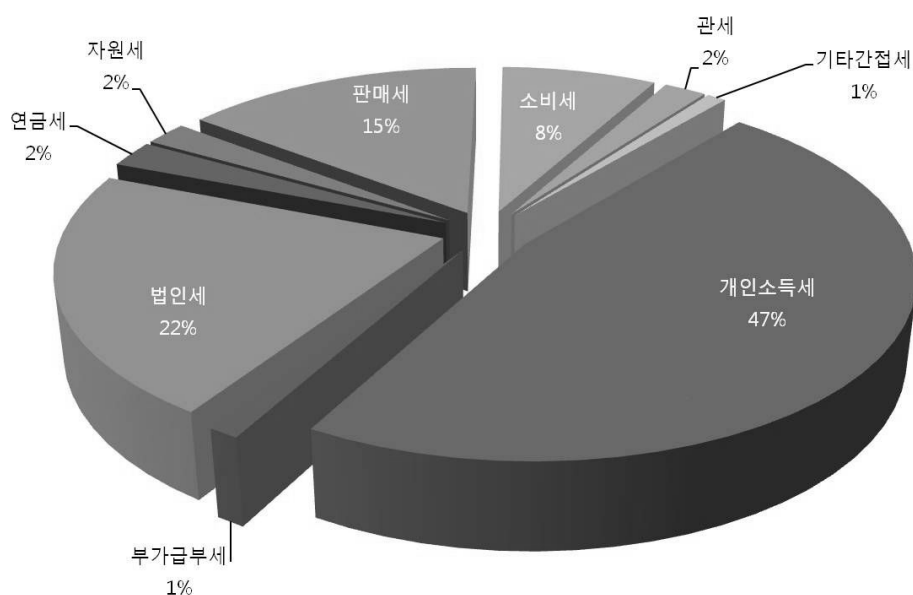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 재정수입	309,890	336,418	376,071	402,197	424,830	449,559
GDP 대비 비율	22.1	22.8	24.2	24.6	24.7	24.8
- 조세수입	289,005	316,454	354,626	380,727	403,278	427,160
GDP 대비 비율	20.6	21.4	22.9	23.3	23.4	23.5
- 세외수입	20,885	19,964	21,445	21,470	21,552	22,400
GDP 대비 비율	1.5	1.4	1.4	1.3	1.3	1.2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 1 2012-13, 2012.5

[그림 VI-2] FY2012-13 예산안의 재정수입 내역



<표 VI-5> FY2012-13 예산안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1-12	2012-13	2013-14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16,454	354,626	380,727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51,230	163,050	178,800
판매세(Total sales taxes)	48,960	51,716	54,524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540	3,900	4,390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7,390	8,250	9,220
법인세(Company tax)	67,950	75,032	77,901
자원세(Resource rent taxes)	1,840	7,410	8,350
석유관련소비세(Fuel excise)	16,910	17,790	17,960
기타소비세(other excise)	8,950	9,095	8,703
관세(Total customs duty)	6,940	7,370	8,570
기타간접세(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437	440	436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19,964	21,445	21,470
총재정수입(Total Revenue)	336,418	376,071	402,197

자료: Budget Paper No. 1 2012-13, 2012.5

-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의 재정수입은 예산안 대비 23억호주달러 감소를 전망
 - 조세수입은 FY2011-12 예산안(Budget)에 비해 25억호주달러 감소된 3,520억호주달러로 전망되며, 특히 자원세 수입의 하락이 두드러짐
 - 세외수입은 예산안에 비해 2억호주달러 증가한 216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6>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재정수입(Total Revenue)	338,109	373,739	403,161	421,871	446,438
GDP 대비 비율	23.0	24.4	25.0	24.8	24.9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 11

<표 VI-7>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FY2012-13		증감	비율
	Budget	MYEFO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54,626	352,092	-2,534	-0.7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ation)	163,050	163,930	880	0.5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3,900	4,040	140	3.6
법인세(Company tax)	75,032	72,982	-2,050	-2.7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8,250	8,250	0	0
자원세(Resource rent taxes)	7,410	5,580	-1,830	-24.7
판매세(Total sales taxes)	51,716	51,960	244	0.5
소비세(Total excise duty revenue)	26,885	26,490	-395	-1.5
관세(Total customs duty)	7,370	7,830	460	6.2
기타간접세(Total other indirect taxation revenue)	3,323	3,339	17	0.5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21,445	21,647	202	0.9
총재정수입(Total Revenue)	376,071	373,739	-2,332	-0.6

주: 1) 미래기금수익(Future Fund earnings)포함

출처: 호주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나. 세출내역

- FY2012-13 예산안(Budget)의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수준인 3,763억호주달러(GDP 대비 24.3%)로 전망
 - CPI를 이용해 계산한 실질 증가율은 -1.8%

<표 VI-8> FY2012-13 예산안과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공공서비스	21.9	22.1	24.4	22.8	23.1	23.6	23.8	24.7	24.7
국방	21.7	21.6	21.6	22.2	22.2	23.1	23.2	24.5	24.6
공공질서 및 안전	4.1	4.0	4.0	3.9	4.0	3.9	4.0	4.0	4.0
교육	29.3	29.6	28.7	29.9	29.3	31.7	30.6	33.8	32.5
보건	61.2	61.0	61.0	64.1	63.2	67.2	66.7	71.1	70.8
사회보장 및 복지	126.9	131.7	131.8	138.2	138.4	143.1	143.1	150.4	150.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6.2	7.3	7.3	9.0	9.0	9.3	9.3	9.6	9.6
문화	3.7	3.6	3.6	3.4	3.4	3.3	3.3	3.3	3.3
에너지·연료	6.6	6.5	6.5	7.8	7.8	8.0	8.0	8.2	8.1
농림수산	3.3	2.6	2.6	2.6	2.6	2.7	2.6	3.1	3.1
광업, 건설·제조	2.1	2.1	2.1	2.1	2.2	2.2	2.3	2.4	2.4
교통·통신	9.2	5.0	5.0	6.7	6.8	7.0	6.4	5.6	6.1
경제(other economic affairs)	9.8	9.3	9.8	9.3	9.2	9.2	8.8	9.2	8.7
기타 지출	67.8	70.0	66.8	76.4	76.6	82.1	81.5	89.1	87.1
총지출	373.7	376.3	375.0	398.5	397.9	416.4	413.7	439.0	435.8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FY2012-13 예산안(Budget)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의 주요 기능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방) 국방비는 전년 대비 약 1억호주달러 감소하였으며, 방위시설에 대한 인수 계획을 연기하고 자본 설비 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향후 4년간 약 55억호주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를 계획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1,317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고,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서는 1,318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증가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및 소득보조지급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
 - (보건) FY2012-13 보건분야 지출은 610억호주달러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의료개혁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른 공공의료 비용의 증가와 인구 성장에 따른 의료보험(Medicare) 지출 확대가 예상
 - (교육) FY2011-12 교육분야 지출은 296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 증가하였고,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서는 287억호주달러로 예산안보다 다소 감소
 - 수요 중심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에 기인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2-13의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73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
 - 클린에너지패키지(Clean Energy Futures package)에 따라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증가
 - (농림수산) 가뭄지원 예산 감소 등의 이유로 5월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 모두 전년 대비 21.2% 감소한 26억호주달러 계상
 - (기타 지출)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700억호주달러로 계상되었으나,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서는 668억호주달러로 감소
 - 각주에 할당되는 보조성 지출(주로 상품 및 용역세가 차지) 증액,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 증가
- FY2012-13 예산안(Budget)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 변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은 증가
-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의 재정지출은 예산안의 재정지출에 비해 12억호주달러 감소 전망

<표 VI-9>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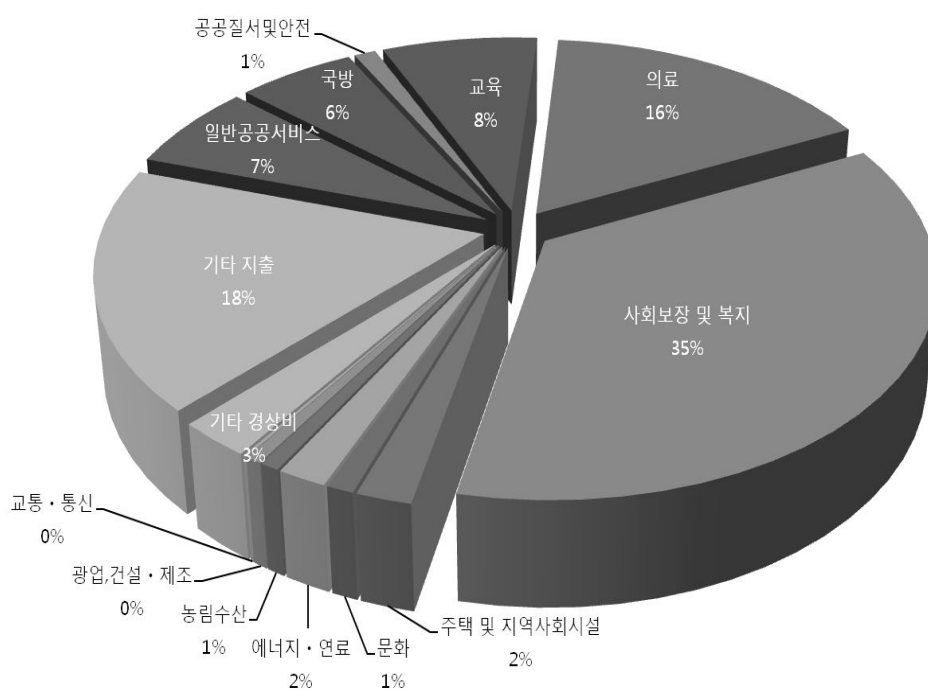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2-13	2013-14	2014-15	2015-16
■ 2012-13 예산안 재정지출	376,273	398,503	416,449	439,044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1,224	-649	-2,744	-3,233
- 정책결정효과 ¹⁾	215	530	596	223
- 거시경제 변수 변동효과	245	576	29	199
- 공공채무이자지급	0	-313	-377	-527
- 프로그램변수 변동효과	1,299	-631	-1,522	-1,742
- 기타변화효과	-2,984	-810	-1,470	-1,386
■ 2012-13 MYEFO 재정지출	375,049	397,854	413,704	435,811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그림 VI-3] FY2012-13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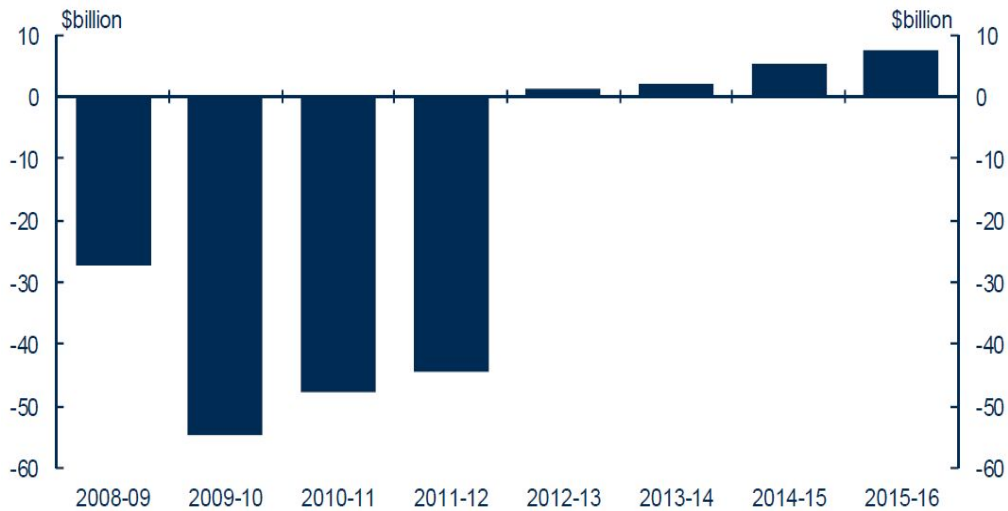


4. 주요 재정정책

가. 재정건전화

- 시의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전략과 예산절감을 통해 FY2012-13에 GDP의 0.1%에 해당하는 15억호주달러 흑자재정 달성 계획
 -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⁴⁷⁾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통화정책의 가능성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흑자재정으로 편성

[그림 VI-4] FY2012-13 흑자재정 달성-예산수지 변화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 FY2012-13 실질지출 증가율은 예산안(Budget)에서 -4.3%,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에서는 -4.4%로 전망
 - 반기경제재정보고서에는 예산안 발표 이후 추가된 164억호주달러의 예산절감 계획 반영

47) 지난 5년간 세수감소액은 1500억호주달러로 추정(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표 VI-10>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단위: %)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FY2015-16
BUDGET	실질지출증가율	4.8	-4.3	3.7	2.0	2.9
	평균증가율	1.8				
MYEFO	실질지출증가율	-	-4.4	4.4	1.6	2.7
	평균증가율	-	1.1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출처: FY2012-13 Budget Paper No.1, 2012.5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2-13, 2012.11

- 정부는 재정흑자 달성을 위하여 FY2012-13 동안 44억호주달러, 2015-16년까지 총 326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 법인세 1% 감면계획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47억호주달러의 절감하고, F-35 전투기 도입 계획 연기와 국방 인력 감원 등을 통해 국방예산 54억호주달러 절감
 -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제도 도입을 통해 세금 환급을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4년 동안 20억호주달러 절감
 - ODA사업 확장을 연기함으로써 향후 4년 동안 29억호주달러 절감
 - 이외에 담배 등 면세품의 허용 범위 축소, 육아수당 기준강화, 고액 경영자 퇴직금 (golden handshakes) 납세 변경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이룰 계획

<표 VI-11> 주요 예산절감 계획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Total
	\$m	\$m	\$m	\$m	\$m	\$m
Spreading the benefits of the boom						
Do not proceed with the company tax cut	50.0	316.6	1,232.2	1,596.0	1,561.0	4,755.8
Reprioritising the tax reform agenda						
Do not proceed with standard deduction	0.0	2.5	91.9	600.0	1,400.0	2,094.4
Superannuation - Deferral of higher 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0.0	602.7	745.0	129.5	-17.7	1,459.5
Do not proceed with 50 per cent discount on interest	0.0	7.3	37.2	323.2	555.8	923.5
Tax Breaks for Green Buildings - closure	0.8	4.2	14.2	104.0	282.0	405.2
Improving fairness in the tax system						
Further reform of living-away-from-home allowances and benefits	0.0	47.1	212.2	347.6	394.4	1,001.3
Superannuation - Reduction of higher tax concession for contributions of very high income earners	0.0	-15.6	174.3	332.0	455.9	946.5
Changes to the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	0.0	0.0	115.0	125.0	130.0	370.0
Better targeting of the 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 tax offset	17.1	14.7	49.7	54.9	60.0	196.4
Duty free allowances - cigarettes and tobacco	0.0	115.0	150.0	160.0	175.0	600.0
Compliance measures						
GST - compliance program - two year extension	0.0	0.0	0.0	228.6	203.5	432.1
Defence						
Defence - Efficiencies and reprogramming	0.0	965.7	1,625.9	1,137.5	1,703.5	5,432.5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deferring Australia's growth target	0.0	447.2	782.6	823.4	866.7	2,920.0
Better targeting spending						
Parenting Payment - changed eligibility for 1 July 2006 grandfathered recipients	0.0	96.9	204.7	159.3	224.9	685.8
Family Tax Benefit Part A - change to age of eligibility	0.0	46.4	103.5	104.6	106.4	360.9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price changes	3.6	25.9	24.4	25.0	25.7	104.6
Extended Medicare Safety Net - capping benefits including for items with excessive fees	0.0	8.7	24.9	29.1	33.8	96.5
Austr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s Program - better targeting	0.0	59.5	99.8	97.8	96.6	353.6
Portability of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0.0	13.2	36.0	38.1	39.9	127.2
Practice Incentives Program (PIP) – more effective targeting	0.0	1.1	30.9	26.5	24.9	83.5
Other revenue						
Heavy Vehicle Road User Charging	0.0	166.0	172.0	177.0	183.0	698.0
Passenger Movement Charge - increase	0.0	85.0	140.0	175.0	210.0	610.0
Dividend payments from Australian Reinsurance Pool Corporation	0.0	175.0	75.0	75.0	75.0	400.0
Australian Federal Police - Partial Cost Recovery of Airport Policing	0.0	0.0	38.2	39.3	40.5	118.1
Other	143.1	1,231.1	1,717.5	2,073.8	2,263.9	7,429.4
Total saves ^(a)	214.4	4,416.1	7,897.1	8,982.1	11,094.9	32,6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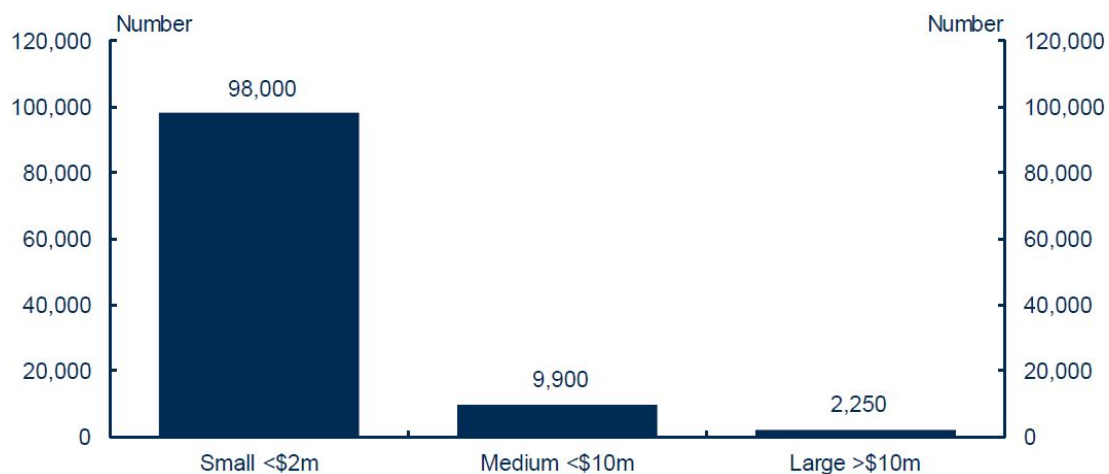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투자 활성화 정책

-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 수입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제도(Loss carry-back) 시행
 - 2012~2013년 최대 100만호주달러의 결손금 소급 공제와 그에 따른 세금 환급을 허용하며 2013-14년부터는 소급기간을 2년으로 연장
 - 결손금소급공제 시행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7조 1,400만호주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11만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그림 VI-5] 결손금소급공제 수혜 예상 기업 수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호주달러에 해당하는 세금 우대조치 시행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간소화할 계획, 이를 통해 약 270만여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6,500호주달러 미만의 자산 구입에 대해 70% 즉시 비용처리 허용
 - 중소기업의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 최대 5,000호주달러까지 가속감가상각 허용

[그림 VI-6] 호주 중소 기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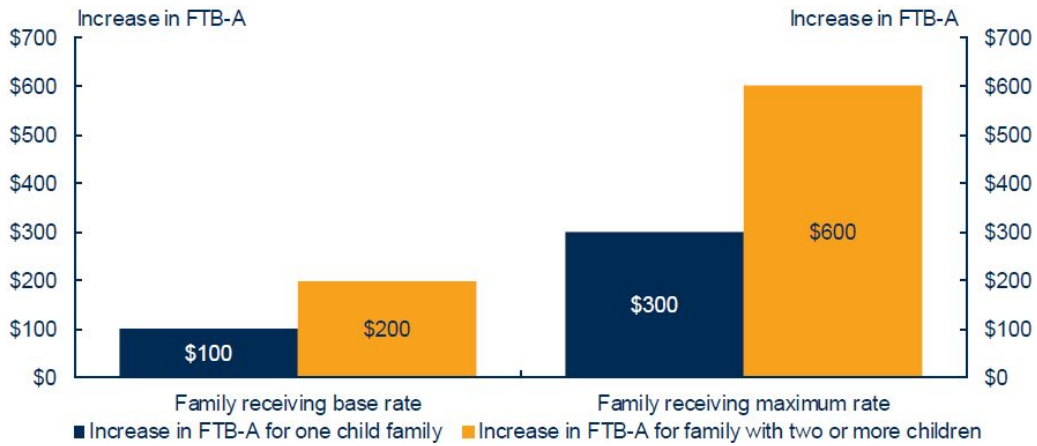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다. 광산세 수입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

□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증액

- 2013년 7월 1일부터 가족세제혜택 A부문에 총 18억호주달러 증액 예정
 - 소득기준에 따라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연간 100~300호주달러,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200~600호주달러 추가 지급
- 약 150만 가정이 가족세제혜택 증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고요율 증가로 110만 가구가 최소 300호주달러의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중 600호주달러 증가 혜택을 받는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69만 가구
 - 기본요율 증가로 최소 100호주달러 증가 혜택을 받는 가정은 46만 가구이며, 이중 자녀 2명 이상인 25만 가구가 200호주달러의 추가 지원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

[그림 VI-7] 2013 가족세제혜택 파트A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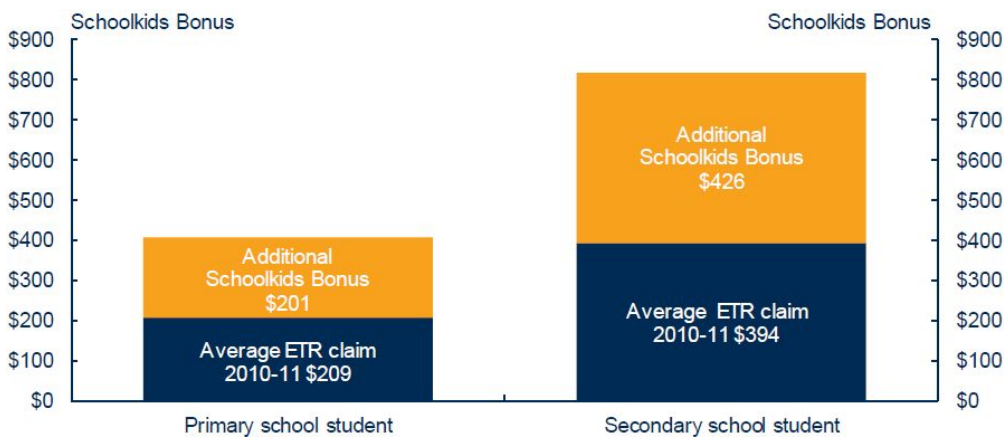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 학자녀 보너스(Schoolkids Bonus) 지원

- 기존의 교육세 환급(ETR; Education Tax Refund)을 대체하여 직접지원의 형식으로 시행되며, 향후 5년간 21억호주달러 투자될 예정
 - 가족세제혜택 파트A 수혜 가정 등을 정책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1명당 연간 410호주달러, 중고등학교 1명당 820호주달러의 학자녀 보너스를 지원
- 기존 제도와 달리 지원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되어 미수혜를 방지하고, 현금 지원을 통해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자금 활용이 가능

[그림 VI-8] 학자녀 보너스 혜택



출처: Budget Overview 2012-13, 2012.5.8

□ 부가수당(Supplementary Allowance) 지원

- 생활비 증가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11억호주달러 증액
 - 실업수당, 청년수당, 양육보조금등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는 독신자에게 연간 최고 210호주달러, 부부에게는 350호주달러의 생활비 수당 지원
 - 또한 지원 요건의 유동자산기준을 2배로 완화시켜, 신규 실업자들의 수당 수혜를 용이하게 변경

<참고 1> 광산 붐 패키지(Spreading the Benefits of the Boom package)

- (1) 2012-13년 예산에 광산 붐 패키지(Spreading the Benefits of the Boom package) 도입,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 수입을 이용하여 자원이용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고 호주전체 경제를 건실히 하고자 함
- 결손금소급공제도(loss carry-back)에 7억호주달러 투입
 - 가족세제혜택A(Family Tax Benefit Part A)에 18억호주달러 지원
 - 실업자, 학생 및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지원 형태의 새로운 부가수당(Supplementary Allowance)이 지원되며 11억호주달러가 지출될 예정

<표 VI-12> 광산 붐 패키지

(단위: 억호주달러)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계
법인세 인하 폐지 (Company tax cut - do not proceed)	50	317	1,232	1,596	1,561	4,756
결손금소급공제 (Loss carry-back)	0	-7	-155	-251	-301	-714
가족세제혜택 파트A (Family Tax Benefit Part A)	0	0	-603	-615	-626	-1,844
생활보조금 (Supplementary Allowance)	0	-153	-299	-306	-313	-1,070
총계	50	157	175	424	321	1,127